

2017년도 정세 평가와 2018년도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북한	1
정치_ ‘수령지위’ 강화와 ‘김정은조국’ 찬가 김인태	6
경제_ ‘자력자강·과학기술발전’에 제재 無力化, 경제희생의 命運을 걸다 변상정·최동철·이철	22
군사_ 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과 협상·대결의 선택기로 고재홍	32
대외_ 핵을 통한 인정투쟁, 파국이냐 구원이냐 김원식	44
대남_ 북한의 대남전략과 남북관계 채규철	56

국제	73
미국_ 트럼프 대통령이 구축하는 ‘미국 우선주의’와 새로운 국제 질서 김영준	77
중국_ 시진핑 ‘일인 천하’의 시대를 향하여 박병광	91
일본_ ‘보통국가’로 한걸음 더 가까이 간 일본 김숙현	106
러시아_ ‘21세기 짜르’ 푸틴시대의 만개와 새로운 국가 도약·퇴영의 길목 서동주	116
유럽_ 유럽 정세의 불확실성 고조 : 극우세력, 지정학 경쟁, 안보 자율성 이수형	127
중동·아프리카_ 혼란과 갈등이 심화되는 중동정세 강안준	136
아세안_ 우리의 외교공간 확장으로서 아세안과 新남방정책 송은희	149

사이버·테러	159
사이버_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하 김정은의 생존 전략 : 사이버공간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의 해법 추구 윤봉한	163
테러_ 극단주의 테러리즘과 세계 그리고 한국 김상걸	176

북한

2017년 평가 : 핵능력 고도화 질주, 제재와 압박 심화 그리고 장기전 대비책 모색

북한은 올해의 중점방향을 ‘7차 당 대회 결정관철’로 설정하였으나, ‘국가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을 통한 경제발전 보다는 핵·미사일 개발 등 핵무력 건설에 치중하였다. 그 결과 11월 29일 ‘화성 15형’ 발사와 함께 대내외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에 맞서 제재 우회 수출, 밀무역, 관광과 국제상품전람회 개최 등의 우회통로 확보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에 이상이 없음을 과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되자, 위기감을 느낀 김정은 정권은 7차 당대회 개최 이후 17개월 만인 올해 10월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전원회의의 주요 내용은 김정은 장기집권 토대 구축과 대북제재·압박에 대한 장기전 준비를 위한 재정비였다. 북한은 전원회의를 통해 70대 이상 원로엘리트 퇴진과 60대 중심의 김정은 측근을 전면 배치하였으며, ‘조성된 정세’(대북제재 강화국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자력갱생과 과학기술발전 노선을 강조하였다. ‘자력갱생’과 ‘과학기술발전’ 전략의 강조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자구책이자 김정은 시대 ‘실리주의’의 일환인 것으로 평가된다.

핵·미사일 개발에 치중하는 북한의 군사전략은 비재래 전력과 재래 전력간의 불균형이라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기 위한 환경조성 차원에서 미국과의 물리적 충돌이나 대남 군사도발로 인한 남

북간 무력충돌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현재 체제의 안전보장과 경제회생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위해 ‘부분적 비핵화’ 전략 즉, 핵무기를 보유한 채 대미 관계정상화를 추구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기반한 북한의 대남전략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고 한국을 ‘핵 인질’로 삼아 궁극적으로 적화통일을 실현하려는 목적하에 추진되고 있다.

핵·미사일 개발에 치중한 2017년 북한의 대외 관계는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강화로 인한 외교관계 단절과 대사추방 등 외교적으로 최악의 고립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북미 대립과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었으며,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일정부분 동참하면서 북중 관계 역시 관계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아가 일본 상공을 지나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해 북일 관계 역시 악화일로로 길로 접어들었다. 다만 러시아가 북핵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모색하면서 북러 관계만이 일정한 소통의 통로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전망 : 지속과 변화의 선택적 기로

북한은 2018년도에 정권수립 70주년을 성공적으로 맞이하고자 대내 자원을 총동원하는 ‘총력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태도변화가 없는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압박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이러한 정세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위기 극복차원에서 내년도의 핵심 키워드로 ‘자력갱생’을 강조할 것이며, 인민들의 노력동원을 위해 정치분야에서 ‘사상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사상전은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에 이어 ‘김정은 조국’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최고지도자와 국가를 일체화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충성과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내년도 북한 정치에서 주목할 부분은 당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이다. 2016년 7기 1차 회의와 2017년 7기 2차 회의에 이어 내년도에 7기 3차 전원회의가 개최된다면 이는 당 의사결정기구의 정상화(주기 개최)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아마도 북

한은 임기 종료를 맞는 최고인민회의 13기 마지막 회의 또는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9.9)를 앞두고 7기 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국가부문에 대한 당적 영도 체계를 확고히 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대북제재의 장기화에 따라 경제난과 사회적 일탈이 증가하여 체제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권력층에 대한 충성도 검증과 충성 강요로 간부들의 불평·불만이 나타날 수도 있다.

북한 경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대북제재의 효과가 내년도에 경제 전반에서 가시화되면서, 경제난 악화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북한의 화성-15형 시험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석유공급 축소 제재가 추가되고, 2017년 제재에 적극 동참한 중국 정부가 추가 제재를 성실히 집행할 경우 북한의 국가경제 운영에서 최악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북한이 2018년에는 국방과학과 군수경제 부문에 집중 투입한 인적·물적 자원을 민수경제 부문으로 전환하고 경제건설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일지 ‘핵·경제 병진노선’의 향배가 주목된다.

북한의 핵 실험과 ICBM 추가 발사는 현재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나, 이미 군사적 수단을 넘어 정치적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자제하거나 필요시 ‘위성발사’ 등으로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추가도발과 관련하여 북한내 화성형 미사일 개발팀과 SLBM 개발팀이 다를 경우 경쟁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시 대응할 수 있는 제2 보복공격 수단이라는 점에서 SLBM의 시험발사가 예상된다. 한편 북한의 대남군사 도발은 한반도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에 의한 상황악화가 북한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대응 역시 2017년처럼 ‘말 폭탄’과 함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통상적인 군사훈련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향후 핵과 미사일을 분리시켜 ICBM급 미사일을 우선 동결·폐기하는 방식으로 북미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는 핵 운반 수단인 ICBM급 미사일의 추가개발 중지 및 폐기협상이 가능하다면 이는 미 본토에 대한 ‘핵 위협의 감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미국이 대북 접근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의 발사유예 선언을 한다면 이는 북미 대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보유

국 인정'이 가능하다고 오판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을 겨냥해 추가도발이나 대남도발로 압박할 경우 한반도 상황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을 것이다.

내년도 남북관계는 북미 관계에 연동될 가능성이 높으며, 북핵 협상 구도를 고려하여 3가지 시나리오를 전망할 수 있다. 첫째는 '일시적 해빙' 시나리오로서, 이는 대미 타격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북한이 미국 주도의 비핵화 협상을 수용하고 대남 관계개선을 모색함으로써 남북관계에 해빙 무드가 도래하는 경우이다. 이는 최선의 시나리오이긴 하나, 북한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불안정의 지속' 시나리오로서, 이는 북한이 대미 타격 능력을 확보한 이후 미국에 핵군축 협상을 요구하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양측간 대립이 지속되는 경우이다. 이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대남 도발을 자행하고 고의적인 위기를 조성하면서도 다른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예봉을 피하고 국면 타개를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유화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양면전술로 인해 남북관계는 도발과 긴장 분위기 속에서 제한적으로 교류·협력이 지속되는 형태의 파행적 운영이 불가피할 것이다. 셋째는 '핵 그림자의 前兆' 시나리오로, 북한의 핵군축 협상 요구를 미국이 수용하고 -물론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암묵적인' 타협을 시도하는 경우이다. 그렇게 되면, 한미동맹이 무력화된 가운데 북한의 대남 위협은 현실화되고 한국 사회에는 암울한 '핵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질 것이다.

아마도 2018년 한 해는 북핵 문제가 파국의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것인가 아니면 그 어떤 구원의 국면으로 전환될 것인가 하는 변곡점에 당면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향후 북한의 선택이 될 것이며, 아마도 내년 신년사 발표 및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전후한 시기에 가시화 될 북한의 선택, 즉 도발인가 평화공세인가 하는 선택이 내년도 북한의 대외정책 전반을 판가름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현재의 고립상태를 벗어나고 국제사회의 공조체제를 흔들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활용한 중재외교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시도들은 만일 그것이 성사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미일 대 북 중립' 대결구도를 고착화 시키고 이를 통해 대북제재에 집중된 국제 공조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최근의 엄중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데서 엿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김정은 정권은 대북압박과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현 정세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내년에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북한의 적극적 대외정책도 어떤 형태로든 빠르게 가시화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내년 한해는 우리에게 한반도의 파국과 구원의 가능성이 교차하는 한 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령지위’ 강화와 ‘김정은조국’ 찬가

김인태

2016년 노동당 7차 대회의 정치적 열기는 2017년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7차 당 대회에서 당 조직을 개편하고 김정은을 당의 최고 수위인 ‘노동당 위원장’에 올립하였다. 그리고 2012년부터 부분적으로 사용하던 ‘최고영도자’ 존칭을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영도자’로 격상시키고 김정은 우상화 사업에 주력하였다. 특히, 부족한 ‘수령이미지’를 선대수령들과 동일시하는 방식으로 형상화하였다. 과거 김일성의 ‘위대한 수령’, 김정일의 ‘위대한 영도자’와 구별시켜 김정은에게는 ‘최고영도자’라는 존칭을 부각시켰고,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김정은의 절대적 지위와 결정적 역할을 부각시켰다. 2016년 하반기부터 북한 전역과 각 부문 단위들에 “우리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라는 구호를 전면 에 배치하였다. 2017년 신년사 발표에서 보여 준 김정은의 모습은 김일성의 모습을 재현하는 이미지 각색의 완성을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이 북한은 2016년 7차 당 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부여된 ‘최고영도자’ 지위에 걸 맞는 수령 이미지 만들기에 당력을 집중시켰다.

2018년은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예년보다 김정은 시대의 정치적 의미에 더 비중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높아가는 체제위기 속에서도 “김일성 민족·김정일조선·김정은조국”을 주제로 한 체제선전에 주력할 것이다.

1. 2017년 평가 : 권력구조 재정비, 체제위기의식 시현

명실상부한 ‘최고영도자’로서의 위상 강화

북한은 김정일 생일 75돌(2.16), 김일성 생일 105돌(4.15),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추대 5돌(4.11)과 같은 정주년 행사를 체제 정당성을 강조하고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독려하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김일성 생일 105돌 기념 열병식(4.15)과 군중시위를 사상 최대 규모로 개최하고,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을 열었다. 그리고 8월에는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과 같은 국제행사도 개최하였다. 군 열병식과 군중시위는 철저히 김정은의 ‘최고영도자’ 위상 강화에 초점을 맞춘 ‘충성 이벤트’로 기획되었다. 김정은을 대신하여 최룡해가 열병식 연설을 맡았고, 모든 군중·병중, 부대 지휘관들이 직접 열병중대의 선두에서 ‘절대충성’과 ‘결사옹위’를 외쳤다. 외국 언론의 시선을 집중시킨 ICBM과 같은 첨단 무기보다는 김정은에 대한 전 군, 전 사회의 충성맹세 의례가 행사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였다. 북한이 창군 85돌(4.25)을 맞아 실시한 ‘인민군 군중 합동타격시위’도 사상 최대의 규모로 진행하였다. 동해 원산지역에서 김정은의 사열과 지휘 하에 육해공 최정예 병력이 무력시위를 하며 4월의 정치적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북한은 4월 15일 ‘태양절’ 계기 평양시 여명거리를 성대하게 준공하였으며, 여명거리 착공 당시 “려명거리 건설은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이라고 선전하였다. 여명거리 조성사업은 7차 당 대회에 맞춰 실시한 200일 전투를 결산하는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불과 1년 만에 70층 높이의 고층 건물을 포함하는 대규모 거리를 완성하였다. 북한은 연초부터 한미군사훈련을 ‘침략위협’으로 규정하고 정세를 긴장시키는가 하면 전략탄도탄 ‘북극성’ 계열 미사일 시험발사로 긴장국면을 고조시켰다. 이러한 와중에 서방 언론들을 대대적으로 초청하여 여명거리 준공이라는 ‘빅 이벤트’(big event)를 과시하였다. 준공 다음 날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연구원 등 공로자들에게 주택을 우선 배정하고, 당·국가 간부들의 방문을 선전함으로써 ‘김정은의 은정과 영도력’을 찬양하였다.

6월에는 일정을 앞당겨 개최한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를 계기로 김정은의 ‘후대사랑’을 칭송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김정은의 수령 이미지 형상화에 가미하였다. 2016년 7차 당 대회가 수령으로서의 김정은 위상을 공식화하는 자리였다면, 2017년 소년단대회는 ‘아버지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전국에서 선발한 핵심계층 자녀들인 소년단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정은은 “백두의 뉘을 이어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 김정은조국의 미래로 장성하라”는 제하의 연설을 통해 수령의 모습을 최대한 부각시켰다.

2016년 7차 당 대회로 김정은 시대를 공식화한 정치적 이벤트는 해를 넘겨 금년 정치행사들까지 이어졌다. 북한은 상반기에 집중된 정치행사들을 활용하여 김정은의 수령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충성 의례를 중시하였다. 하반기에는 모란봉악단·공훈국가합창단 등 권위 있는 선전 역량을 동원하여 평양과 각 지역들에서 우상화 열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올해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과 같은 주요 우상화 계기들과 정치·사회분야의 기본역량을 김정은의 ‘최고영도자’ 위상 강화에 집중시켰다.

반면, 올해는 3대 세습정권의 본성과 취약성이 드러난 해였다. 김정일 생일 75돌을 앞두고 수령 우상화 작업에 집중하는 와중에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에 대한 암살사건이 벌어졌다. 김정일 75돌 생일을 이틀 앞둔 2월 13일 그의 장자(長子)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피살당하였고, 이 사건은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김정남 암살은 장성택 처형과 더불어 독재 권력의 비정함을 보여 준 대표적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김정은의 진면모를 조기에 각인시키는 대표적인 사건인 동시에 김정은 정권의 불안한 장래를 예고하는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한편 당초 ‘백두산위인칭송대회’였다가 국제행사로 성격을 바꾸고 규모를 확대했던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은 사실상 실패작으로 끝났다. 북한은 2016년부터 행사계획을 미리 발표하는 등 대규모 정치행사로 준비하였다. 특히 해외 각 지역에서 ‘준비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성공적 개최를 위한 노력을 경주했지만, 정작 행사에 참여한 해외대표단이나 유명 인사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결국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은 대내행사 수준으로 치러졌으며, 이는 북한의 대외적 고립을 반영하는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한편 북한은 올해 10월 개최한 제7기 2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의 유일지배체제를 재정비하였다. 당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력구조와 역량을 갱신하였다. 2017년 7차 당 대회에서 마련된 권력구조였던 ‘노·장·청’ 엘리트 배합구도를 일신하였다. 당 정치국에서 김기남과 최태복 등 원로들이 대표하던 ‘상징적 구도’를 최룡해와 박광호와 같은 비교적 젊은 인물들이 대표하는 ‘실용적 구조’로 바꾸고, 후계체제 구축기부터 검증해 온 실력가들을 전진 배치하였다. 과거에 비해 당 정무국(구 비서국) 구성원들의 평균연령은 60대로 낮추었다.¹⁾ 이번 인사 조치에서 단연 주목할만한 점은 김여정과 최룡해의 약진이

다. 이제 막 30대에 이른 김여정이 당 중앙위원에 오른지 불과 1년 만에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입성하였다. 김여정의 정치국 입성은 그녀의 막후 지위(김정은의 여동생)를 감안하더라도 초고속 승진임에 틀림이 없다. 김여정은 선전선동부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김정은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반열 또는 그들을 능가하는 위상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김여정이 주도하고 있는 김정은 우상화 사업이 노동당의 핵심과제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룡해의 당내 위상이 오른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최룡해가 7기 2차 전원회의에서 유일지배체제를 지탱하는 핵심 요직인 당 조직지도부장직을 맡았다는 설이 유력해 보인다. 아울러 최룡해는 ‘얼굴마담’격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이어 당과 국가권력의 선두순위로 도약하였다. 미루어 짐작할 때, 노동당의 핵심 직책을 맡아 전보다 훨씬 강화된 위상에 기초하여 김정은의 유일체제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7기 2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유일지배체제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관찰할 필요도 있다. 우선, 이제 막 30세에 접어든 김여정의 정치국 입성을 정상적인 행보로만 보기는 어렵다. 북한 내부 상황이 안정적이고, 권력구조 운영이 정상적이라면, 무리하게 김여정의 정치국 입성을 앞당길 필요가 없다. 어린 나이와 일천한 경륜에 대해 심한 콤플렉스를 느끼고 있는 김정은의 심리를 고려하면 더욱 정상적인 조치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김여정의 정치국 조기 입성은 김여정을 핵심 지위에 조기 투입해야만 하는 불안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일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김정은-김여정의 미숙한 조합이 정치적 혼란과 불안을 추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최룡해의 위상 및 역할 강화는 상대적으로 황병서와 군부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북한이 황병서가 책임지고 있는 군 총정치국에 대한 중앙당의 집중검열을 전개한 동향이 주목받았다. 군부 내 ‘중앙당’으로 불리는 총정치국은 그 동안 막강한 신임과 권한을 누려왔다. 또한 김정일 시기 ‘선군정치’를 주도하는 ‘참모부’의 역할을 수행하며 북한권력의 핵심적 위상과 역할을 차지해 왔다. 김정은 후계자 시절과 집권 초기, 중앙당 부서와 같은 권능을 갖는

1) 7차 당대회 정무국 부위원장(9명)의 평균연령은 75.2세이나 이번에 신규 보충된 인물들을 더한 정무국 부위원장(11명)의 평균연령은 69.5세로 낮아졌다.

기구로 격상되기도 하였다. 이번 사건의 발단으로 알려진 군부 내 부정부패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외화벌이 독점사업 등 경제적 이권을 둘러싼 권력기관 간의 뿌리 깊은 갈등 속에 예견되어 왔다. 따라서 장기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온 총정치국이 ‘당 영도체계 강화’의 타깃으로 전략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향후 황병서와 김원홍 등 북한 군 수뇌부의 지위변동이나 추가적인 처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동시에 이번 조치는 군부 전반에 대한 당적 영도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음으로, 7차 당 대회 이후 약 1년 만에 이루어진 체제 정비 치고는 당 지도부의 변동 폭이 비교적 컸다.²⁾ 불과 1년 만에 당 정치국, 정무국, 중앙군사위원회 인사를 큰 폭으로 교체한 것을 정상적인 조치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2016년 7차 당 대회에서 조직한 당 정치국 성원 30인³⁾ 중 이미 금년 초에 경질당한 김원홍 전 국가보위상을 포함하여 이번 교체 인사까지 더하면 당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구성되었다고만 평가할 수 없다. 한편 7기 2차 전원회의 결과를 통해 앞으로 정치국과 정무국의 기능 강화 및 당 전원회의 기수(期數) 정례화도 예상할 수 있다.

7차 당대회 결정관철 및 핵무력 강화 주력

북한은 2017년의 기본방향을 ‘7차 당대회 결정관철’로 정하고 대내 역량을 총동원하기 위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김정은은 금년 신년사에서 “모두다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가 펼친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따라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가자”고 역설하였다. 또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총력을 집중할 것을 독려하면서 새해 첫 행보를 경제단위로 잡았다. 정초 평양가방공장을 시작으로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류경김치공장, 수산물가공공장 등 경제단위들에 대한 현지지도를 이어가며 경공업부문이 올해 중점 경제정책 방향의

2) 중앙당 부위원장 9명 중 6명(66%), 부장 15명 중 7명(46%)으로 당 정무국의 교체 비율은 약 54%로서 7차 당 대회에 비해 높으며, 정치국위원·후보위원, 당중앙위원·후보위원 당 지도기구의 교체변동 비율도 약 21%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3) 7차 당대회 김정은 시대 당 지도부(정치국, 정무국, 군사위) 구성은 30명으로서, 이는 김일성 시대(6차 당대회) 46명, 김정일 시대(3차 당대표자회) 43명과 비교할 때 적은 숫자이다.

하나임을 시사하였다. 또한 이미 준공한 평양시 여명거리와 세포지구 축산기지에 이어 삼지연지구 혁명성지 조성, 단천발전소 건설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평양시와 일부 선택받은 단위에 역량이 편중됨에 따라 국가 전반의 경제 동력은 부진한 상태다. 경제적 시범대상에 대한 김정은의 현지도와 이에 대한 집중 선전은 국가경제정책의 침체와 부진을 초래하고 악화된 경제 상황을 희석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중점 추진대상에 포함된 우상화 시설이나 경제적 시범대상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계획경제 대상인 기간산업이나 지방단위의 현실은 비관적이다. 더욱이 사상 최악의 대북제재는 국가경제와 민생경제 전반에 비관적 전망을 더 해주고 있다. 결국 2017년에 추진한 당 대회 결정 관철은 경제악화와 핵능력 강화라는 병진노선의 ‘기형적 구도’로 전개되었다.

올해 7차 당대회 결정관철의 실질적인 중점방향은 핵능력 고도화를 우선시하는 군수공업분야였다. 북한은 4월 15일 경축열병식에서 신형 ICBM과 화성-12형과 같은 신무기들을 대거 공개한 이후 단기간 내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다종의 미사일체계 완비를 과시하고, “핵강국·로케트강국” 선전에 매진하였다. 올해 10월까지 김정은의 공개 활동에서 각종 핵·미사일관련 현지도만 15회에 달했으며, 이는 집권 이후 가장 집중적인 행보로 특징지을 수 있다. 특히 지난 9월 3일 핵무기 병기화 사업지도에서 ‘핵무력 완성단계’를 강조한 이후 곧바로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이를 ‘대륙간 탄도로케트 장착용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으로 발표하였고, 김정은은 7기 2차 전원회의 정세보고 등 여러 계기들에서 ‘핵무력 완성의 임박단계’를 거듭 강조하였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전 방위적인 대북 제재조치 등 고조되고 있는 긴장 속에서 75일 간의 도발 휴지기를 거친 다음, 11월 말 화성-15형 시험발사를 강행하였다. 그리고 공화국 정부성명으로 ‘국가핵무력 완성’을 공식 선언하였다.

〈김정은, 2017년 핵·미사일 관련 현지지도 사례(1~11월 기간/ 15회)〉

No	보도일	관련 내용
1	2017.2.13	북극성-2형 시험발사 지도
2	" 3.7	전략군 탄도로켓 발사훈련 지도
3	" 3.19	신형 대출력발동기 지상분출시험 지도
4	" 5.15	화성-12형 시험발사 지도
5	" 5.22	북극성-2형 시험발사 지도
6	" 5.28	지대공 요격미사일 시험발사 지도
7	" 5.30	정밀유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지도
8	" 6.9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지도
9	" 7.5	화성-14형 시험발사 지도
10	" 7.29	화성-14형(2차) 시험발사 지도
11	" 8.30	전략군 중장거리 탄도로켓 발사훈련 지도
12	" 9.3	핵무기 병기화 사업 지도
13	" 9.3	수소탄시험 최종승인 관련 당 정치국 상무위 지도
14	" 9.16	화성-12형 시험발사 지도
15	" 11.29	화성-15형 시험발사 지도

북한이 올해 기본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7차 당대회 결정관철’은 ‘핵무력 강화’에 집중되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포함한 여러 요인들에 의해 7차 당 대회 결정관철에서 경제건설 쪽은 부진하였으며, 특히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추진은 그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해 정치일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계기였던 7차 2기 전원회의에서는 ‘조성된 정세’(대북제재 상황)를 구실로 경제난의 책임을 외부에 돌리면서 당면과제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대외정세 변화 대응과 체제유지 여건 조성 집중

북한은 6차 핵실험을 전후하여 악화되는 대외환경에 민감하게 대응하였다. 올해는 북한의 집중적인 핵능력 고도화 추진에 따라 사상 최초로 한 해에 3회에 걸쳐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물론 그 강도도 갈수록 강화되

었다. 또한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대북정책 기조로 삼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강도 높게 취했다. 북한은 이러한 대외정세 변화, 즉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추세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수비와 공세’를 배합하여 맞대응하였다.

우선 공세적 측면에서, 북한은 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8월 5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강력 반발하여 대미 강경 내용을 담은 ‘공화국 정부성명’을 시작으로 위기를 최대한 끌어 올렸다. 특히 하반기 들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맞서 긴장수위를 고조시키다가 결국 6차 핵실험에 이르렀다. 이어 9월 21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빌미로 처음으로 ‘국무위원장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대미 성전’을 역설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과 군사적 옵션 논의에 맞서 ‘괌 포위사격’ 검토와 ‘전면전 불사’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와 미국의 군사적 옵션 거론을 심각한 위기이자 위협으로 간주하고 7기 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장기전을 준비하는 한편, 6차 핵실험 실시와 화성 15형 시험발사로 대응하였다.

〈하반기 중요 성명 및 계기 사례〉

성명 주체	일 자	내 용
공화국정부 성명	2017.8.7	대북제재결의 2371호 ‘전면배격, ‘천백배 결산’ 언급
총참모부대변인 성명	" 8.9	美 당국자들 대북발언 비난, ‘선제타격’ 등 군사적 대응 천명
전략군 대변인 성명	" 8.9	美 핵전력 한반도 위협 거론, 괌도 포위사격 방안 검토
전략군 사령관 발표	" 8.10	화성-12형 동시발사 등 ‘괌도 포위사격 방안 검토’ 언급
외무성 성명	" 9.11	6차 핵실험 관련 美 안보리 제재 움직임 반발, 강력대응 천명
국무위원장 성명	" 9.21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연설 비난, 對美강경 대응 천명
당 제7기 2차전원회의	" 10.7	조성된 정세에 대처한 당면한 몇 가지 과업 토의

수비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전반적인 대외정세를 ‘위기국면’으로 인식하고 체제유지 역량을 보강하는 조치들을 강구하였다. 북한은 7기 2차 전원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한 ‘혁명적 대응전략’으로 ‘자력갱생’과 ‘과학기술발전’을 당면한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무용론을 일관되게

주장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김정은이 준엄한 정세를 직접 언급하면서 대응방향을 구체화하였다. 한편, 관영매체들도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거론하면서 수비책의 일환인 ‘자력갱생’을 독려하고 나섰다.

위와 같은 동향을 통해 두 가지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고강도 대북제재 국면에서 경제력의 소진과 결핍이 실제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향후 더욱 악화될지도 모르는 대내외 환경에 대비하여 정권 차원에서 체제유지 여건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중 관계 악화 등 대외 여건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까지 예상한 가운데 농업생산, 전력공업, 석탄·광업, 철도·운수 등 기간산업 유지에 역량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들은 근본적 대책이라기보다는 미봉책에 가깝다. 대내 역량으로 대처하기에는 이미 늦은 감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가세한 대북 제재의 강도와 수위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은 집권 초기 핵 개발과 온갖 전시성 건설 사업에 과도한 자원을 소진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은 당장 내년부터 북한 경제상황의 악화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은 긴장고조 국면을 대내적으로 체제 결집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였다. 8~9월 기간 미국의 위협을 이용하여 대미 적대의식을 고취하는가 하면 각종 군중대회와 ‘인민군 입대 탄원’ 행사 등으로 전시 동원 분위기를 조장하였다. 전체 청소년들에게 체제수호 의식으로 무장할 것을 독려하였고, 이를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였다. 올해만큼 미국의 침략위험을 명분으로 전시 분위기를 조성하여 대내 결속을 도모하고자 하였던 사례도 흔치 않았다.⁴⁾

북한은 사회적 통제력도 대폭 강화하였다. ‘수령결사옹위’를 명분으로 평양시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체제보위와 사회유지 기능을 확대하였다. 국경지역에서 벌어지는 탈북행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고,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타 지역으로 소개하는 등의 탈북방지 조치들을 취하였다.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로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이 심화되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4) 대북제재결의 2371호에 따른 공화국정부성명 발표(8.7) 이후 불과 사흘 만에 374만 5천명이 인민군대에 탄원하며 ‘전민 총결사전’을 결의해 나섰다고 보도했으며(연합뉴스, 8.12), 김정은 국무위원장 성명(9.21) 발표 이후 6일 만에 전국 470여만 명이 인민군대에 탄원했다고 집중적으로 선전하였다. 『중앙일보』 2017.9.28.

런 가운데 주민들의 동요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회 통제력 강화를 포함한 체제유지 여건 조성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노동당의 지도 기능을 강화하고 하부 말단조직까지 포함한 모든 당 조직들이 분발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2. 2018년 전망 : 체제선전 강화, 내구력 약화

정권수립 70주년 계기 정치적 열의 및 성과 제고

2018년 북한의 기본 정치방향은 정권수립 70주년에 맞출 전망이다. 북한은 신년사에서 ‘공화국창건 70돌을 높은 정치적 열의와 노력적 성과로 빛내이자’는 구호와 함께 대내외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아울러 2017년 말의 정세상황을 연장하여 보다 공세적인 차원에서 ‘핵무력 완성’을 기정사실화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에 이어 7차 당 대회 결정관철 차원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독려하는 동시에 조성된 정세에 맞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 것을 강조할 수 있다.

첫째, 내년도 중심과제를 김정은 우상화와 ‘유일영도체제 강화’에 두고 주요 정치일정들을 여기에 맞출 수 있다. 즉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에 이어 ‘김정은 조국’의 시대적 의미를 고양시키는 것이다. 대내 열의를 고양시키는 사업과 경축행사 일정들을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김정은 ‘유일영도체제’를 공고화 하는 방향에서 추진할 것이다. 또한 선대의 업적과 김정은의 업적을 동일시하는 방식으로 김정은 우상화를 한층 심화할 것이다. 아울러 ‘광명성절’(2.16)이나 ‘태양절’(4.15)을 계기로 삼지연지구 ‘혁명성지’ 조성과 혜산-삼지연 철도 확장 준공식도 예상할 수 있다. 경제난 속에서도 올해 국가 역량을 집중시킨 삼지연지구 혁명성지 조성의 정치적 의미를 최대한 부각시키는 동시에, 김일성의 건국업적과 김정일의 선군업적에 대한 선전선동을 강화함으로써 9월 정권수립일 경축행사들(대규모 경축열병식·군중시위)을 성대하게 치르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과거 김일성 시대의 ‘전국영웅대회’(1988)나 김정일 시대의 ‘선군영웅대회’(2003)와 같은 중요 경축행사 개최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둘째,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정책방향에 맞게 내부 열의를 고조시키고

주민동원을 추구할 것이다. 7기 2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한 혁명적 대응전략’을 철저히 관철할 것을 재확인하고, ‘자력갱생’과 ‘과학기술발전’ 등 중심과제들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고강도 대북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전당, 전군, 전민의 동원 열의를 제고하는 조치들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동당과 내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적 대책들도 강구할 것이다.

셋째, 핵무력 강화를 위시한 가시적 성과에 주력할 것이다.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정권수립 70주년을 계기로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를 도출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 삼지연지구 혁명성지와 단천발전소와 같은 현재 추진 중인 국가 건설 사업들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농업생산을 비롯한 인민생활 향상도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정세악화 속에서 체제유지 역량을 강화하고 대내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핵무력 완성 이후 핵능력 고도화를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지만, 미국의 핵 공격력과 억지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북한도 끊임없이 핵능력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7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단행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한편, 정치적 열의를 고조시키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과 같은 위기상황 속에서 정권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강요하는 강압적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 노동당이 대내외 여건의 악화에 대한 책임을 권력층에 돌리는 과정에서 숙청작업이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기상황과 강압적인 숙청으로 권력층이 김정은 유일지배체제에 반감을 갖거나 정책실패, 실적부진, 부정부패 등 다양한 이탈현상들이 점증할 수 있다. 특히 당과 군부의 핵심권력층에 대한 충성도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숙청과 처벌이 잇따를 수 있다. 이러한 불안한 현상들이 누적된 불만 및 정권의 취약성과 결합하여 2018년도에는 체제 불안정성이 커질 수도 있다.

당·국가 의사결정기구 정상화 가능성

내년은 정권수립 70주년이 되는 해이자 최고인민회의 제13기의 임기(5년)가 끝나는 해이다. 이를 계기로 북한은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을 최대한 부각시키면

서 체제기반을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 정권 수립 70주년을 대대적으로 경축하고, 제13기 최고인민회의 결산과 차기 선거일정도 준비해야 한다. 2014년 3월에 출범한 제13기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 시대 개막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가졌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첫 번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여 국가 권력구조를 정비하였으며, 2016년 6월 제13기 4차 회의에서는 국방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통상 4월에 개최하는 최고인민회의가 정권수립 70주년을 맞는 2018년에는 예년에 비해 그 의미가 상향될 전망이다. 정권수립 70주년에 맞는 상징적 의제를 상정하고 9월의 경축 일정과 연계시킬 수 있다. 올해 화성-15형 발사성공을 통해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조건에서, 병진노선 집행을 총화하고 정책방향과 과제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또는 7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조치들도 취해질 수 있다.

국무위원회 등 국가체계를 재정비하는 조치들도 취해질 수 있다. 7기 2차 당 전원회의에서 이루어진 엘리트 변동을 국가체계 안에 반영함으로써 김정은의 국가영도체계를 강화하고자 할 수 있다. 또한 내년 7기 3차 당 전원회의 개최 여부, 개최 시기 역시 주목된다. 개최 여부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주기화와 관련이 있고, 개최 시기는 정권 수립 70주년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 대내외적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권의 기반과 체제유지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에 맞춰 당·국가 의사결정기구의 역할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력갱생’과 ‘사상전’ 전개 및 사회통제 강화

2018년 북한의 주요 키워드로 ‘자력갱생’이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2018년은 김정은 집권 이후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초고강도 대북제재 조건 속에서 그 동안 버텨온 경제력이 한계를 드러내면 시장 여건이 악화되어 사회적 동요가 증가할 수 있다. 6차 핵실험 이후 강화된 대북제재 조치들은 전례 없는 수위에서 취해지고 있다. 북중관계 정상화 등 근본적인 탈출구가 없는 한 북한은 현재의 경제 수준을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다.

특히 ‘자력갱생’을 앞세운 수비적 차원의 ‘장기전’의 성공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은 3중고—①대북제재로 인한 대외 수요 전반 차단 ②김정은 집권 이후 단기간 내 자원 소진 ③시장경제 의존도 심화—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3중고가 악화됨에 따라 경제난과 사회적 일탈을 유발하거나, 심각한 경우 체제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권에 대한 충성도 약화와 경제난이 연계되어 사회적 동요를 증대시킬 수 있다. 정권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충성도는 과거와는 다르다. 북한주민들은 핵무력 완성을 위해 추진한 병진노선이 경제난을 가중시켰고, 이것이 민생경제의 악화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 대다수 북한주민들이 의존해 온 시장여건의 악화는 주민들의 불만을 누적시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력갱생’을 독려하면서 ‘총동원’과 같은 전통적 동원방식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굴복하는 것을 제외하면 ‘자력갱생’ 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김정은 시대 이후 증대한 주민동원방식이 ‘000 전투’로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신년사를 시작으로 정치·사회적 열의를 고조시키는 ‘사상전’을 크게 전개할 것이다. 주민 동요를 차단하고 체제 결집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7기 2차 전원회의에서 새로 보강된 박광호 당 부위원장과 김여정 정치국 후보위원이 주도하는 당 선전선동부가 ‘조성된 정세’에 맞게 신년사 학습과 사상무장에서 분발을 촉구할 것이다. 김정은의 핵무력 성과를 선전하는 데 소홀히 했다고 노동신문 책임간부들이 크게 문책을 당한 상황에서 당 선전선동부 산하 기관들의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다. 선전선동부는 김정은의 위대성과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다양한 충성 의례를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각급 당 조직과 권력기관들의 역할을 제고하고 권력층의 충성경쟁을 독려하기 위한 조직·사상적 캠페인도 강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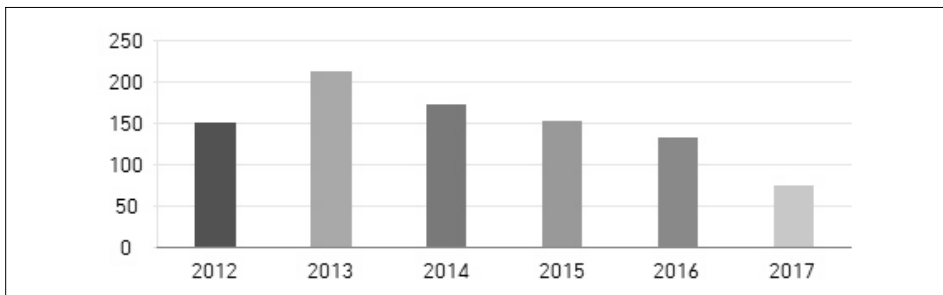
사회 전반에 대한 각종 통제도 강화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조성된 정세위기를 내세워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공안기구의 사회 통제력을 강화할 것이다. 국경지역에서의 탈북 억제를 강화하고 외부정보·문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할 것이다.

김정은의 공개 활동 변화 주목

2017년 김정은의 공개 활동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2016년 동기대비 약 30% 정도 감소한 75회에 불과하였다. 예년 평균에 비해 거의 50% 이상 감소하였다. 물론 김정은의 공개 활동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으나 공개 활동의 현저한 감소는 김정은의 통치행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집권 6년차에 접어든 젊은 지도자 김정은의 왕성한 의욕과 그의 적극적인 성향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2013년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개 활동이 가장 많았던 2013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거의 65%에 육박하는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눈에 띄는 격차는 김정은 정권이 직면한 2013년의 대내외 환경과 2017년의 대내외 환경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2018년 김정은의 공개 활동 빈도와 추이는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환경(위기인가 안정인가)에 대한 인식을 판단하는 바로미터로 볼 수 있다.

〈집권 이후 김정은의 공개 활동 분석〉

년 도	활동 횟수
2012	151
2013	212
2014	172
2015	153
2016	133
2017(11.10 현재)	75
총 계	896



출처 : 통일부 북한포털 참조

북한이 공식 발표한 공개 활동 빈도와 김정은이 즐겨 찾는 현지도 단위들을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김정은의 현지도 대상이나 단위들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김정은의 공개 활동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은 군사·군수, 평양·원산시 등에 집중하는 부문별·지역별 편중현상이다. 이러한 편중현상은 김정은의 현지도가 김정은이 내걸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부합하는 시범건설 단위와 생산정상화 단위들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지도 대상과 단위를 선정할 때 인민생활 향상보다 그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더 많이 고려되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의 현지도는 당분간 ‘가고 싶고 만족할 수 있는 대상과 단위’에 집중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편중현상은 김정은의 후계자 시절과 집권 초기에 당·정·군이 경쟁적으로 김정은의 지시 관철을 자청하고, 김정은의 의중에 맞는 현지도 대상과 단위들을 만들어 내던 동력을 상실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김정은의 건강 이상 또는 통치 의욕 측면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집권 초기 많은 국가 대소사를 직접 챙기면서 신속하게 자신의 업적을 만들곤 하였던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과 이를 위한 무리한 현지도 수행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김정은의 신상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유전적 질환과 무절제한 생활습관에 따른 고도비만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받는 상황이 초래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한 업무 또는 권력 공백이 발생할 경우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다. 또는 강도 높은 대북제재와 압박 및 외교적 고립의 심화로 인한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업무량이 과중되는 경우에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무리한 공개 활동으로 김정은의 건강이 악화되어 리더십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의 ‘참수작전’ 등 김정은의 신변을 위협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 통상 북한의 현지도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한다. 우선 최고 지도자의 의도를 현지도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다음은 현지도를 통해 우상화와 체제안정을 과시하는 등의 선전효과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김정은의 현지도 역시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선대에 비해 두 가지 목적에 대한 의욕과 기대감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신

변위협 때문에 김정은이 현지지도를 대폭 줄이고 공개 활동 보도를 제한할 경우,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하는 데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이 김정은이 외부 위협 때문에 현지지도 수행과 같은 통치행위에 제약을 받는 상황은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것이 2018년 김정은의 공개 활동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자력자강·과학기술발전’에 제재 無力化, 경제회생의 命運을 걸다

변상정·최동철·이철

2017년 북한은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채택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수행하여 주민생활을 향상시키고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경제활동에 총력을 집중하였다. 북한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을 올해의 선차적인 투쟁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며 “올해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해”(노동신문, 1.4)라고 선전하였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5개년 전략 수행의 지름길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지난해 당 제7차 대회에서 김정은은 ‘과학기술강국 건설 - 지식경제강국 건설 - 사회주의강국 완성’을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위해 ‘기초과학 육성, 과학기술 연구원 3배 증원, 전 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 기풍 확립’을 지시하는 등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을 우선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김정은은 올해 첫 공식 활동을 과학기술전당 준공식 참석으로 시작하고, “과학기술전당의 준공은 우리 당이 과학전선을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준다”(조선중앙통신, 1.2)고 강조하였다.

북한은 지난 10월 7일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와 11월 7일 내각전원회의를 개최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제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고강도 대북제재에 대응해 내부적으로 ‘자력자강’을 강조하면서 재정긴축을 시행하고 국가의 민생보장의무를 각 기관과 개인에게 전환하고 있다. 북한 언론매체는 그 어느 때보다 전 사회가 ‘자력갱생’, ‘자력자강’ 등을 통해 자체로 생존할 것을 강조하였다.

북한 지도부의 경제부문 시찰이 증가했고, 특히 김정은은 신발공장, 화장품공장, 자동차공장 등의 경제현장에서 제재 극복을 위한 ‘자력자강’과 ‘과학기술발전’에 의한 경제건설 양상을 강조하였다. 이는 장기간의 대북제재로 북한이 체득한 ‘자력갱생 노하우’와 소규모 투자 대비 실리적 성과를 도출하는 ‘과학기술’ 이외에는 북한 경제 생존에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자력자강’과 ‘과학기술발전’ 전략은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 국면에 처한 북한 당국의 자구책이자 김정은 시대 ‘실리주의’의 일환인 것으로 평가된다.

2017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대북제재의 효과가 2018년에는 경제 전반에서 가시화돼 경제난 가중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북한은 제재를 더욱 교묘히 회피하면서 외화획득에 주력하는 노력을 배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북한이 2018년에는 국방과 학과 군수경제 부문에 집중 투입한 인적·물적 자원을 민수경제 부분으로 전환하고 경제건설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일지 ‘핵·경제 병진노선’의 향배가 주목된다.

1. 2017년 평가 : ‘자력자강·과학기술’로 대북제재 적극 대응

장기화·고도화되는 대북제재에 적극 대응

2017년 북한 농업은 초반의 가뭄으로 인해 작황 난조가 우려되었으나 북한 당국의 강력한 ‘전민농촌지원정책’ 추진과 순조로운 날씨의 영향으로 농산물 생산이 증대되었다. 또한 시장을 활용하는 당국의 정책으로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용되었고, 그 결과 주민생활도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8월과 9월의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2375호 발효 이후에는 시장에서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 7월까지의 석탄·철·철광석·광물류·수산물·의류수출 등 대외무역이 지난해 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8월과 9월의 유엔 안보리 결의로 주요 수출품의 수출이 금지되고 대외무역액이 크게 감소하는 등 대북제재의 영향이 현실화된 것이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철·철광석·광물류·수산물·의류수출이 금지됨으로써 외화재정이 급감하고 이에 따라 상품수입도 급감하였다. 즉 수출의 급감은 외화수입의 급감으로 이어져 시

장에 필요한 상품수입에 악영향을 미치고, 시장 의존도가 높은 주민들의 생활에 적지 않은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는 지난해에 이룩한 경제성장세를 지속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無力化하기 위해 경제현장에 대한 공개시찰에 집중하였다. 김정은은 1분기 총 25회의 현지시찰 중 경제부문 9회, 국방부문 8회를 시찰하였고, 최룡해는 지난해 1회에 비해 올해는 6여 회로, 박봉주는 지난해 6회에 비해 9여 회 경제현장을 시찰하였다. 특히 북한은 김일성 생일 105주년을 앞둔 4월 13일 김정은은 참석 하에 외신기자들과 관계자 200여 명을 초청해 27만 여㎡, 4천 세대 살림집, 44동 고층건물과 편의시설을 갖춘 여명거리 완공식을 치렀다. 김정은은 올해에만 공사장을 두 차례 시찰하면서 “여명거리는 미제와 적대세력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강대한 나라를 건설하려는 당의 구상이 반영된 거리”라며 태양절 전에 완공할 것을 독려했다.

한편, 자강도의 공장·기업소들이 1분기 ‘인민경제계획’ 104%로 초과 완수하는 등 민간경제 여러 부문에서 성과를 이루었다. 지난 5월 18일에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중점과제인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 9월 9일 정권수립 70주년을 목표로 대규모 단천발전소 건설에 착공하였다.

또한 북한은 대북제재 우회 수출, 밀무역, 외화획득 공식통로인 관광과 국제상품전람회 개최 등을 통해 북한 경제에 제재의 영향이 없음을 대외에 과시하고자 하였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올해 8월 163만 6,519톤(1억 3,815달러)의 석탄과 미술품을 중국에 수출·판매했고, 낚시·스쿠버 다이빙·자전거 타기 등 각종 아이디어를 동원해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하였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강화로 올해 1~9월 對中 수출 누계가 지난해 대비 16.7% 감소하였으나 수입은 1~9월 누계로 20.9% 증가하였다. 對中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對中 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누계가 늘어난 것은 역설적으로 밀수출이 증가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 신발공장, 화장품공장 등이 신축 또는 확장되었고, 지난 5월과 9월에는 평양에서 중국·쿠바·베트남·이탈리아·싱가포르 등의 외국 회사들이 참여하는 국제상품전람회가 개최되었다.

북한은 올해에도 내부적으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도입과 시장에 대한 관망

및 활용정책을 유지하여 주민생활 안정과 국가경제 활성화를 추구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당국은 ‘포전담당책임제’¹⁾를 실정에 맞게 적용해 평안북도 박천군 탈곡현장에서 농민들에게 곡물을 즉시 분배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선전하였다(노동신문, 10.11). ‘북한 종합시장의 지역별 분포와 운영 현황 보고서’(통일연구원, 2017)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종합시장이 404개에 이르고, 시장 종사자가 110여만 명으로 북한 인구의 4.5%에 해당된다.

북한은 전력발전 자금 여건조성을 위해 카드식 전력적산계를 도입하였고, 도로 보수를 위한 도로세 징수를 위해 평양 주변 고속도로에 톨게이트를 설치하고 있으며, 평양 시내 驛舍·식당·주택 인접도로에서는 인민위원회가 선정한 주차요원들이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속 기업의 생산능력 일부 회복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 가운데에서도 2017년 북한 경제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아직 일부 산업분야에 국한되고 있으나 북한 기업의 생산능력이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있고, 그에 따라 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그 질도 개선되고 있다. 식료공업, 경공업, 농기계·운수기계 등 기계제작, ICT 분야에서 국영 기업의 생산활동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무엇보다 식료가공품 생산이 증가세를 보였다. 그동안 해외에서 완제품을 수입해온 무역회사들이 설비와 원부자재를 수입해 국내에서 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한 후 시장에 완제품으로 공급하고 있다. 적은 투자와 시장 접근성이 좋은 식료공업과 경공업 부문에서 생산능력의 호조 현상이 먼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품포장이 종전의 조잡함을 탈피해 자본주의 국가의 상품과 유사하게 변모하는 등 경쟁력과 상품성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제기되었다.

또한 농기계, 수송기계, CNC 공작기계 생산과 보급이 늘어나고 ICT도 종전의 완제품 수입에서 부분품을 들여다 제조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핸드

1) ‘포전담당책임제’는 협동농장 말단 단위인 분조(15~20여 명)내에 포전(일정한 면적의 논밭)을 담당하는 최종 노동 단위를 3~5명으로 구성하고, 1인당 약 1정보씩 토지를 분배해 생산량의 일정 비율만 당국에 바치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김정은 시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핵심적인 농업개선조치다.

폰, 태블릿 PC, 태양광 설비의 가공도가 높아지고 있고, 핸드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기능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취·금속부문은 ‘200일 전투’ 등 대중적 생산증산운동으로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화학공업에서는 여전히 원부자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당 제7차 대회와 당 중앙위원회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과업 관철 차원에서 대중적 생산증산운동에 강한 드라이브가 가해지면서 채취·금속부문에서 생산목표를 앞당겨 달성하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비누생산원료와 간단한 화학공업 원부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것은 여전하다.

북한의 전기절약 및 에너지원 전환을 위한 투자가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 사회적으로 태양에너지 이용률이 매우 높아졌고 단천발전소 등 새로운 전력 생산능력 창출, 전기절약, 공장·기업소의 교차생산적용이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부족한 전력사정과 관련해 김정은이 신년사 등에서 전력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조명용 전기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이를 통해 확보한 예비전력을 생산부문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력부족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각 기관에서 전기절약을 적극 추진하고, 중소형 발전소의 가동률 제고를 시도하고 있는 바, 이러한 동향은 전력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당국의 절박한 대책방안인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과 산업부문에 과학기술 활용

과학기술발전을 강조해 온 북한은 김정은 집권 후 특히 국방과 산업부문에서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에 주력하고 있다. 김정은은 과학기술과 경제를 일체화하고 경제를 현대화·정보화하기 위해 과학자·기술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학은 기초과학연구와 첨단과학기술 개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공장·기업소들은 국가중점기술개발사업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할 것을 지시하였다.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과 화성-15형 시험발사에 성공한 후 북한 당국은 국방과학·군수공업 분야의 실적을 본보기로 하여 경제 분야 전반에 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북한은 ‘국방과학’과 ‘경공업’을 ‘혁명의 2대 전선’으로 규정하고, “경공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군수공업

부문의 승전포성에 화답해 경공업 전선에서 인민생활향상의 승전포성을 울려야 한다”(노동신문, 8.4)고 촉구하였다.

김정은은 선대 지도자들 보다 과학기술인재들의 역할을 더욱 중시해 과학자·기술자들이 과학연구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과 생활여건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창설된 ‘국가정보화국’은 북한 내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IT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북한의 정보과학기술 성과 보도는 당 중앙위원회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 “당 제7차 대회 이후 과학기술 분야에서 적지 않은 성과들이 있었다”는 김정은의 언급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 시기와 달리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과학기술중시’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2018년 전망 : 대북제재 효과 가시화와 경제건설 집중

대북제재 효과, 가시화될 것인가?

2017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대북제재의 효과가 2018년에는 경제 전반에서 가시화돼 경제난 가중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제재의 효과 분석을 위한 몇 가지 기준 - △유엔 제재 규정의 강력성, △제재의 철저한 이행 여부, △북한의 제재 회피 가능성 등 - 에 의거할 때, 민생부문 제외 등 예외 규정을 명시했던 이전 결의와 달리 2371호·2375호 제재가 매우 강력해 제대로 이행될 경우 북한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북한의 화성-15형 시험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석유공급 축소 제재가 추가되고, 2017년 예상 외로 제재에 적극 동참한 중국 정부가 추가 제재를 성실히 집행할 경우 2018년은 북한의 국가경제 운영에서 최악의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제재를 회피하면서 외화획득 노력을 배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재로 인해 석탄·광물·수산물·의류 등의 수출판로가 막힌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감시 가운데 우회 및 밀수출 경로를 뚫는 방안을 찾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2~3백여 톤 규모의 소형 선박을 이용하여 마약, 담배, 유색금속 등을 일본, 대만, 필리핀 등에 밀수출한 축적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소형 선박을 이용한 밀수출입은 대남 침투를 담당한 특수기관들이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밀수출입 노하우가 해안과 국경 주변으로 적지 않게 일반화되어 있다. 따라서 위성 추적이 어려운 소형 선박을 이용한 제재 품목 밀수출입 행위가 확대되고, 북중 국경을 통한 기관과 개인의 밀수출입 행위도 당국의 묵인 하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한이 오래 전에 대남 침투 목적으로 해외에 파견하여 국적세탁을 완성한 공작원들을 이용한 해외거래가 더욱 은밀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되자 세계 각지에 파견된 외국 국적 공작원들을 금융거래와 미사일 및 무기거래 등에 이용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교묘한 제재 회피에 대한 국제사회의 추적기법이 진화해 제재 회피를 효과적으로 지속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로 인한 북한의 고립 심화와 대외관계 악화는 외부지원 감소와 대외교역 악화 및 외화난을 가중시킬 것이다. 지난 11월 7일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동력과 식량, 원료와 자재의 자급자족이 강조된 것은 북한 당국이 이러한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 안보리 제재 품목인 금·연·아연·철광석·석탄 등의 수출이 전면 차단될 경우 軍 보급품 생산과 공급에서 큰 차질을 빚을 것이고, 미국의 군사적 압박과 중국의 경제제재 동참으로 핵심계층과 軍에 대한 식량과 생필품 공급이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휴대폰, 자동차, 가전제품, 식용유 등 사치품과 고급 전자재 수입 감소는 북한 권력층과 상류층 생활에 가장 큰 악영향을 줄 것이다. 다만, 북한 체제의 특성상 제재의 악영향과 핵심계층의 불편·불만 동향이 권력층의 內分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주민들에 대한 제재의 영향은 북한 당국의 농업개혁, 비료·농자재 공급 증가로 인한 농산물 증산, 개인 소토지 농사, 개인 축산, 협동농장의 생산 증대, 자급률 증가 등으로 향후 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장기화되더라도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의 대기근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장 유통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상품수입이 줄어 결국 시장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시장 위축은 시장 의존도가 97%에 달하는 일반 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

럽게 만들 것이다.

산업부문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추가, 남북경협이 단절, 계획경제의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공장·기업소 자율화와 시장 활용 외에 마땅한 탈출구가 없는 상황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26개로 확대·발표된 경제특구와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투자 유치도 그 전망이 매우 어둡다. 다만, 북미 간 북핵 문제의 극적 타결이 이루어지고 제재 국면이 해소된다면 내년 하반기쯤 외자 유치 등 개방정책에 물꼬가 트이면서 경제 전반이 순조롭게 운영되고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이루는 상황도 가능할 것이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는 한편, 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수산업·축산업 발전을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업 증산을 제재 극복의 ‘기본고리’로 삼아 비료생산과 공급에 국가적 힘을 집중하는 등 농업부문 지원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분조관리제와 포전담당책임제, 6:4 현물 분배제로 농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생산의욕을 높여 농업생산을 증대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시장을 적극 활용하여 제재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과학기술 발전을 추동하여 대외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핵·경제병진노선의 항배 : ‘핵무력 완성’ 후 경제건설에 집중할 것인가?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선’의 주장에 따르면, 핵무력 건설과 경제건설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북한의 경제상황은 암울하기만 하다. 북한은 대북제재 無力化와 경제회생의 命運을 ‘자력자강’과 ‘과학기술발전’에 걸었으나 ‘자력자강’과 ‘과학기술중시’는 핵무력 완성을 위한 국방과학과 군수경제에만 오롯이 집중되었다.

그렇다면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북한이 2018년에는 국방과학과 군수경제 부문에 집중 투입한 인적·물적 자원을 민수경제 부문으로 전환해 경제건설 성과를 이뤄낼 것인가? 2017년 민수경제 부문 중 경공업과 식품가공업의 성과는 국산화·과학기술중시정책의 소산이었다기보다는 많은 부분 중국으로부터의 관련 기계 및 상품수입에 의존한 것으로, 2018년 고강도 제재 추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내부적으로 경제건설에 집중한다고 하더라도 민수경제 부문

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근본방도로 제시한 전력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면서 금속·화학공업에 주안점을 두고, 전력부문의 선도적 발전을 위해 석탄증산을 독려하며 대규모 단천발전소 건설에 자원투입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외화획득을 위해 제재 항목이 아닌 관광상품을 다양화하고,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조하여 인력 수출에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에서 새로운 인력 확대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의 정권수립 70주년 경축을 위한 100일 또는 200일 ‘충성의 전투’ 등 제재 국면에서 유일하게 가용한 주민 노동력 동원이 더욱 빈발해져 주민들의 피로도 증가와 불만 고조상황도 예상되는 바, 김정운의 권력층에 대한 공포정치와 함께 주민들의 체제불만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례 없는 과학기술중시정책 강력 추진 지속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물자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에도 ‘자력자강’과 ‘과학기술’에 의한 제재 돌파 자구책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선언적·상징적 차원이 아닌 국제사회의 대북압박과 제재를 타파하는 실천적 차원에서 과학기술중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북한이 제7기 2차 전원회의를 소집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전략적 대응책으로 ‘자력자강’과 ‘과학기술’을 제시한 것으로 볼 때, 북핵 문제의 극적 타결 없이 제재국면이 지속된다면 2018년에도 북한 과학기술계는 과학기술 자체 발전 견인과 아울러 국산화·자력자강을 위한 생산현장의 과학기술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막중한 과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핵무력 완성’ 후 내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건설 집중노선’에 따라 북한 과학자·기술자들은 과학기술 자체 발전과 함께 생산현장에서 제기되는 이론적·실천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수입에 의존하던 설비와 원부자재의 자체 개발과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북한의 ‘국가정보화발전전략(2016~2020)’에 따라 2018년에도 국가 정보화, 정보산업발전, 정보보안 등에서 성과가 예상된다. 지난 11월 29일 화성-15형 시

험발사 이후 북한은 “국가 핵무력 대업의 완성”을 선언하면서도 ‘핵무력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과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내년에도 북한은 각국의 우주개발 추세와 자주적 권리 행사 등을 주장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고, 유엔 제재의 부당성을 선전하는 동시에 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과 협상·대결의 선택기로

고재홍

2018년 북한의 선택은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하에서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 호응해 나오거나 아니면 핵무력 강화를 지속해 모험적 대결로 나아가는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7년 북한군의 다양한 모습은 2018년 북한의 선택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로켓트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라고 언급한 이래 북한은 제6차 핵실험 실시와 3차례의 ICBM급 미사일을 포함하여 총 16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단행하였다. 한 해 동안 북한의 모든 국가역량을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한 모습이었다. 그 결과 1만여 명에 불과한 전략군의 위상은 급격히 높아진 반면 100여만 명에 달하는 전통적인 재래식 부대들의 위상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

4월 15일 김일성 생일기념 대규모 군사퍼레이드에서는 20여종의 새로운 무기 체계의 공개 이외에 북한의 전·후방 군단급 책임지휘관들의 교체가 확인되었다. 북한군 주요 군사지휘관들에 대한 빈번한 인사교체는 김정은의 ‘군사통제’를 강화하여 핵·미사일 개발에 올인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고 재래식 부대의 현상유지를 위한 ‘자리주기’ 행사로 전략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또한 ‘2017탱크 병경기대회’, ‘전투비행술경기대회’, ‘특작부대 강하 및 대상물 타격경기대회’ 등 북한군의 공세적 군사훈련들은 대북제재를 반영한 듯 거창한 이름과 달리 소규모의 선발된 부대들로 진행된 과시적 차원의 훈련이었다.

특히, 미국과의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이나 대남 군사도발로 인한 남북간 무력 충돌이 핵·미사일 개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회피하는 특징적인 모습도 보여주었다. 따라서 2017년 북한군사부문은 △핵·미사일 개발 편중에 따른 비재래

전력과 재래 전력사이의 상대적 불균형 △김정은의 군사통제 강화를 위한 북한 군 주요 군사지휘관의 교체 △협상을 고려한 한미와의 물리적 충돌 회피 라는 특징적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들은 2018년 북한이 대결보다는 협상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미 본토의 위협을 감소시키는 북한의 핵과 ICBM의 분리 논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1. 2017년 평가 : 핵·미사일 개발노력과 그 영향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2017년 북한은 비재래 전력인 핵탄두의 폭발 규모와 미사일의 사거리를 확장하는데 주력해 왔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라고 밝힌 이래 북한은 사거리 2000km로 추정되는 준중거리미사일(MRBM) 북극성-2형 시험발사(2.12)를 시작으로 중거리미사일(IRBM) 화성-12형, ICBM급 장거리미사일 화성-14형과 화성-15형의 시험발사를 단행하였다. 특히 화성-14형과 화성-15형 미사일은 정상각도 발사시 사거리 6천km~1만km 이상으로 추정되어 미국의 하와이, 알래스카 그리고 미 본토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9월 3일 실시한 6차 핵실험의 폭발 위력은 과거 1kt~10kt 위력의 핵실험들보다 훨씬 큰 약 50 kt이상으로 북한은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동년 11월 29일 미 본토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급 화성-15형의 시험발사를 통해 ‘핵무력 완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은 군사기술적으로 탄두의 대기권재진입기술과 핵탄두 소형화 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로 “핵탄두탑재 ICBM의 보유·배치”로 정의할 수 있는 ‘핵무력 완성’ 단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래 지금까지 국제사회로부터 9차례의 대북제재를 불러왔다. 2017년 한 해 동안 3차례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와 개별국가들의 독자제재가 취해졌다. 특히 북한의 6차 핵실험(9.3)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75호(9.11)는 북한체제 유지에 결정적인 대북 원유공급의 완전 차단과 김정은에 대한 제재 등을 최종 옵션으로 남겨둔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라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대북제재의 효과가 나타나는 2018년에 북한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비재래 전력과 재래 전력간 상대적 불균형

유엔의 대북제재 속에서 북한의 핵·미사일개발 진전과 전통적인 재래 전력의 진전을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불균형적인 것이었다.

2017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의 지상 버전으로 개발된 북극성-2형을 비롯하여 SCUD미사일 개량형인 SCUD-ER, 화성-12형, 화성-14형, 화성-15형 등이 새롭게 개발되어 선을 보였다. 특히 4월 15일 김일성 생일기념 열병식에서는 신형 ICBM급 미사일을 비롯한 대형 미사일의 발사차량이 모두 발사관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개조되었다. 일부는 자체 개발된 무한궤도 차량에 탑재되어 산악이 많은 북한지형 이동에 최적화되었다. 최근의 ICBM급 화성-15형 미사일 역시 북한이 자체개발한 9축 발사차량에 탑재되었다.

이와 같은 핵과 미사일 개발진전에 비한다면 북한군의 재래 전력은 비록 대남 우위에 있는 방사포, 잠수함, 특수부대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지속적 증강이 있었지만 미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4월 15일 열병식에서는 북한군의 최신식 ‘선군호’ 전차가 열병 운행 중 고장을 일으켜 대오에서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고장이 단순한 정비불량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열병식에 등장한 장갑차와 장사정포·방사포 등은 300밀리 방사포를 제외하고 이미 1990년 전후 전력화한 장비들을 부분 개량한 것들이다. 포병무력 중 대남 우위 전력인 방사포는 방사포 로켓의 정확도 향상 등 일부 성능개량이 있었지만 위협의 본질은 한국군 대비 30배에 달하는 보유 대수에 있었다. 그러한 양적 차이는 한국군의 질적 증강으로 점차 상쇄되어 가고 있다. 열병식에서 보여진대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해·공군의 함정이나 전투기 현대화는 부분적으로 진행되고는 있지만 값싼 대함·대공미사일로 대체되고 있다. 100여만 명의 지상군 병력의 개별 장비 역시 소형화기 개량 및 원형탄창 등 일부 장비개선이 있었지만 상당부분 특작부대의 장비개선에 집중되었다. 재래 전력의 군사훈련과 관

련해서도 북한군 창군 85주년 ‘군종 합동타격시위’(4.26)를 제외하면 ‘탱크병경기대회’(4.1), ‘특작부대 대상물타격경기대회’(4.13), ‘전투비행술경기대회’(6.5) 등은 거창한 이름과는 달리 소규모 부대로 진행된 사기진작 차원의 것이었다.

더욱이 김정은의 공개활동 역시 올 10월까지 27회에 달하는 군사부문 활동 중 핵·미사일관련 공개활동이 16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도 산간오지의 재래식 부대시찰보다 군수공장이나 군사훈련 참관에 할애되고 있다. 이렇듯 2017년 북한의 모든 역량과 재원은 핵과 미사일 개발 부문에 집중되어 어느 때보다도 재래 전력의 진전과 상대적 불균형이 노정되었다. 이러한 전력간 불균형은 핵·미사일 전력을 위협적인 수단으로 만들어 북한으로 하여금 더욱 핵·미사일 개발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측 대응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비례적 대응군사훈련이 아니라 탄도미사일 발사의 정례화로 대체되었다. 2017년 키리졸브 등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 북한은 4발의 준중거리 SCUD-ER 미사일 발사(3.6), 신형단거리지대함미사일 발사(8.26), 화성-12형의 궤포위사격 위협(8.9), 화성-12형의 북태평양 발사(8.28)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북한군의 대응경향은 한국군의 첨단 재래전력의 질적 양적·성장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재래 전력 중심의 군사도발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해상 NLL 인근 도서지역이나 군사분계선상의 중부전선에서 재래 전력중심의 ‘대남 국지도발’은 한국군의 첨단 재래 전력 증강을 고려한다면 군사적 승리를 거두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비재래 전력과 재래 전력간 상대적 불균형이 심화되면 될수록 효율적인 군사전략의 수행을 어렵게 만들어 재래 전력 위주의 직접적인 대남 무력도발은 감소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김정은 역시 남북 무력충돌이 행여 핵·미사일 개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군사분계선과 서해 NLL 인근지역의 군사통제를 강화해 온 것으로 보인다.

주요 군사지휘관의 세대교체를 통한 군사통제

북한군은 현재 17개의 군단과 156개 정규사단 및 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 4월 15일 열병식에서 북한은 열병식 책임지휘관인 위성일 상장을 비롯하여 해군·

공군사령관, 전략군사령관, 특수작전군사령관, 평양고사포병군단장, 평방사령관, 1군단장~12군단장 10명, 4개 기계화훈련소장들, 17명의 근위사단·여단장, 6명의 연대장, 당 및 총참모부 작전부서장(4명), 기타 군사학교 지휘관(16명) 등 총 64명의 소속부대 책임지휘관의 이름을 공개하였다. 북한군의 주요 군단 및 사단의 책임지휘관의 소속과 이름을 모두 공개한데는 ‘사기진작’ 차원을 넘어 김정은의 ‘보안의식의 결여’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열병식에서 공개된 40여 명의 군단·사단급 책임지휘관들의 공통된 특징은 2012년 김정은 집권이후 군관련 공개활동에서 전략군사령관과 특수작전군사령관 등을 제외하고 공개된 군단장들과 인적 접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비공개 최고사령부 회의와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등에서 대면할 수 있으나 대부분 2012년을 전후, 소장계급에 불과했던 신진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열병종대에 등장한 근위사단장 12명과 지상군 연대장급은 모두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한국군과 대치하고 있는 전방 1, 2, 4, 5군단에 배속되어 있는 예하부대들이다. 대표적으로 열병식에 등장한 1군단 1, 2, 13, 46사단, 2군단의 6, 3, 9, 15사단, 5군단 4, 5, 12, 25사단 종대와 4사단 18연대, 5사단 10연대, 9사단 14연대 등 대부분의 열병종대들은 모두 전방 군단에 속해있다. 그 만큼 전방군단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군의 전방군단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방군단장들은 수시로 교체되고 있다.

첫째,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군의 주요 전·후방 군단장들의 재임기간이 매우 짧다. 이들은 2015년 4월 30일 현영철 무력부장의 처형과 2015년 8월 목함지뢰 도발사건 이후 임명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2013년 3월에 확인된 리성국 4군단장 등을 제외하고 주요 전방군단장은 임명된지 2년 남짓에 불과하다.

열병식 지휘관인 위성일 상장은 2015년 10월 10일 당창건 기념 열병식지휘관이었는데 당시 동부전선을 담당하는 제1군단장이었다. 2017년 4월 열병식에서는 책임지휘관을 담당했기 때문에 1군단을 대표해서 김석찬 소장이 호명된 것으로 보인다. 김석찬의 소장진급은 2013년 2월이었다. 소장계급이 말해주듯이 군단참모장 급의 인물로 파악된다. 위성일 1군단장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2009년 4월 소장으로 진급한 후 2014년 7월 전후 리춘일 상장의 후임으로 1군단

장에 임명된 것으로 추정된다. 군단장 재임기간은 3년 남짓이지만 2번의 열병보고 지휘관을 담당한 것으로 보아 향후 북한군의 주요 군사지휘관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서부전선의 2군단장 방두섭 상장은 2군단 14사단장 출신으로 소장진급은 2012년 4월로 5년 만에 2계급을 승진하였다. 2군단장에 임명된 것은 최대 1년 6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당시 2군단장은 김상용이었으며 2017년 4월 열병식에서 김상용은 9군단장으로 호명되었다. 평방사령관 김명남은 전임 김춘삼 평방사령관이 2015년 2월 작전국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재임기간 역시 2년 남짓에 불과하다.

주요 전·후방군단장과 함께 김광혁 공군사령관, 김영복 특수작전군사령관, 평양의 관문을 지키는 최두용 3군단장, 특히 4개 기계화훈련소장들의 재임기간도 1~2년에 지나지 않는다. 단지 5군단장인 양동훈 상장이 그나마 열병지휘관과 2군단장 등 순환보직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과거 북한의 757군의 최형관 상장이나 1군단장 전재선 차수 등은 승진이동하지 않는다면 사망시까지 해당 직책을 보유하고 있었다.

약 10여만 명의 병력을 지휘하는 전·후방 군단장의 짧은 재임기간에 비해 열병식에 등장한 특수작전부대 지휘관들의 재임기간은 정반대로 보인다. 2017년 열병식에서는 1군단 13사단, 2군단 15사단, 5군단 5사단 등 3개의 특수작전사단 열병중대가 등장하였다. 열병식 영상에서 나타난대로 주요 특수부대 지휘관들은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수부대에서 잔뼈가 굵은 지휘관들임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북한군의 17개에 달하는 군단급 주요 군사지휘관 중 2012년 4월 임명이 확인된 전략군사령관 김낙겸과 2013년 4월에 확인된 리성국 4군단장 정도만이 현재까지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군 수뇌부의 빈번한 교체와 마찬가지로 군사분계선에서 한국과 대치하고 있는 1, 2, 5군단장의 경우도 빈번히 교체되었다.

1군단장의 경우 2013년 3월의 장정남→리춘일→위성일, 2군단장은 2014년 3월의 양동훈→김삼룡→방두섭, 5군단장은 2013년 2월의 리영길→변인선→현영철→장정남→양동훈으로 알려져 있다. 4개 기계화훈련소장 역시 상대적으로 젊은 지휘관으로 교체되었다. 815기계화훈련소장 고명수 중장의 경우 2015년 2월 소

장계급으로 승진한 인물이다. 108기계화훈련소장 송영건 중장의 경우 2016년 초에 임명되어 김정은이 참관한 상륙반상륙방어연습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기간 동안 특수부대인 폭풍군단은 최경성→김영복으로 교체되었을 뿐이다.

주요 군사지휘관 교체의 의미와 영향

지난 2012년 김정은 집권 이래 북한군 주요 지휘관 보직의 빈번한 교체는 물론 수시로 계급의 승진, 강등, 복권 등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 지도자의 ‘군부 길들이기’ 일환으로 평가되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전·후방 군단급 주요 지휘관에 대한 빈번한 교체는 길들이기 차원을 넘어 전통적인 재래부대의 현상유지를 위해 ‘자리주기’ 차원의 보직행사로 전락한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2017년 4월 14일 김정은은 임명된 지 2년도 되지 않은 주요 전방군단장의 계급을 일계급 승진시켰다. 공개되진 않았지만 하부지휘체계상 연속적인 승진 잔치가 불가피한 대목이다.

북한의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구성 역시 북한군에 대한 ‘군사통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 10월 당중앙위 7기 2차 전원회의에서의 당중앙군사위 구성은 노회한 리명수 총참모장과 리영길 작전총국장을 제외하고는 비군사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과거의 달리 북한의 주요 군사정책을 집체적으로 결정하는 당중앙군사위원회를 비군사전문가들이 지배하는 이유는 100만 재래식 부대의 희생위에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우선주의’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군 주요 군단장들의 빈번한 교체 역시 젊은 김정은의 이들에 대한 ‘군사통제’를 보다 수월하게 만들었다.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ICBM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부른 군사분계선상에서의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핵·미사일 완성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군사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2017년 북한의 김정은은 한미와의 무력충돌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것이다.

협상을 고려한 무력충돌 회피

북한은 미 트럼프행정부 등장 이후 북한 미사일 요격 및 대북 선제타격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미국은 향후 1~2년 안에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에 따라 대북 선제타격의 일환으로 북한 미사일 요격가능성이 본격 제기되었다. 올 1월부터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감시하기 위해 고성능 X-밴드레이더(SBX-1)를 서태평양으로 이동배치하였다.

비록 북한이 미국의 요격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미국의 예방공격에 대해서는 ‘전면전쟁’으로, 대북 선제타격에 대해서는 미사일을 활용한 ‘우리식선제타격’으로, 내부혼란과 제도붕괴 비밀작전에 대해서는 ‘전민항전’으로 대응할 것임을 수차례 밝혔지만 현실에서는 그와 같은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행동을 취해나갔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의 요격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2017년 2월 북극성-2형과 5월의 화성-12형, 7월의 ICBM급 화성-14형, 11월의 ICBM급 화성-15형의 시험발사는 모두 북한의 북위 40도선 내륙지역에서 고각 발사를 통해 함경도 동부 해안선을 따라 발사하는 형식을 취했다. 또한 올해 미사일을 “임의의 시각과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이는 기술적으로 언제 완성될지 확실할 수 없기 때문이거나 혹은 정상각도 발사시 북한의 성공여부 확인능력의 기술적 미비라기보다는 미국의 요격가능성을 우려한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인근과 북한 내륙지역에서 기습 발사시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의 요격을 단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5월 28일 북한은 신형 반항공 요격유도무기체계의 시험사격을 통해 요격가능성에 대한 대응의지를 과시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북한은 지난 8월 위협했던 중거리미사일 화성-12형의 꺾 포위타격 발사 대신에 9월 일본열도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에 탄착하는 실사거리 발사를 단행하였다. 방향을 달리했다면 한반도에서 3,700km 떨어진 꺾의 주변에 도달할 수 있었지만 행하지 않았다. 북한이 올해 ICBM급 미사일의 실사거리 발사를 행하지 않고 3차례나 고각발사를 통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 역시 미국의 요격이나 선제공격으로 인한 무력충돌을 원하지 않을 뿐아니라 이

를 적극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지난 4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이 한반도 해상에서 훈련을 마친 칼빈슨 항모전단을 한반도에 재출동시키자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열병식 축사를 통해 대미 비난을 대신하였다. 더욱이 지난 9월 미 공군의 B-1B와 F-15C 전투기의 한반도 동해상 북방한계선을 넘는 대북 무력시위에 대해서도 북한은 아무런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북한의 무대응이 기술적으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지만 후에 보복행위가 불가능하지 않았음에도 북한은 후속조치로 단지 북한 전투기를 이동배치 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이러한 행동은 북한의 선부른 군사적 대응이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과의 무력충돌로 빚어지는 상황 전개가 향후 북한의 대미 협상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며 동일한 이유에서 한국에 대해 무력도발을 자제한 이유도 북미 직접대화시 한국이 걸림돌로 작용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북한의 핵탑재 ICBM개발이 미 본토를 실제 타격해서 승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면 북한이 주장하는 ‘완성된 핵무력’은 향후 대미 ‘ICBM급 미사일협상’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2018년 전망 : 협상의 시동

대북제재의 영향과 북한의 선택

2018년 북한은 무엇보다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2375호의 영향과 ICBM급 화성-15형의 발사로 거의 봉쇄수준의 대북제재와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다만, 현 대북제재가 대북 원유공급의 완전차단 상태가 아니며 인도적 대북지원이 유지되고 있고 비축물자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당장金正은 정권의 통치안정을 위협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군사부문에 대한 대북제재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는데 중점을 두면서 재래식 전력부문은 2017년의 연장선상에서 김정은의 ‘군사통제’에 의해서 현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군부의 외화수입 및 군수 원자재의 수입

감소, 취약한 군수지원으로 당분간 비용이 많이 드는 북한군의 각종 훈련이나 군사경기대회 등의 축소나 취소가 불가피할 것이다. 최근 북한군 병사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AS) 귀순과 같은 사건의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군내 정치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내부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핵탐재 ICBM 보유·배치’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한미와의 무력충돌에 대해 원천적으로 회피하는 태도를 견지할 것이다. 비재래 전력부문에서도 과거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도발 지속은 비축 자원을 고갈시키고 대내적으로 불만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북한의 추가도발은 한미의 대북 제재와 압박수위를 더욱 높혀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보다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경우 김정은 통치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2018년 북한군사 부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지속, 북한군 수뇌부 변동, 공세적 군사훈련 실시, 한미군사훈련 대응, 추가 도발이나 무력충돌 가능성, 남북군사회담의 개최 등과 관련해 다양한 전망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핵·ICBM 추가실험 여부는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나 이미 군사적 수단을 넘어 정치적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자제하거나 대내 필요시 ‘위성발사’ 등으로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추가도발과 관련, 북한내 화성형 미사일개발팀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팀이 다를 경우 경쟁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시 대응할 수 있는 제2보복공격 수단이라는 점에서 SLBM의 시험발사가 우려된다.

북한군 수뇌부 변동은 과거의 군부 엘리트간 개인적 충성경쟁에 의해서보다는 김정은의 ‘군사통제’ 강화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반도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에 의한 상황악화는 북한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김정은의 일선 부대에 대한 ‘군사통제’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대응 역시 ‘우발적 군사충돌’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말 비난과 위협’ 하에서 단거리미사일 발사, 특작부대 훈련 등 통상적인 군사훈련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남 무력도발도 ‘핵무력 완성’ 이후 재래 전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위협하 국지도발’은 오히려 확전이라는 부담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선불리 감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동일한 이유에서 남북군사회담의 개최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남북군사회담이 북미 직접대화로 가는 통로 차원으로 인식되거나 혹은 주요 군사분계선상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경계를 강화할 수 있는 차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북한은 과거와 달리 보다 적극적 태도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협상을 선택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북한은 공개적으로 ‘핵불포기’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상태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 어떤 ‘협상’이 가능할 것인가?

미국의 위협감소를 위한 ‘ICBM급 미사일’ 협상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ICBM급 화성-15형의 시험발사를 ‘핵무력 완성’으로 선언하였다. 다음 날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러시아의외대표단의 방북 면담에서 ‘핵보유국 인정시’ 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피력하였다. 미국은 즉각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요구를 일축한 상태이지만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요구에는 다양한 수준과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일부로 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경우 미사일 실험에 따른 유엔안보리의 제재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되지 않게 될 것이다. 유엔제재의 정당성도 점차 유명무실화될 것이다. 혹은 북한과 특정국가의 정상회담 개최나 개별국가의 독자제재의 완화·해제 조치도 북한 스스로 ‘핵보유국 인정’의 효과로 인식할 경우 북한이 ‘협상’에 나서는 명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가까운 시일내 핵탑재 화성-15형을 태평양 상공에서 폭발시키는 ‘핵무력 완성’ 시험을 추가로 감행하지 않는다면 비핵화 협상이외 다른 방식의 ‘협상’이 북미간 혹은 주변국 사이에서 모색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북한이 제기할 수 있는 대미 협상으로는 ‘ICBM급 미사일의 개발·생산·보유·배치 중지’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한미에게 있어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의 안전과 동맹국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핵·미사일 확산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미국을 넘어 세계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우선 “미국이 느낄 수 있는 위협의 감소”를 통해서 미국의 대북 접근을 유도하려 할 것이다. 북한의 완성된 핵탄재 ICBM이 미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 유일한 상태는 핵과 미사일을 분리시켜 협상하는 ‘선 ICBM급 미사일’ 협상이 될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할 수 없지만 미 본토에 위협이 되는 운반수단인 ICBM급 미사일의 동결과 폐기협상이 가능하다면 이는 1차적으로 미 본토에 대한 ‘핵 위협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접근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초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의 발사유예를 선언할 경우 북미 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북미간에는 핵협상 이외에 미사일 협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난 1996년 4월 미국의 요청으로 처음 시작된 북미 미사일 회담에서는 북한 미사일의 비확산을 위해 수출중지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였는데 후에 북한은 대포동2호 미사일의 발사유예를 카드로 활용하여 북미 미사일 회담의 지속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북미간 미 본토를 위협하지 않고 비확산을 전제로 하는 ‘ICBM급 미사일의 동결 및 폐기 협상’이 성사된다면 북한은 반대 급부로 한반도 변화의 주도권을 위해서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할지 모른다. 그래서 지난 1990년대 초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추구한 폭넓은 관계개선을 재연하고자 할 것이다. 이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은 미국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북미 대화와 남북대화의 병행진전 원칙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칙은 북한으로 하여금 북미대화를 위해 남북대화를 해야 할 명분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협상구도가 전개되지 않을 경우 김정은 정권은 평창올림픽과 한미군사훈련, 지방선거 등이 예정되어 있는 내년 상반기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에 대비 한국은 다자협력을 기본으로 남북대화가 북미 직접대화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핵을 통한 인정투쟁, 파국이나 구원이나

김원식

신년사를 통해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을 선언한 북한은 2017년 한해도 ‘핵무력 완성’을 통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전환을 위해 6차 핵실험(9.3)과 각종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였으며, 마침내 11월 29일에는 화성-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러한 도발에 대해 북한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는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맞대응하면서 올 한해 한반도 위기는 최고조로 심화되었으며,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강화로 북한의 외교적 고립 역시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다.

1. 2017년 평가 : 핵을 통한 인정투쟁, 외판 섬이 되어버린 북한

핵을 통한 ‘인정투쟁’, 파국으로 가는 북핵 문제

이제 남은 것은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 뿐인가?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무력 완성을 위해 작년 두 차례의 핵실험에 이어 동년 9월 3일 6차 핵실험을 실행하였다. 이후 북한은 ‘ICBM용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였으며, 핵탄두 모형까지 공개하였다. 금번 핵실험의 경우 탄두 폭발력이 대폭 강화되어 50~200kt 규모로 추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운반체계를 제외한 핵무력 고도화의 총체적 목표가 거의 달성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핵 고도화 완성 예상 시점이 기존의 예측보다 급격히 앞당겨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북한 핵은 더 이상 협상용이나 생존용이라기보다는 김정은 정권의 상징이자 국제사회와의 목숨을 건 ‘인정투쟁’을 위한 핵심 수단이 되어버렸다.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의 미사일 도발 주기는 급격히 짧아지고 발사 횟수는 급속히 증대해왔으며, 금년에도 북한은 단거리·중거리 등 각종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였다. 11월 현재 기준으로 탄도미사일의 경우 총 15회에 걸쳐 20발을 발사하였다. 북한은 미 본토 타격능력 확보를 통한 대미 압박을 위해 7월 4일과 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8월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궤도 포위사격’을 위협한 후 8월 29일과 9월 15일에는 일본 상공을 넘어 태평양 해상으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하면서 도발 수위를 고조시켰다. 또한 9월 15일 이후 도발중단 75일 만인 11월 29일 새벽에는 최장 사거리로 추정되는 화성-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마침내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하면서 북핵 위기를 더욱 격화시켰다. 이를 통해 북한은 자신들이 한국과 일본은 물론 주요 미군기지 나아가서는 미 본토 타격 능력까지 보유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시위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압박을 올 한해 최대고조시켰다.

이러한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여 올 한해 국제사회는 개별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은 물론 UN 안보리 차원에서도 세 차례에 걸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대북제재의 강도를 높여왔다. 먼저 6월 2일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2356 제재안이, 8월 5일에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2371 제재안이 채택되었으며, 마침내 9월 12일에는 북한 6차 핵 실험 이후 9일 만에 강력한 2375 제재안이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통과되었다. 기존의 제재에 더해 유류공급의 30%를 차단하고, 섬유제품 수입과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을 제한하는 등 향후 2375 제재안이 강력하게 실행되는 경우 북한경제는 수입원자재 및 외화 부족 등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2017년 한해는 핵무력 완성을 향한 북한의 강력한 의지와 이를 제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응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북핵 관련 한반도 위기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외판 섬이 되어버린 북한

2017년에는 핵보유를 고수하며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의 행태로 인해 북한의 대외적 고립이 급격히 심화되었다.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북미 대립과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일정부분 동참하면서 이미 소원해진 북중 관계 역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고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북일 관계 역시 악화일로로 길로 접어들었다. 다만 러시아가 북핵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모색하면서 북러 관계만이 일정한 소통의 통로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년 2월 2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金正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암살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정권의 이미지는 급격히 추락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이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미국 주도의 대북 고립외교로 인해 북한은 여러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단절과 대사추방 등 현재 외교적으로도 최악의 고립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미관계 : 위태로운 설전과 선전포고 발언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등장을 전후하여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기대하기도 하였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 기조를 압도적 힘을 바탕으로 하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설정하고, 핵보유를 향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북미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았다. 한편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인 청년 오토 워비어가 본국으로 송환된 지 6일 만인 6월 19일 사망하면서 미국 내의 대북 여론도 급격히 악화되었다.

한때金正은과 만날 의사를 밝히기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강경한 발언으로 응수하기 시작하였으며, 마침내 9월 1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공개적으로 ‘북한 완전파괴’ 발언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북한 이용호 외무상은 9월 25일 이를 선전포고로 규정하면서 자위권 발동을 운위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맞서 대북 군사옵션에 대한 언급 빈도를 높이고, 수시로 핵심 전략자산들을 한반도에 투사하면서 북미 사이의 군사적 대치 수위 역시 급격히 고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속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독자제재를 위한 각종 행정명령은 물론 법적 토대(북한, 이란, 러시아 패키지 제재 법안(8.2), 오토 워비어법(10.24 하원 통과))를 구축하기도 했다. 특히 오토 워비어법의 경우는 금융관련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이 법안이 실행되는 경우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이 9월

15일 이후 상당기간 도발을 중단한 상황에서 미 행정부가 11월 20일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북한이 이에 맞대응하여 11월 29일 새벽 화성-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잠시 완화의 기미가 보이던 북미간 갈등도 다시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올 한해는 북한의 확고한 핵보유 의지와 북핵 불용과 핵 비확산이라는 미국의 원칙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북미관계는 최고의 긴장 상황 속으로 치달았다.

북중관계 : 도발하는 북한, 고뇌하는 중국

소원해진 북중관계 속에서 금년에도 김정은의 방중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과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 인해 북중관계는 금년에도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악화되었다.

중국이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고 미국과의 협조 하에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중국에 대한 북한의 불만도 고조되었다. 동년 2월 중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수입 중단 조치를 취했으며, 9월에는 일부 중국은행들의 북한관련 계좌 폐쇄, 동결, 신규 계좌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식이 열리던 5월 14일 탄도미사일 발사, 중러 정상회담을 앞둔 7월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베이징에서 브릭스 정상회담 개막식이 열리는 9월 3일 6차 핵실험 등으로 중국을 자극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각종 매체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중국을 지목하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가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9월 22일 중국 언론매체들을 실명으로 비판하면서, 과거 북한이 중국의 첫 핵실험 당시 유일하게 정부성명으로 이를 지지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중국 내에서도 역시 김정남 암살과 위협적인 북한 행태에 대한 반발 그리고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우려 등으로 대북 여론이 크게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각종 매체들의 대북 비난도 증가하였다. 물론 중국 공산당 19차 대회 이후 북한은 당중앙위원회 및 김정은 위원장 명의로 축전을 발송하고 북중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표출하기도 하였으며,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자격으로 쑹타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11월 17~20일 3박 4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면서 한때 북중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예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쑹타오 부장의 김정은 위원장 면담이 불발되고 곧 이어서 11월 29일 새벽 북한의 화성-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감행되면서 북한과 중국 사이의 갈등의 골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올 한해 북중관계는 이제 북한이 중국에게 전략적 자산이라기보다는 점차 부채의 성격이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올 한해 북중 사이의 당정 고위급 교류 중단이 장기화되고 중국의 대북제재가 일부 실행되기는 했지만, 지정학적이고 전략적인 양국의 상호이익으로 인해 양국관계는 중국의 고뇌 속에서도 일정한 지속성을 가지고 유지되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북일관계 : 북한의 도발과 일본 국내정치의 결합

트럼프 정부 등장 이후 일본은 강력한 미일동맹의 기조 하에 국제무대에서 대북압박을 선도하였다. 이러한 기조 하에서 일본은 기존 대북제재의 기간 연장은 물론 북한과의 모든 수출입을 금지하는 강력한 독자제재도 시행하였다. 비록 일본을 자극하는 것이 북한의 주된 목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언제나 일본에 대한 위협일 수밖에 없으며, 특히 8월 29일과 9월 15일 일본 상공을 넘어 태평양 해상으로 발사된 북한의 화성-12형 발사는 일본 내 여론을 들끓게 하기에 충분했다.

미국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고 북한의 도발이 정상국가화를 목표로 하는 아베 정권의 국내정치적 필요성과 결합하면서 올 한해 북일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우리가 기억할만한 양국의 접근 시도조차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올 한해 양국관계가 처한 현실이다.

북러관계 : 북핵 문제의 중재를 모색하는 러시아

북중 관계가 냉랭해진 상황에서 올 한해 북한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외교적 탈출구는 러시아였다. 또한 러시아 역시 크림반도 병합 이후 지속되는 미국과 서방의 압박에 맞서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 북핵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모색하고 나설만한 충분한 유인을 가지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북한은 자주외교를 명분으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왔다. 중국

과 북한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미리 대립이 유지된 을 한해도 북한은 러시아를 외교적 출로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북한은 『북러 공동선언(2000)』에 대해 ‘역사적인 문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양국 친선관계를 과시하는가 하면, 6월 5일 북한 외무성 실무대표단의 방러에 이어, 7월 22~25일에는 러시아 6자회담 특임대사가 방북하기도 하였다. 그간 러시아는 북핵문제 중재에 대한 의지를 반 복적으로 표명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중국과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그리고 러시아는 대북 원유공급 차단 반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완화 등을 계기로 북한의 입장을 국제사회에서 일정부분 대변해주었다. 또한 동년 10 월에는 북핵 문제의 중재자를 자처한 러시아가 모스크바 비확산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협력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9월 말의 양국 쌍무회담에 이어 동 회의에 참석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 장은 10월 23일 한 강연에서 북한과 미국 및 서방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중재자 역할을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북핵문제의 중재 역할을 모색하면서 을 한해 북러관계는 북한의 유일한 탈출구 역할을 해준 셈이다.

북한의 외교적 고립 : 국제사회의 외면과 북한의 고립

김정남 암살과 웹비어 사망 등으로 악화된 국제사회 여론과 미국을 주도로 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급속히 강화되면서, 을 한해 북한은 외교관계 단절과 외교관 추방 등의 외교적 수모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을 한해 20여개 이상의 국가들이 북한과의 외교관계나 경제관계를 단절 혹은 축소하였다. 먼저 북한의 주요 무역국으로 꼽히는 필리핀이 북한과의 무역 단절을 선언하였으며, 태국 역시 북한과의 무역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멕시코, 페루, 스페인, 쿠웨이트, 이탈리아 등에서는 북한 외교관들이 추방되었고, 포르투갈 정부는 북한과의 모든 외교관계를 단절하였으며 아랍에미리트도 북한과의 대사급 외교 단절을 선언했다. 심지어는 미얀마와 우간다 등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 국가들조차도 북한 외교관 추방 흐름에 동참하면서 북한에 등을 돌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 북한은 그야말로 국제사회에서 외딴 섬이 되어가고 있다.



출처 : 조선일보 2017년 10월 10일

9월 3일 6차 핵실험과 뒤이은 9월 15일 화성-12형 발사 이후 북한은 잠시 도발을 멈춘 채 내부 단속을 통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대한 대응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결국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및 중국의 대북제재 등에 반발하면서 11월 29일 새벽 화성-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면서 또 다시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북한은 12월 5일부터 나흘간 방북한 유엔 사무차장 제프리 펠트만에게 대북제재의 피해를 호소하고 유엔의 중재를 모색하는 등 유화적인 조치들도 동시에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2018년 전망 : 임박한 북한의 선택, 파국이나 구원이냐

파국과 구원 사이에서

2018년 한 해는 북한 핵문제가 파국의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것인가 아니면 그 어떤 구원의 국면으로 전환될 것인가 하는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과 실전배치라는 불편한 진실의 순간에 직면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만일 미국과 북한 사이의 상호불신과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몰이해가 심화되고, 더 이상 미국이 감내할 수 없는 북한의 도발이 실제로 감행되는 경우 우리는 군사적 옵션으로 상징되는 파국적 현실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기가 깊어질수록 구원도 가까이 온다”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위기의 심화 속에도 구원의 가능성은 역설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법이다.

우선 북한의 입장에서 정권수립 70주년 및 조국해방전쟁 승리 65주년을 맞는 내년 한해의 대외관계 관련 주요 상수는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 이미 완성을 선언한 국가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면서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를 인정받아야만 한다. 즉, 북한에게 더 이상 핵 포기란 없다. 둘째, 사상 및 정치강국과 군사강국 목표를 이미 실현한 만큼 이제 남은 것은 경제강국 건설뿐이다. 물론 이러한 상충하는 두 목표 모두는 젊은 지도자 김정은의 유일한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장기집권의 토대를 구축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결부된 것들이다. 따라서 내년 한해 북한의 대외정책도 결국 이러한 두 목표를 실현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위력을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어떠한 선택을 통해서든 현재의 대북압박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2018년 북한은 현재 국면을 주동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게 될 것이며, 아마도 내년 신년사 발표 및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전후한 시기에 가시화 될 북한의 선택, 즉 도발인가 평화공세인가 하는 선택이 내년도 북한의 대외정책 전반을 판가름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미관계 : 임박한 북한의 선택과 북미관계의 향배

누구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내년도 북한 외교정책의 핵심 역시 북미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내년도 북미관계와 관련하여 현재 북한에게 가능한 선택은 크게 보아 두 가지다. 첫째,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SLBM 추가 발사를 통해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가시화시키면서 강력한 대미 압박을 지속하는 것이다. 핵무력

고도화에 대한 북한의 강한 의지와 그간의 행태를 볼 때, 북한의 이러한 선택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미중 협력에 의한 대북압박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경우 미중 사이의 갈등 유발 및 국면전환을 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11월 29일 화성-15형 미사일 발사도 북한의 이러한 인식과 반응의 산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또한 핵무력 완성 및 실전배치라는 그들의 최종목표가 단기간 내에 성취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북한 나름의 시간 계산도 이러한 선택을 유인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현재의 위기 수준을 더욱 극대화시킬 것이며, 미국은 장차 도래할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군사적 옵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다. 이러한 선택이 현재 북한이 처해있는 고립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며 나아가서는 미국의 군사적 옵션 실행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으로서도 이는 선택하기 쉬운 대안만은 아니다. 다만, 북한이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미국의 군사적 옵션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거나 무지하다면, 이러한 상황도 얼마든지 도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게 보다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선택은 아마도 자신들의 주도 하에 북미 관계 개선에 나서는 두 번째 선택이 될 것이다. 만일 북한이 현재 한반도 위기 상황이 매우 심각하며, 주변국들의 협조를 통해 북미관계 개선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북한의 이러한 선택이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이 이미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으며, 내년 2월 평창올림픽이 개최되는 상황에서 대형 도발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년 초는 북한이 평화공세를 시도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은 내년 신년사를 통해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원칙적 의지를 천명하고 이후 정세를 보아가면서 평화공세를 통해 북미관계 개선을 주도해 나가고자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북미 접촉 및 러시아와 중국을 통한 중재외교를 시도할 것이며, 이미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필요한 경우 핵실험 및 미사일 관련 추가도발 중단과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선제적으로 선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공감각이 형성되고 있는 ‘쌍중단, 쌍궤병행’ 방향으로 북핵 관련 논의를 유도하

고자 시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예상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로는 첫째, 실질적인 핵보유로 인한 북한의 안보 자신감, 둘째, 누적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피로감, 셋째, 경제적 성과를 통한 김정은 정권 안정과 장기집권 기반 구축 필요성, 넷째, 미국의 군사옵션 실행에 대한 우려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첫째, 결코 비핵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둘째, 지금의 대북제재 국면이 지속되는 것을 원치 않고, 셋째, 미국과의 전쟁도 원치 않는다는 세 가지 조건들을 종합한다면, 위의 두 번째 선택만이 북한에게 합리적인 선택지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의 이러한 선택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실현될 수 있을지는 향후 미국의 선택에 달려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북한과 미국의 대화국면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핵보유 의지와 미국의 비핵화 원칙의 충돌로 그러한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미국 역시 북한 핵의 미 본토 타격 가능성이 현실화 되는 것을 감내할 수 없고 군사적 옵션의 실행이 매우 부담스러운 선택이라는 점에서, 그럼에도 이러한 순간의 도래가 목전에 와 있다는 점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북미 간 모종의 대화국면이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중재를 요구하거나 북미접촉에 나서고 있는 상황 등도 이러한 국면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북중·북러관계 : 북한의 중재외교와 중국과 러시아라는 출로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에서의 무력적 충돌을 원하지 않고 북한 역시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중재외교를 시도할 것이라는 점에서 내년도에는 북중 및 북러 관계가 보다 활성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도 시도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주변 지역인 한반도의 안정에 대한 공통의 이해관계와 북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러한 북한의 시도에 어떤 방식으로든 호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과 이에 대한 북한의 불만으로 북중 관계가 많이 소원해져 있기는 하지만, 북한은 불안한 내부경제를 안정시키고 체제 생존을 위해 대중관계의 회복을 시도할 것이다. 물론 19차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집권 2기를 위한

강력한 내부 기반을 구축한 중국 역시 북핵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협상국면 조성을 시도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최근 밀접해지고 있는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북핵 관련 중재외교 시도 및 외교와 경제 관계의 다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북핵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러시아 역시 이에 호응해 올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위기고조 이후 북미대화의 장을 열기 위해서 미국과의 직접 접촉 시도는 물론 중국·러시아의 중재를 통한 ‘중재 외교’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시도들은 만일 그것이 성사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를 고착화 시키고 이를 통해 대북제재에 집중된 국제 공조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북일관계 : 또 하나의 변수?

내년에도 북일 관계는 기본적으로 북미관계의 향배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북한과 일본 사이에는 납치자 문제나 국교정상화와 같은 독립적인 이슈들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금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제재 강화에 미일 양국이 합의한 만큼 당분간 일본의 대북 강경정책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자국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당분간 대북 강경정책이 고수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북한은 정세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납치자 이슈를 매개로 한 대일 접근을 또 다시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북한은 단기적으로는 강화되는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야기하고 장기적으로는 북일 국교정상화를 통해 외교적이고 경제적인 고립 상황을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할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일본 역시 정세 변화에 따라 동북아 지역에서의 일본 영향력 확대, 납치자 문제 해결, 미국의 군사적 옵션 실행에 대한 우려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미 관계의 파국과 구원의 가능성이 교차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향후 북한과 일본의 선택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 최근의 엄중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동년 10월 7일 노동당 중앙위원

회 7기 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데서 엿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김정은 정권은 대북압박과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현 정세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내년에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북한의 적극적 대외정책도 어떤 형태로든 빠르게 가시화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내년 한해는 우리에게 한반도의 파국과 구원의 가능성이 교차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대남전략과 남북관계

채규철

1. 2017년 평가 : 북핵문제와 한반도 정세

북한의 핵전략과 궁극적 목표

현재 북한은 2가지의 국가적 과제에 직면해있다. 외부 위협으로부터 체제의 안전을 담보하는 동시에 경제회생을 통해 주민생활을 안정시키고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것이다. 북한은 체제의 안전보장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해왔지만 문제는 그것이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를 유발하여 외교적 고립과 경제침체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한다면 체제의 안전보장과 대규모 원조 제공을 약속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그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인식과 입장 때문이다.

먼저 북한은 핵폐기는 可視的인데 비해 안전보장 공약은 不可視的인 것이어서 ‘확실한’ 보장이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과거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간 등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력침공을 감행했던 전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한·미의 안전보장이 확실한 것이라고 해도 북한으로서는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북한이 외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경제회생을 시도한다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개혁개방 정책이 동반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체제전환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휴전선 너머의 ‘고도로 발전된’ 라이벌의 존재를 고려한다면, 북한은 아마도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은 체제의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은 채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즉,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받으면서 핵군축 협상을 통해 일부의 능력을 폐기하는 대신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북한의 입장은 이미 재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2007년 12월 5일자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설명에서 잘 나타나 있다. 당시 그는 2.13 합의의 3단계 핵프로그램 신고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완전히 철회하고 신뢰가 조성되어 핵위협을 더는 느끼지 않을 때에 가서 (기존 보유) 핵무기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현단계에서는 현존 핵계획의 포기 문제 즉, ‘핵무기를 더 만들지 않는 문제’, ‘핵이전을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¹⁾

북한의 입장은 2008년 6월, 프리처드(J. Pritchard) 前대북 특사의 기자회견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같은 해 4월말 방북하여 당시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 면담 내용을 소개한 바 있는데 이에 의하면, 박외무상은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한 후에야 핵무기 감축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으며 2.13 합의 제3단계 조치와 관련해서는 “기존 보유 핵무기·물질, 장거리 미사일 및 인권문제 등은 아직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²⁾ 이는 곧 ‘부분적 비핵화’를 통해서 핵보유와 대미 관계정상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체제 생존과 나아가 한반도의 적화통일에 있고 전략의 최종적인 지향점 역시 한국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은 일단 미국을 핵협상의 우선적 대상으로 삼고 있다. 북한은 배후의 미국이 존재하는 한 자신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한반도에서 미국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체제 생존과 적화통일 달성의 핵심적 관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문제는 ‘어떻게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낼 것인지’에 집중될 것이다.

북한의 주한미군 구축 방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재 핵문제로 인해 조성된 남북한과 미국 사이의 모순적인 상황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1) “미국의 ‘시한부계획’, 열쇠는 ‘재빠른 행동’”, 『조선신보』 2007.12.5.

2) “北 핵무기 보유한 채 대미관계 개선 원해”, 『조선일보』 2008.6.6.; Glenn Kessler, “N. Korea Taking Tougher Stance, Ex-Envoy”, *The Washington Post*, 2008.6.3.

북한은 미국과의 외교안보적 접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미 핵협상을 통해 미국의 안보 우려사항을 해소해 주는 대가로 미국의 對북핵정책을 ‘억지’에서 ‘관리’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려 할 것이다. 이는 앞서 김계관 부상이 밝힌 바와 같이, 미래 핵에 대한 전면적인 사찰을 수용하여 미국의 핵확산 우려를³⁾ 해소해 주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과거 핵의 보유를 묵인받은 채 대미관계정상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북한은 한미간 대북 위협인식의 차이점을 비집고 그 틈새를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이 분명해 보이지만, 미국의 대북 위협인식은 여전히 잠재적일 뿐이어서 협상을 통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여지가 남아있다. 이런 점을 활용하여 북한은 美 본토에 대한 직접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미국의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면서 양측간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테면,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대미 위협 능력을 포기하는 대신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것이다.

요컨대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전략의 우선적인 대상은 미국이지만 궁극적인 타겟은 한국이다. 북한에게 있어서 한국은 ‘타도하지 않으면 타도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경쟁자이다. 더구나 한국의 국력은 북한과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이며 한국군은 날로 첨단화·정예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통일을 정책 목표로서 공공연히 추구하지 않는다고 해도 북한으로서는 흡수통일에 대한 공포감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핵개발 목적이 ‘자위적 수단’이라는 그들의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북한은 핵무기의 군사적 가치 외에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핵무기가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며, ‘눈엍가시 같던’ 주한미군을 몰아내어 결국 통일의 결정적인 동력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3)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느끼는 현실적인 위협은 직접적인 대미 공격 보다 핵이전 가능성 때문일 것이다. 북한이 체제의 존망을 감수하면서 대미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가난하고 은밀한 체제인’ 북한이 테러리스트나 불량국가들에게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이전할 개연성은 농후하다. 실제로 그 동안 북한이 파키스탄이나 이란·시리아 등과 불법적인 거래를 해왔다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다.

코리아 트라이앵글 2017

북한은 지난 2013년 3월 이래 핵무력·경제건설 병진 노선을 공식화했고 그에 따라 2016년에만 해도 2차례의 핵실험과 16차례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시도하는 등 강경책으로 일관했다. 김정은은 2017년 새해 벽두부터 “대륙간 탄도로켓트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음을 밝히면서 “전쟁연습소동을 걷어 치우지않는한 핵무력을 중추로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 해 나갈 것”임을⁴⁾ 공언함으로써 미국의 제재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핵타격 능력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임을 예고했던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새로 출범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게도 북핵문제의 해결은 발 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을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것임을 선언했다.⁵⁾ 급속히 강경 기조를 띄기 시작한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대안이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고 하면서 공공연히 대북 선제공격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의 강경한 정책은 북한의 반발을 불러왔을 뿐이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초강경 대응 조치를 경고하는가 하면 주한 미군기지와 청와대를 초토화하겠다고 위협했다. 심지어 양측 지도부까지 나서 전쟁을 위협하는 막말 설전을 벌이는 바람에 세간에서는 ‘4월 한반도 전쟁’ 설까지 나돌 정도였다.

북미관계가 이와 같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한국내에서는 중대한 정치적 변화와 함께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국정농단으로 구속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최종 결정된 이후 5월 9일 대선에서 진보 진영의 문재인 후보가 승리했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연설을 통해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4) “2017년 김정은 신년사”, 『로동신문』 2017.1.1.

5)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자발적 협력을 견인하기 위해 ‘중국이 해결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할 것’이라고 하여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마저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Joseph Rogin, “Trump’s North Korea policy is ‘maximum pressure’ but not ‘regime change’”, *The Washington Post*, April 14, 2017.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하여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남다른 의지를 피력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그 동안 단절된 남북관계와 강경 일변도로 치닫던 북핵 사태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더구나 북한도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을 다짐했던 터여서⁶⁾ 이 무렵, 남북관계의 해빙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 보였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하는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이목이 북한에 집중되었지만, 그런 기대감이 좌절되는 데는 결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북한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연이어 탄도미사일(화성-12형 및 북극성-2형) 발사로 대응했고 그로 인해 양측 관계는 첫 대면도 하기 전에 파열음부터 내게 되었다. 이에 새 정부는 북한측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하면서도 남북관계의 단절이 지속되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지만, 북한은 미사일 발사는 ‘자위적’ 조치임을 강변하면서 오히려 압박과 대화의 병행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화와 대결은 양립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비록 남북관계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기는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남북간의 민간교류 추진과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 등 관계개선을 위한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측에 우리 민간단체들의 방북 추진에 호응해 나올 것을 요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북한이 핵포기 결단을 실천한다면 적극 도울 것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호응하기 보다 핵능력 고도화라는 목표를 향해 예정된 스케줄을 이행하는데 몰두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유도하는 노력과 함께 북한의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두 가지 과제를 안게 되었다.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

6) 북한은 신년사에서 “북남관계 개선은 평화와 통일로 나가는 출발점이며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로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북과 남 사이 첨예한 군사적 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2017년 김정은 신년사”, 앞의 신문.

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7.1 공동성명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할 것을 합의하고,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 이는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운전자’ 역할을 자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기라도 하듯이,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새로 연구개발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와 함께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 탄도로켓을 보유한 당당한 핵강국으로 세계의 면전에 눈부시게 솟구쳐 올랐다”고 발표했다.⁷⁾ 이는 북한이 시도한 최초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로서 기술적으로는 미국 알래스카와 서부 지역을 사정권내에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 진일보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7월 6일 키퍼버재단 초청 연설,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통해 대북정책의 방향을 천명했다. 이에 의하면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이끌기 위한 5대 원칙으로서 첫째,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고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둘째,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추구 셋째,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평화협정의 체결 넷째, 한반도 新경제 지도 구상 다섯째,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먼저 쉬운 일부터 해나갈 것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당장의 현안으로서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 및 성묘 방문과 북한 선수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에서 상호 적대행위 중단, 남북간 접촉 및 대화 등을 촉구했다. 이어 올바른 여건이 갖춰진다면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핵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한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7)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이룩한 주체조선의 위대한 승리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 『로동신문』 2017.7.4.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은 한마디로 냉담한 것이었다. 북한은 “미국의 핵항공모함 타격단이… 연합해상훈련이니 뭐니 하고 미친듯이 돌아치고 핵전략폭격기편대가… 사상 전례가 없는 실탄투하훈련까지 벌여놓고있다”고 하면서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우리의 핵보유를 집요하게 걸고들며 북핵폐기를 조선반도평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피대를 돌구는 것은 흑백을 전도하는 파렴치한 궤변”이라고 격렬히 비난했다. 그러면서 “남조선의 현당국이 전임자들과 달리 북남관계개선과 대화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지금껏 미국에 추종하고 극악무도하고 반인륜적인 반공화국제재와 압살책동에 가담해온 죄행부터 똑바로 반성하고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진실로 충실하여 동족과 끝까지 손잡고나가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여야 한다”고⁸⁾ 주장했다.

북한의 입장이 이처럼 부정적인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베를린 구상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요구했던 남북 적십자회담이나 남북 군사당국회담은 단지 황야의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었다. 오히려 북한은 7월 28일 또 다시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마치 문재인 정부를 무시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였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한국으로서도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한미 양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는 외에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대화 보다 압박에 초점이 모아진 만큼 문재인 정부로서도 이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북한의 거듭된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안보리는 결의안 2371호를 채택하고 제재를 강화했지만 북한은 정부 성명을 통해 ‘자주권 침해’, ‘미국의 압살책동의 산물’이라고 반발했고 인민군 총참모부 또한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계획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경고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은 더 이상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며 “그들은 지금까지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⁹⁾ 하여 전쟁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러자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통해 꿈을 포위 사격하는

8)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진로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로동신문』 2017.7.15.

9) Jacob Pramuk, “Trump warns North Korea threats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August 8, 2017, <https://www.cnn.com>(검색일 : 2017.11.7)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 ‘서울을 포함한 1, 3야전군 지역의 모든 대상들을 불바다로 만들’ 것임을 위협하기까지 했다.

사태가 이처럼 엄중해지자 한국으로서도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광복 72주년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된다”고 하면서 북한측에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없이도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북한이 기존의 남북 합의의 상호 이행을 약속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합의를 제도화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었고 그런 점에서 8월말 실시된 한미 을지프리트엄가디언(UFG) 훈련은 ‘울고 싶은 북한의 뺨을 때려준’ 셈이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규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일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던 것이다.

북한의 대응은 더욱 대담해졌고 그것은 9월 3일 제6차 핵실험으로 표출되었다. 북한은 이튿날 핵무기연구소의 성명을 통해 “대륙간 탄도로켓트 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성공은 우리의 주체적인 핵탄들이 고도로 정밀화되었을뿐 아니라… 우리의 핵무기설계 및 제작기술이 핵탄의 위력을 타격대상과 목적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주장했다.¹⁰⁾ 이에 안보리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 만장일치로 결의안 2375호를 채택했지만, 북한은 제재 결의는 ‘(핵개발의 길을) 더 빨리 가야 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하는 계기’라고 함으로써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남북한과 미국의 갈등은 유엔 무대로까지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72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도높고 단호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 대륙간 탄도로켓트 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 『로동신문』 2017.9.4. 미국의 전문가들도 북한의 발표 내용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그들은 북한이 공개한 땅콩형의 탄두 모형으로 미루어 볼 때 2단계의 수소폭탄이 가진 특징들과 일치하며, 폭발 당시 지진파 규모도 6.3에 이르러 1년 전 제5차 핵실험에서 보여주었던 위력의 10배나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한다. Jobby, Warrick, “North Korea dffies prections -again- with early grasp of weapons milestone”, *The Washington Post*, September 3, 2017.

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북한이 이제라도 역사의 바른 편에 서는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한층 직설적이었다. 그는 월비어 살해와 김정남 독살사건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야만적인 인권실태를 고발했고 또한 핵무기와 미사일로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totally destroy) 외에 대안이 없다”고 하면서 김정은을 직접 겨냥하여 “로켓맨(rocket man)은 지금 자신과 체제를 위해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조롱했다.¹¹⁾

그러자 김정은도 즉각 개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대응했다. 그는 “트럼프가 세계의 면전에서 나와 국가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며 우리공화국을 없애겠다는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최고의 초강경대응조치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다”고 하면서 “미국의 늑다리미치광이를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라고¹²⁾ 격렬한 어조로 비난했다. 김정은의 초강경 대응조치 대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태평양 상의 역대급 수소폭탄일 것’이라고 하면서, 최고지도부에 대한 참수 작전이나 군사적 공격의 기미를 보이기만 하면 ‘가차없는 선제행동으로 예방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여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북한의 호전적이고 위험한 행태는 결과적으로 한미 양국을 더욱 결속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에 11월 7일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했다. 나아가 한미 양측은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조율된 압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완전한 지지를 확인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한국의 방위능력 확보를 위한 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동맹의 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던 것이다.¹³⁾

북한은 9월 초 제6차 핵실험을 시도한 이래 별다른 도발 징후를 보여주지 않

11) “Remarks by President Trump to the 72nd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eptember 19, 2017, <https://www.whitehouse.gov>(검색일 : 2017.11.8)

12)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성명”, <http://news.hankyung.com>(검색일 : 2017.11.8)

13) “한미 공동언론발표문 전문 ‘트럼프 방한 결과’”, <http://news.chosun.com>(검색일 : 2017.11.8)

았다. 그로 인해 일각에서는 대화 국면이 시작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도 그것은 단지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11월 29일 새벽 3시 17분, 북한은 전격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정부 성명을 통해 “화성-15형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지난 7월에 시험발사한 화성-14형보다 전술기술적제원과 기술적 특성이 훨씬 우월한 무기 체계”라고 하면서, “우리가 목표한 로켓무기체계개발의 완결단계에 도달한 가장 위력한 대륙간 탄도로케트”임을 강조했다.¹⁴⁾ 이어 “대륙간 탄도로케트 화성-15형 시험발사를 통하여 우리 공화국은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로케트로 미국본토전역을 마음먹은대로 타격할수 있다는 것을 온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다”고 주장했다.¹⁵⁾

그와 같은 북한의 주장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화성-15형 미사일이 이전의 ICBM급 미사일에 보다 기술적으로 진일보한 형태라는데 대체로 이견이 없다. 그에 의하면, 화성-15형이 정상궤도로 비행했다면 사거리가 13,000km에 이르러 美본토 전역을 타격권 내에 포함할 수 있고, 500kg 중량의 탄두를 탑재하더라도 사거리는 8,500km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¹⁶⁾ 그런 의미에서 화성-15형 미사일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2017년 내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는 각국 지도자들의 자극적인 언사와 위협적인 행동이 상대의 적대적 반응을 유발함으로써 상황을 한층 악화시킨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이 위험한 이유는 다분히 충동적인-여기에는 물론 의도된 측면도 있겠지만-형태로 여과없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에는 마치 거울 속에 투영된 자신의 흥분된 모습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른바 ‘거울 이미지(mirror image)’ 현상마저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의 호전적인 태도는 상대의 적대 행동을 유발하고 북한이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새형의 대륙간 탄도로케트 시험발사 성공”, 『로동신문』, 2017.11.29.

15)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민족사적대경사”, 『로동신문』, 2017.11.30.

16) Michael Elleman, “North Korea’s Third ICBM Launch”, 38 North, November 29, 2017, <http://www.38north.org>(검색일 : 2017.12.6)

다시 공격적 행위로 대응하는 형태의 악순환 즉,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다.

2. 2018년 전망 : 점증하는 위협, 불확실한 미래

북핵문제 : 비핵화 협상과 핵군축 협상의 기로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미국의 의지는 어느 때 보다 확고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례가 없을 정도의 초고강도 제재와 함께 항모전단과 전략자산을 동원하여 수시로 무력시위를 전개하는 등 북한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그 의도는 물론 북한체제를 枯死 상태로 몰아넣어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는데 있다. 북한 역시 전략적 및 전술적 용도로 활용가능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미 타격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하고, 미국과 최종 담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것이다.

북미 양측간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게 되면 결국 대화에 의한 해결이 모색되겠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회담의 주도권으로서, 이는 향후 북핵문제의 향배와 한반도 정세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주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변수는 무엇일까? 그것은 (미국의 제재를 버텨낼 수 있는 능력으로서) 북한체제의 내구력과 (미국의 전략적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美본토 타격 능력의 확보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북한의 체제 내구력을 상수 요인으로 간주한다면, 실질적인 변수는 ‘신뢰할 만한’ 美본토 타격 능력 - 즉, ICBM의 대기권 재진입과 탄두의 정밀유도 제어 능력¹⁷⁾ - 일 것이다.

2017년 7월 화성-14형의 시험발사 당시만 해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신뢰할만한 ICBM 능력을 확보하는데 1~2년 이상의 시일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17) 데이비드 라이트(D. Wright)는 “북한이 갖고 있는 역량 내에서 재진입 기술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일부 기술의 경우는 특정 부품이 필요하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필요한 부품 가운데 북한이 구하지 못할 품목은 없어 보인다”고 주장한다. 또한 북한이 미국내 대도시들을 타격 목표로 삼는다면 탄두의 정밀유도 제어 능력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북한 ICBM 프로무대 올라서…대기권 재진입 문제 없어”(2017.12.4.), <https://www.voakorea.com> (검색일 : 2017.12.6.).

예상한 바 있으나,¹⁸⁾ 화성-15형의 성공적인 시험 이후 그 기간은 더욱 단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엘리만(M. Elleman)은 북한이 화성-15형 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선언할 수 있으려면 대기권 재진입 환경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탄두 보호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향후 4~6개월에 걸쳐 2~3 차례의 추가 시험발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¹⁹⁾ 또한 CIA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ICBM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3개월의 기회(three-month window)’가 남아있으며, 그 이후 북한은 핵탄두를 장착한 ICBM으로 워싱턴을 포함한 미국의 도시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한다.²⁰⁾

그러나 북한 탄도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능력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가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은 지난 11월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최근까지 미사일 엔진 실험을 수차례 진행했으나 ICBM을 완성하지는 못한 단계”라고 하면서 대기권 재진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데 한계에 봉착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²¹⁾ 그러면서도 화성-15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3번에 걸쳐 ICBM급 미사일이 발사됐다. 그 중 가장 진전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하여²²⁾ 북한의 탄도 미사일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美본토 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며, 특히 2018년이 북핵문제의 고비로서 북미간 치열한 장외 협상전쟁이 전개될 것임을 시사한다.

북미간의 기싸움 양상과 관련하여 우선, 미국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상

18) John Shilling은 북한의 ICBM이 미국 서부 해안의 군사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확보하는데 1~2년이 더 소요될 것이며, 특히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유인 장치까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5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John Schilling, “What is True and Not True About North Korea’s Hwasung-14 ICBM : A Technical Evaluation”, July 10, 2017, 38 North, <http://www.38north.org> (검색일 : 2017.11.14)

19) Michael Elleman, “The New Hwasong-15 ICBM : A Significant Improvement That May be Ready as Early as 2018”, 38 North, November 30, 2017, <http://www.38north.org> (검색일 : 2017.12.6)

20) Mark Seddon, “Have we got just three months to avert a US attack on North Korea?”, *The Guardian*, December 4, 2017.

21) “국정원 ‘北,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개발 한계에 봉착’”, 『연합뉴스』 2017.11.17.

22) “국정원 화성-15형, 北의 가장 진전된 ICBM… 발사 직후 파악”, 『중앙일보』 2017.11.29.

정해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이 대미 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혹은 재정적 문제로 차질이 빚어진 채 체제 존망의 위기의식을 절감한 나머지 불가피 ‘휴전’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북미 회담은 비핵화 협상의 성격을 띠게 되겠지만, 북한의 회담 참여 목적은 단지 ‘시간 벌기’에 있으므로 회담장 밖에서는 여전히 핵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 매진할 것이다. 따라서 모처럼 대화와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더라도 양측간의 협상은 疑似 협상이 될 수밖에 없어 지루한 공방전이 지속될 것이다. 설사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약속을 담보할 수 없는 형식이거나 동결 조치 등의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극복하고 2018년 중에 기존 ICBM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여 신뢰할만한 대미 위협 능력을 입증하게 된다면, 북핵문제의 국면은 反轉되고 북미 회담 또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대화에 의한 해결’을 요구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이에 호응하지 -군사행동을 모색하지 않는 한-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북미간의 회담은 어디까지나 핵군축 협상이 되어야 하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회담은 즉각 중단될 것임을 위협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고의적으로 위기를 조성하거나 심지어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을 태평양 상공으로 날려보내는 이른바, 레드 라인(red line)을 넘는 행동마저 불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의제를 선점한 북한은 결정적으로 유리한 협상 고지를 장악했다는 판단 하에 트럼프 행정부와 본격적인 핵담판을 시도할 것이다. 즉, 북한은 체제의 안전 담보를 위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미국의 안보 우려를 고려하여 핵이전 금지와 부분적 비핵화를 공약할 의지가 있음을 밝힐 것이다. 그러면서 반대 급부로서 대미 관계정상화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다. 이런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를 딜레마에 빠트릴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능력을 억지할 수 있는 묘안이 없는데다²³⁾ 특히 ‘가난하고 은

23) 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 10월 말 보고서를 통해 북핵 대응을 위한 7가지 군사 옵션을 제시하면서도 각 옵션들마다 한계가 있음을 솔직하게 밝히고 있다. 상세 내용은 Kathleen J. McInnis, Andrew Feickert, Mark E. Manyin, Steven A. Hildreth, Mary Beth D. Nikitin,

밀한' 북한에 의해 무책임한 핵확산과 그로 인해 초래될 비극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의 3가지 시나리오

북한은 대남전략을 대미전략의 종속변수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해왔다. 그런 판단은 남한지역을 美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간주하려는 인식에 근거하여 그 기원을 해방 이후 미군정 통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한국의 주권이 회복되고 국가적 자율성이 크게 신장된 이후에도 거의 변함없는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그에 따라 북한은 오늘날 체제의 생존과 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면서도 그것은 다만 미국과의 핵담판을 통해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한미동맹을 무력화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대남전략을 대미전략의 하위변수로 인식하는 경향 때문에 북한의 대남 태도와 그로 인한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의 향배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에서 검토된 북미 회담 결과와 양측간의 예상되는 관계는 2018년의 남북관계에도 반영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내년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① 미국 주도의 비핵화 협상에 북한이 호응하고 남북관계에 일시적 해빙이 도래하는 경우 ② 북한의 핵군축 협상 요구를 미국이 거부함으로써 북미간 대치 상태와 남북관계의 불안정한 국면이 지속되는 경우 ③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 요구를 미국이 묵인한 결과, 한국의 정치사회에 '핵 그림자'의 전조가 나타나는 경우 등 3가지 시나리오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전개될 것이다.

우선, 남북관계의 「일시적 해빙」 시나리오이다. 앞서 국가정보원의 평가처럼, 북한이 ICBM 개발과정에서 중대한 난관에 봉착해있다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로부터 숨돌릴 여유를 확보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은 대남관계를 돌파구로 삼아 기존의 대결 국면을 전환하고자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특히 2~3월로 예정된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 의사를 타진할 가능

Emma Chanlett-Avery, "The North Korean Nuclear Challenge : Military Options and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October 27, 2017.

성이 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구정 맛이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선제 제의하는 등 대대적으로 평화 공세를 전개하면서 한미 합동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연습의 중단을 요구할 것이다.²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남관계의 물꼬를 튼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구호와 함께 민족공조 분위기를 대대적으로 고양하여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그런 바탕 위에서 북한은 5.24 조치 해제와 개성공단 사업 재개 문제 등에 관한 논의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희석하고 한미관계의 틈새를 확대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대남 관계개선 의지만 -그 진의와 상관없이- 확고하다면 남북한간 교류협력 사업은 활성화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한국에게는 최선의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북한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단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둘째는 남북관계의 『불안정성 지속』 시나리오이다. 이는 미국과 북한이 각각 비핵화 협상과 핵군축 협상을 고집함으로써 강경 대립 상태가 지속되고 그로 인해 남북관계의 불안정 상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게 되는 경우로서 아마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일 것이다. 여기에서 북한의 대남정책은 도발과 대화를 병행하는 양면전술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즉,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대남 도발을 자행하여 고의적으로 위기 국면을 조성할 수도 있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예봉을 피하고 국면 타개를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유화적인 접근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는 도발과 긴장 분위기 속에서도 제한적으로 교류·협력이 병존하는 형태의 파행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남북관계의 불안정 상황이 만연되는 가운데 북한은 한국내 국론분열을 유도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향후 한국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전술핵무기 재반입이나 독자 핵무장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간 혹은

24)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한미 연합군 사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 관계자 ‘평창올림픽 기간 한미 군사훈련 중단 고려’”, 『연합뉴스』 2017.11.23.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유엔 총회에 올림픽 기간중 휴전 결의를 제안했고 북한을 포함한 미국·중국·러시아 등 주요 관련국의 만장일치로 휴전 결의안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IOC 또한 북한 선수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경비 지불 등 지원 의사를 밝혔다.

보혁간의 갈등을 부채질하고, 이를 통해 정치사회적 혼란을 유발함으로써 정부의 원활한 정책결정을 방해하려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한미관계의 離間을 획책하기 위한 전술도 적극적으로 구사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유언비어를 통해 북핵 대응을 둘러싼 한미간의 정책적 차이와 불협화음을 침소봉대한다든지 혹은 북미간 및 미중간 직접 거래와 그로 인한 코리아 패싱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한미 동맹관계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는 등의 행태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남북관계에서 「핵 그림자의 前兆」 시나리오이다. 이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묵인 및 부분적 비핵화 요구를 미국이 수용하고 그 결과,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압박이 노골화됨으로써 남북관계에 ‘핵 그림자(nuclear shadow)’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는 한국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불용’ 입장을 고려할 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없으며 따라서 이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대응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능력을 방치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북미 양측이 핵문제에 대해 ‘암묵적으로’ 타협점을 모색하게 되면, 북한의 위협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무력화된 가운데 북한의 대남전략은 공세적이면서도 점진적인 형태로 표출될 것이다. 핵무기를 등에 업은 북한은 살라미 전술을 통해 한국의 목을 서서히 죄어둘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의 이해와 상충되는 정책에 대해 비토권을 행사하는 단계로부터 점차 자신의 요구를 강요하기 위해 무력 도발마저 서슴치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북한의 착취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 남북간에는 일종의 掠奪經濟 내지 寄生經濟 체제가 성립될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 한국 정치사회에는 ‘핵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채 전쟁의 공포와 불안감이 일상화될 것이며 급기야 한국은 ‘핵 인질’로 전락하는 암울한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국제

2017년 평가 : 스트롱 맨의 대립과 불안정의 증대

2017년 초 美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무대는 푸틴, 시진핑, 아베, 김정은 등의 스트롱 맨이 주도하고 대립하는 경합의 장으로 변모하였다. 트럼프 등장 초기 국제정치를 회자하던 ‘불확실성(uncertainty)’은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예측 가능한 수준의 상태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제정세는 세력균형과 안정을 찾기 위한 갈등과 타협, 도발과 충돌이 혼재된 한 해였다.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협력과 통합보다 대립과 갈등, 분쟁과 분열이 확산되고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은 증대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국제규범과 질서로부터 고립주의적 국익추구에 몰두했고, 중국은 시진핑 일인 지배 체제를 확립하면서 공세적 외교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아베는 의회 해산 후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헌법 개정을 향한 여정을 충실히 다져가고 있다. 푸틴 역시 2018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국내적 지지층을 다지는 한편 러시아의 부활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와 마주한 또 하나의 스트롱맨 김정은은 2017년에도 핵실험과 다양한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핵무장을 향한 질주를 가속화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2017년 주요국 및 지역 정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 미국은 혼돈과 갈등의 중심이었다. 국내적으로는 선거 때부터 제기되었던 러시아 게이트에 대한 특검수사와 인사난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발목을 잡았다. 대외정책에서는 선거 공약이었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추진을 시작으로, ‘여행 금지법’으로 알려진 이민법 개정 시도, 환태평양경제공동체

탈퇴, 파리기후협약 철회를 감행하였다. 특히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의 위치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는 선언은 중동 뿐 만 아니라 국제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2017년도 중국의 대내외정치의 모든 초점은 19차 당 대회에 성공 개최에 모아졌다. 19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은 1인 지배 권력을 강화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집권 2기의 자신감 있고 강력한 대내외정책 추진을 선포했다. 2017년도 중국외교는 이른바 ‘사해문제(四海問題)’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했으며 북한 문제를 제외하면 대체로 성공적이었다.

2017년 7월 일본 아베 총리는 동경도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승부수로 ‘국회 해산’을 선택했고 당초 예상과는 달리 자민당 공명당의 승리로 아베총리에게 장기집권의 길을 열어주었다. 아베총리가 추진해온 개헌이 실현된다면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만일 개헌이 현실화된다면 미국이 아닌 직접 당사자인 일본이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옵션을 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사시에는 한반도에 자위대의 진입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017년 러시아 푸틴정부는 對러 제재 해제와 침체된 경제 회생,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 위기관리, CIS권 영향력 제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러관계 탐색과 조정, 신동방정책의 가시적 성과 도출 등에 역점을 두었다. 푸틴 대통령의 정치권력은 9월 주지사 선거에서의 압승 등으로 더욱 공고화되었으며, 러시아 경제는 지난 몇 해에 비해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주었다. 또한 러시아 혁명 10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치러졌다.

2017년 중동 정세는 2월 미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남과 5월 트럼프 대통령과 사우디 살만 국왕과의 만남에서 큰 그림이 그려졌고, 이 만남을 통해 미국-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를 잇는 ‘3각 체제’가 형성되어 중동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종전까지 중동문제의 최대 이슈였던 시리아-이라크 정세는 IS(이슬람 국가)가 사실상 소멸됨으로써 새로운 공백이 발생되었다. 결론적으로 2017년 중동 정세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불가능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대중동 정책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패권경쟁으로 비롯된 ‘갈등의 연속’으로 평가된다.

2017년 아세안(ASEAN)은 창설 50주년을 맞이했다. 아세안 국가들은 역내에

서 가장 오래되고 풍부한 다자기구의 경험을 통해 아세안의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왔다. 한국 문재인 정부가 新남방정책에서 아세안을 4대국 지위로 끌어올리겠다고 천명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Indo-Pacific) 구상을 발표함에 따라 아세안은 ‘변방에서 중심으로’의 이동을 실감하는 한 해였다. 제31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 발전의 6대 우선 주제인 인간중심, 역내 평화와 안정, 해양안보 및 협력, 포용적 혁신성장, 아세안 탄력성, 지역협력 모델로서 아세안 등이 발표되었다. 또한 ARF(ASEAN Regional Forum) 회의에서는 2016년과 달리 북한문제가 부각돼 남중국해 문제는 수면 아래로 잠복한 측면이 있다.

2018년 전망 : 정점으로 치닫는 북핵문제와 각국의 선택의 딜레마 증대

2018년 국제정세는 안정에 대한 각국의 희구와 별개로 현실정치는 미·중 양강을 비롯한 열강들의 전략적 각축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트럼프의 예루살렘 수도 발언으로 중동정세의 긴장감이 고조될 것이며, 북핵 문제 역시 정점을 향해 치달으면서 동북아의 안보불안은 최고조에 다다를 전망이다. 그러나 불안이 증대될수록 관리와 조절을 위한 관련 당사국들의 물밑 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고, 군사옵션의 실행을 준비하면서도 무조건적인 대화로 북한에게 마지막 선택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2018년 북한 핵문제는 북한, 미국, 중국, 한국 등의 국가이익과 계산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게임의 최종라운드를 향해 달려가는 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ASEAN) 역시 ‘인도·태평양 구상’과 ‘일대일로’ 전략의 접점이 되면서 미·중 양국의 행복한 유혹과 동시에 선택의 딜레마도 증대될 전망이다. 요컨대 2018년 국제정세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향한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정세는 다음과 같이 전망된다.

2018년 미국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내적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내적으로는 공화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자신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선동적 발언을 강화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의 기치 아래 통상에서 양자 협정을 통한 보호주의를 강화 정책을 펼치고, 안보에서는

동맹들의 안보 부담 가중을 요구하는 행보가 지속될 것이다.

2018년 중국 국내적으로는 시진핑 사상의 전파와 당에 대한 엄격 통제가 강화될 것이다. 2018년 중국 외교는 그 동안 강조되던 ‘도광양晦(韜光養晦)’와 ‘유소작위(有所作爲)’를 뛰어넘어 ‘분발유위(奮發有爲)’의 방향을 추구할 것이다. 국제질서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 규범경쟁의 심화 속에서 북핵문제의 폭발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관계는 사드문제를 끌어안은 채 불안정한 발전을 모색할 것이고 북중관계는 냉랭한 현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세 전망과 관련, 2018년 9월에는 자민당 총재선출이 예정되어 있다. 2017년 총선에서 승리한 아베총리의 총재 선출이 확실시 되고, 2012년부터 추진해온 아베의 대내외 정책들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중국의 강대국화에 따른 미일동맹 강화를 축으로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자국의 안보강화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한편 경제분야에서는 안보이슈와 달리 중국,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이 전개될 것이다.

2018년 3월 러시아에서는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며, 푸틴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기로 해 2024년까지 집권 4기를 열어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2018년은 한·러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며, 2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6월에는 FIFA 러시아 월드컵이 예정되어 있다. 한·러 모두 국제 스포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피스메이커(peacemaker)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2018년 중동정세는 시리아, 이라크내 ‘포스트 IS’ 주도권 다툼, 이란 핵합의에 대한 재협상, 예멘과 레바논에서 사우디와 이란간 대리전 등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트럼프 대통령의 친 이스라엘 정책으로 인해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 대한 정착촌을 영구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이에 대해 팔레스타인의 반발이 심해져 제3차 인티파다(민중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아세안의 주요 쟁점은 중국과 남중국해 행동규범 채택을 위한 협상개시와 RCEP 협상 타결 모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미국 트럼프의 인도-태평양(Indo-Pacific) 구상과 중국 시진핑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의 본격화에 따른 아세안에서의 대립 가능성이 점증하면서 아세안의 선택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축하는 ‘미국 우선주의’와 새로운 국제 질서

김영준

1. 2017년 평가 : 혼돈과 갈등의 신질서

극우, 군인, 재벌들을 앞세운 오바마 지우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구성한 백악관 참모진과 내각은 그가 이끄는 미국이 어떤 모습일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백악관 참모진은 딸 이방카 트럼프, 사위 재러드 쿠슈너, 그리고 극우 언론인 출신인 스티브 배넌이 장악하였다. 내각에 임명된 이들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볼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은 사업가 및 금융권 출신 그룹이다. 이 그룹의 대표적인 인물로 엑손모빌에서 평생을 보내다시피 한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을 꼽을 수 있으며, 대형 금융회사인 골드만 삭스 출신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재무장관, 금융투자자이자 구조조정 전문가인 윌버 로스(Wilbur Ross) 상무장관이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 그룹은 정치인 및 공직자 출신이다. 교육장관 내정자 벤티 디보스(Betsy DeVos)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에 큰 기여를 한 러스트 벨트 지역에 속하는 미시간 주 공화당원으로 오랜 기간 활동해온 인물이다.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섰던 벤 카슨(Ben Carson)이 주택장관으로, 텍사스 주지사를 지낸 공화당 출신의 릭 페리(Rick Perry)가 에너지장관으로 재직 중이다. 교통장관으로 재직 중인 일레인 차오(Elain Chao)의 남편은 1985년부터 연방상원의원으로 재임 중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 의원이다. 차오 본인도 공직 진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아버지 부시 행정부 시기인 1989년부터 1991년까지 교통부 차관을 지냈고, 아들 부시 행정부에서는 노동장관을 역임하였다. 노동장관인 알렉스 아코스타(Alex Acosta)는 검사 출신이지

만 연방정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많아 사실상 관료 출신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그룹은 군 출신 인사들이다. 존 켈리(John Kelly) 전 국토안전장관·현 백악관 비서실장은 중부군 사령관을 지냈고, 국방장관인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는 군에서 퇴역 후 7년이 지나야 국방장관에 임명이 가능한 제도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선택을 받았고, 그 명망을 인정하여 의회 또한 특별법을 통해 그의 임명을 도왔다. 라이언 징키(Ryan Zinke) 내무장관의 경우 몬태나 주 의회를 거친 현역 연방하원 의원이지만 연방하원에서 첫 임기를 겨우 마쳤고, 사실상 경력의 대부분을 군 특수부대에서 보낸 인물이므로 군 출신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트럼프 1기 내각의 특징은 군 출신의 중용이다. 지금은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제임스 켈리는 중부군 사령관을 역임하였으며, 그의 아들은 이라크 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사하였다. 제임스 매티스는 군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장군 중 하나이다. 맥 마스터 국가안보 보좌관 역시 군에서 혁혁한 경력을 쌓은 인물이다. 내각에 속하지는 않지만 CIA 국장인 마이크 폼페오도 임명 전에는 연방하원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나,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군에 복무한 군 출신이다.

이처럼 군 출신들이 트럼프 내각 1기에 많이 진출을 하고 외교안보 정책에 영향을 발휘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을 들 수 있다. 민주주의적 리더십보다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위계적 질서에 익숙한 군 출신들을 선호하게 되었을 것이다. 또 군 출신들은 틸러슨 국무장관처럼 공직 경험이 일천한 일부 장관들과 달리 자신의 전문영역의 연장선상에서 행정부에 재직하게 되어 업무파악과 부처 장악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정권초기 다른 부처의 장관들에 비해 업무 성과가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수밖에 없었다.

빠르게 자신들의 역할을 찾은 군 출신들에 비해 선거 공신 그룹들은 부침을 겪었다. 대선승리에 기여한 스티브 배넌, 마이클 플린, 라인스 프리버스, 켈리언 켄웨이 등 공신 그룹과 가족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에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하였다. 스티브 배넌은 백악관 수석전략가를 맡으면서 국가안보실의 업무에서 직접참여 하였을 뿐 아니라 세바스찬 고카와 같은 자신의 측근 그룹을 국가안보

실의 요직에 임명하기도 하였다. 마이클 플린은 러시아 연계설, 워싱턴 D.C. 피자가게 총격 사건 등 선거기간 중 휩싸인 각종 구설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되었다. 백악관 비서실장에 임명된 라인스 프리버스는 공화당 당료 출신으로 백악관과 당의 관계를 책임졌다.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는 공식 직함도 없이 백악관에 집무실을 먼저 얻어 구설에 오르기도 하였으며 후에 대통령 보좌관으로 임명되었다. 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모든 길은 쿠슈너로 통한다고 할 만큼 관여하는 정책의 폭이 넓었다.

하지만 이들 가족과 측근 그룹은 러시아 스캔들로 사임하게 된 마이클 플린을 필두로 하나 둘씩 트럼프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라인스 프리버스, 스티브 배넌, 세바스찬 고카 등이 모두 공직을 내려놓았다. 정부 출범 초기 모든 정책에 개입하고 있다며 비판을 받았던 쿠슈너의 역할도 축소되었고, 이방카 트럼프는 명목상 백악관 참모이지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하게 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라인스 프리버스의 후임으로 비서실장에 오른 켈리의 영향이라고 보여진다.

존 켈리의 비서실장 취임 이후로 백악관과 행정부가 질서를 찾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자격 미달자들의 공직 기용이고, 다른 하나는 인사 공백이다. 환경보호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스캇 프루이트(Scott Pruitt)를 환경보호청장(EPA)에 임명한 것과 신경외과 의사인 벤 카슨(Ben Carson)을 주택도시 개발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자격 논란을 일으켰다. 또 다른 측면의 인사 난항은 공석인 요직이 너무 많거나 임명 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국무부를 들 수 있다. 현재 두 자리인 국무부 부장관(Deputy Secretary)직 중 한 자리는 행정부 출범 11개월이 넘도록 공석이며, 모두 여섯 석인 국무부 차관(Under Secretary)직은 다섯 석이 공석이다. 대북 문제를 다룰 동아태차관보나 한미 관계를 다룰 한국과장 직도 여전히 공석 상태이며, 주한미대사도 언제 임명이 될지 기약이 없다.

이처럼 측근들을 둘러싼 혼란을 겪는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선거기간 동안 내걸었던 공약들을 이행해나가고 노력해왔다. 그가 이행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약은 이민 관련 정책이다. 그는 ‘여행 금지’ 행정명령을 통해 사실상 이슬람 6개국 출신들의 미국입국 제한을 시도 하였다. 또 선거기간 중 멕시코와 갈등을 빚었던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위해 미 세관국경보호국

(CBP)이 입찰을 진행하여 총 6개의 건설 도급업체를 선정하였고, 현재 샌디에고 인근 국경을 따라 시제품 건설이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임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정책 폐기에도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행정명령을 발동해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불법 입국해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들의 의지에 의해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추방을 유예하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조치를 내렸다. 이후 2년마다 연장되어 왔던 이 조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폐기를 선언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동안 의회에서 입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공을 넘겼다.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함과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적 이민자들을 제한하는 정책도 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에 시행하던 ‘다양성 사증 추첨제도(Diversity Visa Lottery)’를 폐지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학력과 기술 등 재능위주의 이민 정책을 통해 이민자들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주의(Merit-based) 이민제도’를 제안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새 이민 법안을 입법화 하고자 나선 이들은 공화당 상원 의원인 톰 코튼(아칸소)과 데이비드 퍼듀(조지아) 이다. 이들은 이미 영주권 발급을 연 100만명에서 절반으로 줄이는 이민개혁법안(RAISE·고용 강화를 위한 미국이민 개혁 법안) 발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있다. 이들이 발표한 이민 법안의 핵심은 미숙련, 저임금 노동자들의 유입을 제한하여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새 이민 법안에 대해 “이 경쟁적인 (이민)신청 프로세스는 앞으로 영어를 할 줄 알고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금전적 능력이 있으며 우리 경제에 기여할만한 기술을 가진 이들을 우대”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정책으로 여기는 또 다른 안건은 세금 문제이다. 임기 초부터 주창해온 감세안을 지난 12월 2일 상원에서 총원 100명, 재석인원 100명,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트럼프의 감세안은 현재 35%인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는 등 각종 세금 감면안을 담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약 1조 5000억달러에 달하는 감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이대로 시행된다면 이는 미국에서 31년 만의 최대 감세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연방 하원의 감세안과 연방 상원의 감세안이 차이가 있어 미국 의회법상 상하

양원이 막판 수정 작업을 거쳐 최종 법안을 마련하고 다시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공화당이 양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서 통과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세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또 있다. 바로 일명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 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 강제하고 있는 의료보험 의무 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몇 차례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의회에서 번번이 좌절되었다. 따라서 이번 감세안이 현재의 내용대로 통과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세금 감면과 오바마 케어 철폐를 동시에 이뤄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 지우기 행보는 가속화 될 것이다.

선거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러시아 스캔들은 올 한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은 붙잡은 악재로 작용하였다.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낙마 시켰던 러시아 스캔들은 멀리 특검의 조사가 진전되면서 확산 국면이다. 멀리 특검은 트럼프 선거 대책본부장을 역임한 폴 매너포트와 트럼프 선거본부에서 대외정책을 담당 하였던 조지 파파도풀러스를 돈세탁, 위증, 미국에 대한 역모 죄등 다양한 죄목으로 기소하였다. 조지 파파도풀러스에 이어 마이클 플린도 특검에 협력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러시아 측과의 만남을 지시하였다는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트럼프 일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자 민주당 대선주자에 대한 특검도 이뤄져야 한다고 역공을 제기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해 3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는 2013년 러시아 국영 기업에 미국 광산업체 ‘우라늄원’이 매각된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이 매각으로 러시아가 미국 우라늄 비축량의 20%를 통제하게 되었고, 매각의 배후에 클린턴 재단이 있다고 주장한다. 클린턴 재단이 기부금을 받은 대가로 이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다. 국가의 공무와 관련된 사안이 개인 이메일을 통해 오갔으며, 당시 FBI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혹제기이다. 세번째는 민주당전국위원회(DNC)와 클린턴 대선 캠프가 선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추문과 관련된 파일 작성에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이 특검을 임명하여 이 내용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들에 대한 특검 조사를 몰타기하기 위한 수작이라고 맞서면서 혼전을 벌이고 있다.

힘과 이익 중심의 대외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은 힘과 이익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안보의 영역에서는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경제와 통상의 영역에서는 ‘미국의 이익 우선(America First)’을 추구하는 대외정책을 펼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력을 키워 안보를 지키겠다는 미국 보수주의적 안보관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8 회계연도 예산에 국방 예산을 540억 달러(약 61조 원)를 증액한 6080억 달러(약 684조원)를 책정하였다. 이는 2017 회계연도에 반영된 국방예산에 비해 약 10% 정도 증가한 금액이다. 우리 정부의 한해 국방예산이 약 40조원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 한 해 국방예산의 1.5배 정도를 증액한 것이다. 대선과정에서 군함과 전투기를 늘리고, 육군 병사 5만명과 해병대 1만 5000명을 증원할 것을 공언하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증액된 국방예산을 핵무기 현대화와 해군력 증강 등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반해 비국방 분야의 대외 정책 관련 예산은 대폭 감액되었다. 특히 해외 원조와 환경 분야 등에서 예산 삭감 폭이 크다. 이 같은 예산 분배의 변화는 결국 국무부의 역할과 영향력 축소로 귀결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맹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방위비 지출을 줄이고 동맹국들의 기여를 증대시키겠다는 자신의 선거기간 동안의 공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과 한국은 안보를 무임승차 하려한다는 비난의 단골 대상이었다. 전통적인 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적 입장은 자국의 안보는 자국이 지켜야 한다는 안보 고립주의와 맞물려 동맹 신뢰의 위기를 낳았다. 정부 출범 직후 매티스 국방장관과 Tillerson 국무장관이 우방국들을 방문하여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재확인을 하는 등 대선 기간 동안 고조되었던 신뢰감 상실을 회복하려는 노력도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의 돌발적이고 공격적인 언사들은 외교안보 담당자들의 노력을 감쇄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오바마 행정부의 흔적 지우기를 대외정책에서도 시행하

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란과의 핵합의와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라고 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이란과 체결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비판적 입장을 보였으며, 이란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고 있다는 IAEA의 점검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군 시설 사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과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란의 핵합의 준수를 ‘불인증(decertify)’할 것을 선언하고 의회에 이란 핵합의에 대한 결정을 요구하였다. 미 의회는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란 핵합의의 지속 또는 파기 등의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 결정에 따라 중동의 정국은 요동 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는 오바마 대통령의 또 다른 외교적 업적으로 여겨져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와 관계복원을 선언한 후 여행, 통상 등 기존 제재를 완화 및 폐지하는 등 쿠바에 일방적으로 양보하였고, 이는 미국에게 불평등한 것이라는 비판을 해왔다. 작년 쿠바 아바나 주재 미 대사관 직원들과 가족들이 신체 이상을 겪었고, 일각에서는 쿠바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음파 공격을 감행하였을 가능성을 제기 하였다. 이에 미 국무부는 쿠바 주재 외교관 수를 감축하고 여행 자제령을 내리는 한편 워싱턴 DC 주재 쿠바 외교관 15명을 추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가 미국 외교관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고 단언하고 미국인들이 쿠바 군대와 관련이 있는 호텔, 상점 및 제반 업소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취하였다.

경제 및 통상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기조는 ‘모든 미국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무역협정(Trade Deals Working For All Americans)’이다. 물론 이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슬로건을 대외 경제 분야에 맞는 정책방향으로 바뀌 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선 기간 공약사항이었던 환태평양경제공동체(TPP)에서 미국의 탈퇴를 행정명령으로 이행해 옮긴 것을 시작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재협상에 돌입하였으며, 만일 ‘공정한(Fair)’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북미자유무역협정 역시 탈퇴할 것임을 공언하였다.

한미 동맹과 북한에 대한 인식 전환

트럼프 행정부는 대외관계의 주요 사안에 있어서 “정책”이라고 부를 만한 변변한 입장을 내세워 본적이 없다. 특히 최우선 안보 현안과제로 부상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관된 정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소모적인 ‘말 전쟁’ 뿐이었다. 이런 점에서 11월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아시아 첫 순방에서 어떠한 정책 기조를 밝힐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백악관은 아시아 순방의 3대 목표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강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증진’, ‘미국의 번영 강화’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우리 국회에서의 연설을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중 중요한 연설의 하나라고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와 관련한 중요한 입장들을 내놓았는데, 사안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굳건한 한미 동맹의 재확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미국의 동맹들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내세웠던 점과 독일, 일본을 비롯하여 우리나라도 그의 비판의 대상에 자주 올랐었던 점을 고려하면 한미 동맹 관계의 재확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과제였다. 또 단순히 동맹 관계의 재확인을 넘어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지역 전개확대, 미사일 탄두중량 해제를 골자로 한 미사일 협정 개정, 주요 전략자산의 획득·개발 등에 양국이 동의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 내에서 제기되어 왔던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가 이번 방한으로 일단락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장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은 내가 즉시 말할 수 있다 (And there will be no skipping Korea, I can tell you that right now.)”라고 대답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답을 내놓음으로써 관련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했던 것만큼 구체적이고 공세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험프리스 기지 도착 순간부터 국회 연설까지 미국의 일자리와 통상 문제를 빠지지 않고 언급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연설에서는 미국이 무역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국 이익 중심으로 관계를 재설정 할 것이며 WTO와 같은 다자주의를 따르지 않고, 양자관계에서 자국의 교역적자를 개선하

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였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우리나라와의 무역수지 개선 문제가 우리 정부와 트럼프 정부사이에서 협상과 논의를 지속해야 할 과제가 분명해 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기간 중 밝힌 여러 입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한미 관계와 대북 문제에 대한 인식의 폭이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미 동맹에 대해 군사 동맹을 넘어서 문화에서부터 첨단 과학기술과 의료 그리고 교역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동맹이며, 지역적으로는 한반도를 넘어서 인도-태평양에까지 이르는 동맹이라 칭하였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인도-태평양을 아우르는 확장적 동맹 구축 전략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북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언급한 국회 연설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일반화, 객관화하여 논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에 대한 위협을 하고 있고, 자신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감정적으로 표출하며 북한 문제를 핵·미사일 문제로 국한하고, 이를 다시 사적 관점에서 논해왔다. 이에 비해 국회연설에서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 문제를 개별적 사례를 들어가며 언급하고, 정권차원에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북한 문제를 군사적 차원에서 인류애와 문명의 차원으로 전환한 것이다. 또한 모든 책임 국가들이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미국과 북한간 대결 구도의 틀에서 벗어나 국제적 공조의 틀에서 문제 해결을 추구하겠다는 인식을 보였다. 이는 북한 정권의 행태를 인류애와 문명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책임국가들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는 관점에서는 북한과 책임국가들 사이의 대결 구도로 북한 문제를 접근하였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과거 부시 행정부의 ‘악의 축’을 떠올릴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현재의 차이점은 북한의 이러한 반인륜적, 반문명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의지를 보인다면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점이다.

동맹과 북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우리 정부에게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과제를 안겨주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인도-태평양 동맹 구상에서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북한 문제에 있어

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의 전쟁은 소강국면이라고는 하지만 제재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으며, ‘해상차단’과 같은 군사적 옵션을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상당기간 어려운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 2018년 전망 : 분열과 갈등의 일상화

러시아 게이트와 중간 선거 사이에서 갈등하는 국내 정치

내년에도 러시아의 선거 개입에 대한 논란과 특검의 조사는 트럼프 측을 계속 괴롭힐 것이다. 멀리 특검의 수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아직 어느 선까지 기소가 가능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러시아 스캔들이 트럼프의 탄핵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폴 매너포트가 기소된 내용들을 보면 모두 선거 이전에 그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들에 대해 기소가 이뤄졌으며, 직접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사안은 없다. 외교정책 고문이었었던 조지 파파도풀러스의 경우 러시아 측과 직접 접촉한 정황들은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현재까지 드러난 수사의 진행 방향으로 보아 러시아 스캔들로 기소 대상에 오를 최고위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가 실제 기소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가 결정권을 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대통령직은 현 부통령이 마이크 펜스에게 이양되게 된다. 이는 민주당에게는 물론 공화당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에게도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소대상이 되지 않는 한 그가 탄핵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과의 관계는 중간선거가 예정된 내년 중반쯤이면 갈등이 극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연방의회의 의석 분포를 보면 총 100석인 상원은 공화당이 52석, 민주당과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이 48석을 차지하고 있다. 총 435석인 하원은 공화당이 과반인 218석을 22석 넘긴 240석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 11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 연방의회 중간선거에는 상원 선거구 중 33개 선거구가, 하원은 전 선거구가 선거를 치르게 되어있다. 미국 선거의 역사를 보

면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을 배출한 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의 성과와 국민적 지지도가 공화당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는 취임 직후부터 하락하여 1년 가까이 30% 중반 대라는 미국 역사상 유례없이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공화당으로서는 이를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와 구설이 2018년도에도 지속된다면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또 현재로서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을 장악하게 될 경우 이민 정책, 세제 개혁, 건강보험 개혁 등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민감한 국내 정치적 과제들이 진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그 근거는 내년도 선거를 치러야 하는 연방 상하원 지역구의 분포이다. 상원 선거를 보면 2018년 중간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는 33개 선거구 중 민주당 또는 친민주당 성향의 의원들이 현역인 선거구가 25개에 달한다. 이는 민주당이 지켜야 하는 선거구가 많아 구조적으로 상원 중간선거가 민주당에 불리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원의원 선거는 435석 전체가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이 중 과반이 훨씬 넘는 의석을 이미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으니, 공화당 과반이 무너지는 결과까지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지역구 별 상황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또 다르다. 현재 각종 여론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상원 지역구 중 총 18개 지역구가 경합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중 5개 지역구가 공화당 현역의원 지역구이다. 초 경합지역은 5개로 이중 공화당 현역의원 지역구는 2개이다. 경합 및 초경합 지역구의 숫자로 따지면 역시 민주당이 불리한 듯 보이나 비율로 보면 공화당 현역의원 지역구 9개 중 절반이 넘는 5개가 경합 지역으로 분류되며 그중 2개가 초경합 지역인 것이다. 따라서 여전히 중간선거의 결과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내년도 미국 정세의 가장 큰 변수이자 미지수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다. 그의 좌충우돌 식 발언과 예상치를 뛰어넘는 정책 행보는 2017년 한해 내내 지속되었

다. 사안에 대해 대통령답지 않은 언행으로 불필요한 정쟁을 일으키면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그의 이런 통치 스타일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사회는 그러한 대통령을 상수로 받아들이야 할 것이고, 이념적, 인종적, 사회적 제 갈등의 극대화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식 국제 질서의 본격화 : 경제적 양자주의, 안보적 다자주의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에서 다자주의와 양자주의의 이중적 행보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TPP 탈퇴를 통해 통상 및 무역 정책의 기초를 분명히 밝혔듯이 기존 국제사회에서 진행되어 왔던 경제 다자주의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 대신 양자주의적 접근 방식을 택하여 기존의 무역협정을 모두 개정함으로써 미국이 얻는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할 것이다. 반면에 안보의 측면에서는 다자주의적 접근을 추진하고자 할 것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서 ‘인도-태평양 동맹’을 언급한 것은 안보 다자주의의 대표적인 예이다. 통상 분야에서 양자주의를 선택한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에서 다자주의 접근을 선택한 것은 상대적으로 미국이 지고 있던 안보의 부담을 다른 국가들, 특히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이 나눠져야 한다는 의도이다. 그러므로 동맹국들에게 경제적·안보적 부담을 더 나눠지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양자주의와 안보적 다자주의는 일맥상통하는 정책기조라고 할 수 있다.

내년도 미국의 외교안보 사안 중 가장 큰 주목 대상은 북한이 될 것이다. 주한 미대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빅터 차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9.11’이 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은 정권 출범 당시만 해도 외교안보 문제에 집중할 의지가 높지 않았다. 9.11테러 사건의 발생이 정권의 성격을 바꿔놓았고, 그의 대통령 재임기간은 이라크 전쟁으로 규정되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한다면 빅터 차의 언급은 북한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안보 현안의 수준을 넘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을 규정할 정도의 사안이 될 것이라는 예견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미 관계는 내년에도 당분간 강대강의 대치국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하였고, 북한은 화성-15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면서 현재 북미간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였다. 미국은 최근 북한에 대한 ‘해상차

단' 조치를 감행할 뜻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보면, 당분간 북미 간의 대화는 진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일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해상차단을 실시하는 경우 북한으로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SLBM 등 핵투발 수단의 다양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동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에서 또 다른 주요 현안이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핵합의를 파기 한 후 재협상 또는 파기 후 이란 제재에 돌입할 가능성도 제기 된다. IAEA는 이미 이란이 핵합의 사항을 준수하였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미국이 합의를 파기하는 경우 이란과의 갈등 뿐 만 아니라 이란 문제 해결을 바라는 국제 사회와의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슬로건이었던 '미국 우선주의'는 내년에도 미국 대외정책의 중심 가치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인 NAFTA 재협상, 한미자유무역협정 개정 등 통상과 무역에 있어서 고립주의 정책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민 정책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아젠다가 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불법입국한 청소년들의 국외추방 유예 조치인 DACA는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를 선언하고 의회에 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의회가 대안을 마련해야하는 시점이 내년 상반기에 도래하므로, 그 이후 다시 DACA와 이민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미국 사회의 분열적 갈등을 야기시킬 전망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제언 : 한미 관계의 재정립

내년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 중요한 두 정책 과제는 동맹과 북한 문제이다. 이 두 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이 어떤 접근을 하느냐가 향후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 질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기를 기대하던 '전략적 인내'와 같은 접근법이 아닌 북한이 변화할 수 있도록 외적 압력과 내적 압력을 동시에 가할 수 있는 접근법을 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한미 양국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철저한 공조의 기반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북한 문제는 미국이나 한국 어느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이미 너무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해 다면적 정책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북한의 군

사적 위협이 실존하는 상황에서 대북 군사적 억제력을 강화해야 하지만 대북 정책이 군사적 억제력 강화에만 머물러선 안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보편적 인류애를 고리로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비정치적 대북접근과 국제 다자기구를 활용한 접근도 동시에 시도해야 한다.

셋째, 우리에게 필요한 합리적 대북 정책은 현재의 비용편익과 미래의 비용편익을 함께 고려한 정책이어야 한다. 북한 문제를 방치하면 할수록 우리가 치러야 할 댓가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자각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합의를 위한 합의, 협상을 위한 협상은 물론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대북 정책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이 편익에 대한 계산을 함께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한미 양국간에 동맹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의 공유가 필요하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을 하나의 권역으로 아우르고 역내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을 한데 묶는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시도의 일환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한 적극적 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지향하는 외교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상호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소지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면 양국이 미래의 비전에 대해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진핑 ‘일인 천하’의 시대를 향하여

박병광

1. 2017년 평가 : 모든 길은 19차 당 대회로

중국에서 2017년은 시진핑의 집권 1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5년을 시작하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19차 당 대회)가 열리는 해였다.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된 제19차 당 대회는 단순히 중국인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중요 이벤트였다. 19차 당 대회가 세계인의 주목을 끈 이유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종합국력이 증대되면서 갈수록 중국의 행보와 대내외 정책이 각국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지도자 결정과정이 ‘암상자(black box)’와 같은 중국에서 19차 당 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하게 된다는 점도 분명 흥미를 더하는 부분이었다. 아울러 향후 5년의 집권 2기에 시진핑이 최고지도자로서 어떠한 전략과 비전을 내세울지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

19차 당 대회 업무보고의 핵심은 ‘중국공산당’이 중심이었고, 다음으로 ‘개혁’이 강조되었다. 시진핑은 중국공산당 중심의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없이는 개혁도 개방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19차 당 대회 업무보고에서는 과거 당 대회 업무보고와 달리 ‘신시대 중국공산당의 역사적 사명’이 하나의 장(章)으로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69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32회), 샤오강(小康) 사회 실현(17회), 반부패 투쟁(20회), 중엄치당(從嚴治黨)(7회) 등이 강조되었다.

19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은 자신의 1인 지배 권력을 강화하고, 자신감 있고 강력한 대내외정책 추진을 선포하였다. 시진핑은 정치, 외교, 경제, 사회를 아우르는 13개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집권 2기의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시진핑 사상(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당장(黨章)에 삽입하고, ‘격대지정(隔代指定)’의 권력승계 방식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당 지도부를 구성하였다. 시진핑의 후계자로 예상되던 후춘화와 천민얼이 모두 정치국 상무위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으며, 중앙정치국 위원 25명 중 15명이 교체되고, 상무위원 역시 7명 중에서 5명이 교체되었다. 그 결과 19차 당 대회는 최고지도부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진행된 가운데 리잔수, 왕후닝, 자오러지 등 시진핑 측근 인사들이 전진 배치되고, ‘격대지정’의 관행 및 집단지도체제의 후퇴라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19차 당 대회 성공개최 전념

중국의 2017년도 대내외정세의 초점은 모든 것이 19차 당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모아졌다. 중국은 19차 당 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사회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경제의 6%대 성장을 유지하며, 대외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관계를 안정적으로 설정하고, 남중국해문제(南海), 동중국해문제(東海), 양안관계(台海), 사드문제와 북핵문제(黃海) 등 이른바 ‘사해문제(四海問題)’를 관리해 나가는 데 집중했다.

이를 위해서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2017년 한 해 동안 ‘당의 영도강화’, ‘기층(基層)중시’, ‘간부의 작풍’ 및 ‘당정분리(黨政分離)’와 ‘당정분공(黨政分工)’ 등의 담론을 강조했다. 그리고 중국지도부는 ‘안정속의 발전(穩中求進)’이라는 큰 기조 아래 성장, 개혁, 구조조정, 민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민대표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19차 당 대회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7년 한 해 중국의 주요 정책과제와 목표는 10월 하순에 개최된 19차 당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사회 안정과 분위기 조성에 모아졌다.

리커창 총리는 경제 분야 및 인민생활과 관련하여 2017년 3월에 개최된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12기 5차 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목표 성장률을 특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성장률을 규정하지 않는 것은 성장 목표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과 더불어 목표치의 고정화에 따른 압박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 대신 리커창은 기자회견에서 2017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5%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실제로 19차 당 대회가 끝나고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금년도 예측 성장률은 6.5%였다. 시진핑 집권 이후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 단

계에 진입한 중국 경제는 빠른 둔화세를 접했던 시장의 예상과 달리 ‘온중구진’((穩中求進)’을 실현하며 기대 이상의 성적표를 냈다. 중국은 위안화 가치 급락 전망으로 외화가 빠르게 유출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환율 시장도 안정됐고, 급등락을 거듭했던 중국 증시도 건전성·투명성 제고로 ‘느린 소’(점진적 상승)장에 돌입했다. 당초 바깥세계의 우려와 달리 2017년 중국경제는 연착륙에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017년 3월 신화사(新華社)가 중국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핫 이슈’에 따르면 네티즌들은 주로 수입 분배, 부동산가격 조정, 환경보호, 사회보장, 교육의 공평성, 반부패, 식품 의약품 안전, 의법치국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이는 시진핑이 강조해온 대국외교, 국방개혁, 정부간소화, 경제혁신, 구조개혁 등에 대한 관심보다도 중국인들의 관심은 사실상 ‘권력 정치’에서 ‘생활 정치’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 한 해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인민 대중의 실생활과 관련된 아래로부터의 생활정치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프로세스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시진핑과 트럼프 스트롱맨의 대립

2017년도 중국 외교는 전 세계적 반세계주의와 지정학 시대의 부활에 직면하였으며, 트럼프 집권 이후 펍펍해진 강대국외교, 브렉시트의 여파, 북핵문제의 악화, 사드(THAAD) 갈등에 따른 한중관계 대립 등 다양하고 복잡한 당면과제 속에서 힘겨운 한 해를 보냈다. 때문에 중국은 2017년도에 기존의 국제사회에 나타난 문제들을 개혁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지향하되, 혼란이 아닌 안정에 방점을 두고자 했다. 이와 관련하여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2017년 3월 8일 기자회견에서 18차 당 대회 이후 중국외교는 ‘중국특색의 대국외교’의 새로운 장(章)을 열었으며, ‘선진성’, ‘개척성’, ‘안정성’이라는 선명한 특징을 보였다고 자평했다. 중국외교는 시진핑 임기 내에 ‘전면적 소강사회의 실현’이라는 ‘첫 번째 백년(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의 목표를 이루고, 대외적으로는 지역 강대국에서 글로벌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관계 및 주변국관계를 안정적이고 우호적으로 건립해 나가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2017년 4월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으로 대면하

고, 양국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유지하고자 했다. 미중 정상회담에 임하는 중국 측의 목표와 의도는 트럼프와 직접 대면접촉을 통해 그의 생각을 파악하고, 중국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시진핑 방미의 가장 큰 목적은 미국 측과 경제, 외교, 안보, 군사 등 주요문제를 논할 수 있는 파트너를 확인하고, 소통의 연계(connections)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4월 방미 대표단에는 왕후닝(안보), 왕양(경제), 양제츠(외교), 팡평휘(군사) 등이 수행했으며, 정상회담과 별개로 이들도 각자 미국 측 파트너와 회담을 진행했다. 그러나 시진핑은 일관되게 강조해온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구축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정상회담기간 시리아 폭격으로 국제적 지도자 이미지 부각에 실패했다. 무역 문제에서도 트럼프에 대폭 양보만 했을 뿐이다. 2017년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은 트럼프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무려 2,500억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경제선물을 제공하고자 했다. 결국 미중관계에서 트럼프는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2017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등 중국은 대미관계에서 상당히 수세적 위치에 처해 있었다.

2017년에도 중국의 주변국관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사해문제(四海問題)’였다. ‘사해문제’의 경우 북핵문제를 제외하면 2016년에 비해서 매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 무엇보다 남중국해(南海)문제와 관련하여 2016년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체면손상’을 겪었지만 2017년에는 관련국들과 심각한 대립을 재현하기보다 관계회복에 치중하였다.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에게 ‘일대일로 구상(One Belt One Road Initiative)’의 연장선상에서 적잖은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을 중심으로 중국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중국은 동중국해(東海) 문제와 관련해서도 센카쿠(중국명 釣魚島)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과 관계개선의 방향으로 한 발 나아갔다. 다만 북핵문제의 경우 2017년金正은의 6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발사 등 핵무기 고도화가 급속히 진척되면서 중국의 입지는 악화되었다.

중국은 동중국해(東海) 문제와 관련해서도 센카쿠(중국명 釣魚島)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과 관계개선의 방향으로 한 발 나아갔다. 2017년 6월 아베 일본 총리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참여하고 싶다고 밝히면서 양국관계는 개

선모드로 전개되었으며, 9월 29일에는 아베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주일중국대사관에서 열린 ‘일중수교 45주년 기념식’에 직접 참석하여 양국 정상외의 상호방문을 제안했다. 만일 내년 상반기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위해 리커창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다면 아베 총리도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양국관계 개선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다만 중국은 양안문제(臺灣海峽)와 관련하여 2017년에도 대만과의 정부 간 대화 중단 상태를 유지하는 등 별다른 관계개선의 전기를 마련하지 못했다.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 (2017.10.31.)

- 최근 한중 양국은 남관표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콩쉬안유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조리간 협의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 등과 관련하여 외교당국 간의 소통을 진행하였다.
-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재천명하였다. 양측은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국측은 중국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였다. 동시에 중국측은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하였으며, 한국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하였다. 양측은 양국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중국측은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하였다. 한국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하였다.
- 양측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끝.

한중관계 개선과 북중관계의 난항

중국은 2017년 10월 31일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2016년 7월 8일 한미 양국의 사드배치 발표 이후 냉각기를 겪었던 한중관계에서 개선의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양국은 협의문에서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된 것은 금년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국 내에 사드(THAAD) 배치가 사실상 완료되자 현실을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드는 이미 배치되었고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불가능한 사드 철회를 물고 늘어질수록 한중관계는 더욱 ‘진퇴양난’의 미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또한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 역시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았고, 중국의 손실도 발생했을 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이미지만 실추되었으며, 무엇보다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더욱 자극하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했다.

북중관계의 경우 2017년 한 해 동안에도 양국관계는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시진핑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은 금년에도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오히려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지속된 탄도미사일 발사시험과 그에 따른 중국의 대북제재 강화 등으로 인해 북중관계는 더 냉각되었다. 북한은 금년 9월 <노동신문>을 이용하여 “쫓대 없는 나라, 미국과 그에 아부굴종하며 체면도 저버린자들”이라고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를 비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2017년 10월 18일 중국의 19차 당 대회 개최에 대한 축하전문을 보낸 데 이어 25일에는 시진핑의 총서기 연임을 축하하는 전문을 보내는 등 중국과의 관계유지 및 향후 북중관계 개선에 신경 쓰고 있음을 드러냈다. 중국 역시 19차 당 대회 개막연설에서 시진핑이 ‘주변국외교’를 강조하고, 김정은의 축전에 회신을 보낸 것은 한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한 것처럼 북한과의 관계개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중국은 2017년에도 꾸준히 미국 주도의 질서에 대응하여 자국이 주도하는 ‘국제규범’의 수립과 ‘대전략(Grand Strategy)’의 구현에 전념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은 금년 5월 14~15일 이틀간 베이징(北京)에서 29개국의 정상

과 130국가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일대일로 정상회의(One Belt One Road Summit)’를 개최하였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기후변화협약’ 그리고 유네스코 등에서 탈퇴하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규범을 약화시켜 나가는 상황에서 중국은 오히려 자국 주도의 국제규범과 대전략을 구체화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금년 6월 베이징(北京)에서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 정상회의(CICA)’ 비정부포럼을 개최하고, 9월에는 샤먼(廈門)에서 ‘브릭스(BRICS)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이와 관련 시진핑은 19차 당 대회 보고에서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창도하고 글로벌 관리체계의 변혁을 촉진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결국 2017년에도 중국이 다양한 대내외문제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진핑이 주장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의 꿈’을 향해 전진해 나가면서 자국 주도의 국제규범과 새로운 질서 창출을 위한 노력을 적극화했다.

2. 2018년 전망 : 시진핑 ‘일인 천하’를 향하여

중국 대내정세 전망 : ‘온중구진(穩中求進)’ 전략의 추구

2018년은 시진핑 집권 2기의 서막이 열리는 해로서 중국지도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직면한 대내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시진핑은 중국공산당 제19차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9기 1중전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百聞不如一見). 이 자리에 함께한 국내외 기자 여러분이 직접 중국의 많은 곳을 찾으며 19차 공산당이 이끌 중국의 발전과 변화를 직접 보고 중국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더 많이 보도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는 시진핑 자신이 주도해 나갈 향후 5년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서 2018년은 중국이 마주한 대내문제의 해결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은 높고 가야 할 길은 멀다(山高路遠)”는 점을 고려하면 2018년에 중국정부의 의도대로 경제·사회개혁이 순항할 수 있을지는 낙관하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경제파이를 키우면서 동시에 공평한 분배를 실현하는 것은 샤오강 사회 건설은 물론이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

하는 바탕이다. 이에 시진핑 집권 2기의 중국정부는 내부단결을 촉진하고 사회 안정을 위해 산업구조 선진화, 생태환경 개선, 빈곤퇴치사업 확대, 사회보장제도 확충, 호적제 개혁 등 각종 경제사회문제 해소와 개혁이 시급하다. 때문에 시진핑이 19차 당 대회에서 신시대를 맞아 제시한 각종 경제사회발전 목표는 직면한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우선 초고속 성장으로 부(富)의 크기를 키운 중국은 ‘공평한 분배’를 실현하면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빈부격차를 줄여야 한다. 개혁개방 40년 동안 몸집을 키우는 데만 급급했던 중국은 현재 지역별·도농 간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다. 중국지도부는 경제 분야에 누적된 문제가 많고 위험이 중대함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샤오캉사회(小康社會)’ 건설과 강대국 도약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비록 시진핑 집권 1기에 시장과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중국정부는 ‘회색코뿔소’(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리스크)를 경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중국지도부는 2018년에 다양하고 고질적인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개혁을 심화하는 숙제에 전념할 것이다.

동시에 2018년에도 중국은 안정적인 경제발전, 질적 경제성장, 균형발전에 주력하는 ‘온중구진(穩中求進)’ 전략을 유지하고, 국제경제무대에서 중국의 입지를 한층 강화하려 시도할 것이다. 2018년에도 중국은 석탄과 철광산업 등 과잉생산설비의 구조조정으로 생산을 조절하고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에도 ‘뉴노멀(新常態)’ 기조 하에서 중국경제는 6%대의 경제성장률을 무난히 달성할 것이며, 특히 ‘일대일로구상’의 연장선 상에 있는 중·서부지역의 경제성장이 기대된다.

시진핑 사상 확산과 개인숭배 가능성 대두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2018년 중국에서는 당원과 인민들을 대상으로 ‘시진핑 사상’에 대한 교육이 열풍처럼 전개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시진핑 개인에 대한 ‘선전’과 ‘우상화’가 본격화될 수 있다. 이미 19차 당 대회가 끝나기 무섭게 중국 곳곳에서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갖게 된 시진핑의 신격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가령 베이징(北京)

의 중국인민대학에서는 당 대회 종료와 동시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 연구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이러한 연구소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는 당의 지도사상을 교과서에 실어 교육하는 점을 고려하면, 조만간 시진핑 사상인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 역시 교과서에 새롭게 삽입될 가능성이 높다. 문화대혁명에 대한 반성으로 개인숭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시진핑 1인 지배 권력이 얼마나 강력해 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서구 민주주의적 시각에서 보자면 마치 시진핑이 중국의 ‘새로운 황제’로 등극하는 느낌을 줄지도 모르는 일이며, 독재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우려를 더하는 것일지 모른다.

2018년에 중국은 시진핑이 강조하는 신시대 중국특색적 사회주의 사상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당의 영도와 당원들의 역할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시진핑은 19차 당 대회에서 “초심을 잃지 말자(不忘初心)”고 강조하면서 재창당의 심정으로 중국공산당의 체질을 바꾸고 당의 영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더불어 “전당 동지들이 반드시 인민과 한 마음이 되어 호흡과 운명을 같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은 이를 통해 중국공산당의 충성심과 내구력을 높이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당과 인민의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군중노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의 개혁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특히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새로이 진입한 왕후닝이 이론과 사상 및 선전부문을 담당하게 된 것은 시진핑이 추구하는 당의 체질개선 및 당원과 인민에 대한 시진핑 사상을 전파하는 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맡을 것임을 보여준다.

국방개혁의 가속화

2018년에는 군 개혁(軍改革) 역시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시진핑은 집권 1기를 마무리하는 제19차 당 대회 업무보고에서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을 견지해 전면적인 군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며 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또한 당 대회 폐막 직후 10월 26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군사위 간부 간담회에서 “인민해방군은 2020년까지 군의 기계화와 정보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2035년까지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달성하며, 2050년에는 ‘세계 일류 군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3단계 목표를 제시했다. 시진핑은 금년에 18개 집단군을 새롭게

13개 집단군으로 편제하고, 육·해·공군 사령관 등을 신규 임용한 것을 바탕으로 2018년에는 “싸워서 이기는 군대”, ‘강군몽(強軍夢)’을 향한 군대개혁을 더욱 본격화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정세 전망 : 유소작위(有所作爲)를 넘어 분발유위(奮發有爲)로

시진핑은 전임 지도자들과 달리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후 태어난 혁명 후 세대로서 중국의 발전에 대해 남다른 자부심과 강한 민족주의 정서를 지닌 지도자이다. 때문에 그는 덩샤오핑이 강조했던 ‘도광양회(韜光養晦)’와 ‘유소작위(有所作爲)’를 뛰어넘어 ‘분발유위(奮發有爲)’의 방향을 추구하고자 한다. 시진핑 집권 2기의 중국외교는 국제무대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가고,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규범과 국제질서를 더욱 강하게 내세움으로써 주요 이슈에 대한 발언권과 결정 능력을 제고하는 가운데 미국과의 규범 경쟁에도 더욱 공세적으로 뛰어들 것을 예상할 수 있다.

19차 당 대회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대외정책 목표는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로서 ‘평화발전’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신형국제관계’ 건설 및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19차 당 대회 기간 왕이 외교부장 역시 토론회에서 ‘신시대’ 중국외교의 목표로 “신형국제관계 건설을 통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언급하며 인류사회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공헌을 강조하였다. 이는 결국 중국외교가 바깥 세계를 향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것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할 것임을 의미한다. 중국의 이와 같은 의지는 대외전략과 관련하여 다분히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면모를 감지하게 된다.

시진핑은 19차 당 대회 개막 연설에서 “중국이 평화로운 발전노선을 이어가고 새로운 국제관계 구축을 촉진하면서 인류운명공동체를 건설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와 동시에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포기하는 행위는 결코 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나라도 중국이 쓴 열매를 삼킬 것이라는 헛된 꿈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향후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일본과의 영토분쟁 등 국제 현안에서 미국과의 패권 다툼이 더욱 첨예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중국으로서는 주변국관계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단은 2018년에도 ‘사해문제(四海問題)’의 관리와 통제(管控)에 주력하겠지만 만일 ‘핵심이익’이 침해당한다고 느낄

경우에는 ‘힘의 외교’도 불사할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시진핑 1인 지배체제의 강화는 경우에 따라서 ‘핵심이익’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태도 유지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의 본격화

2018년에는 시진핑 주석이 내놓은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의 실현을 위한 중국의 외교적 노력이 가일층 표면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대외적 영향력 강화와 경제 성장을 위해 내놓은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의 본격적인 추진 역시 시진핑 집권 2기가 안고 있는 주요 과제이기 때문이다. 시진핑이 강조한 ‘인류운명공동체’와도 맥이 닿는 일대일로는 중국의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은 2017년 5월 일대일로 연선상에 위치한 국가는 물론이고 세계 주요국 지도자와 대표단을 불러 모아 ‘일대일로 정상회의’를 개최했던 여세를 몰아 2018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일대일로구상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매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와 규범을 전파하는 한편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장하려 들 것이다.

미중 규범경쟁의 심화와 북핵문제의 폭발성

2018년에도 중국의 외교에서 가장 큰 난제는 대미관계의 설정이다. 최근 수년간 미중관계의 핵심은 초강대국 미국과 떠오르는 강자 중국 간 줄다리기의 강도와 접근방식이다. 중국은 두 대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이 ‘중국의 위상 변화’를 인정하고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미중관계가 중국외교의 핵심으로 대두할 것이라는 점은 19차 당 대회 업무보고에서 중국이 ‘신형국제관계’ 구축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18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집권 1기에 중국은 미국에게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줄곧 요구했으나 오바마 행정부는 긍정적으로 화답하지 않았다. 이에 중국은 19차 당 대회 업무보고에서 더 이상 신형대국관계를 거론하지 않고 ‘신형국제관계’ 건설을 주장했는데 이 역시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신형국제관계 건설의 핵심 내용은 “상호 존중, 공평 정의, 협력 공영”으로써,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

(America First)'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2018년에 신형국제관계 수립을 강조하면서 중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질서 촉진에 매진할 것이다.

한편 2018년도 미중관계에서 북한문제는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수 있다. 북한은 '핵무장 완성선언(2017.11.29.)'을 했다. 실체가 어떤 지는 더 파악해야 하겠지만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목표 지점에 날려보낼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이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내년에 실전 배치의 단계에 접어들지도 모른다. 미국으로서는 '대북압박'을 가속화하면서 '대화전환'과 '군사적 옵션사용'을 두고 선택의 정점으로 내몰릴지 모른다. 그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먼저 최대한 압박할 것이고 중국이 어느 선까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전략적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다. 나아가 만일 미국이 '선제타격' 등 군사적 옵션을 선택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될 경우 미중관계는 북한문제를 두고서 '갈등'이나 '타협'이냐의 심각한 변곡점으로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중관계 개선 가능성과 북중관계의 불확실성

2018년에 한중관계는 '저조기'를 지나 '실질적' 관계 회복 가능성이 증대된다. 2017년 8월 14일 한중수교 25주년 기념 축하 메시지에서 양국 정상은 모두 공통적으로 양국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언급한 바 있다. 2017년 10월 한중 양국은 '통화스와프' 연장 합의 및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으며, 마침내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발표 한뒤, 11월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러한 한중관계 개선의 모멘텀은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기점으로 확실한 변곡점으로 작용하였으며, 2018년 2월에 시진핑 주석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함으로써 양국관계의 완전한 정상궤도 진입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진핑 집권 2기에서 강조되는 강대국외교 강화와 그에 따른 미중관계의 중요성 및 경우에 따른 대립구조 심화는 한중관계를 미중관계의 하위 구조로 종속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북한문제 및 북핵문제에 관한 접근법과 해법을 두고 미중관계가 대립할 경우 한국의 입장과 태도 역시 한중관계 발전에 어려움을 더할 수 있다.

2018년 북중관계는 관계개선을 향한 급격한 ‘변화’보다 ‘지속’의 가능성이 우세하다. 김정은은 2018년에도 핵무기 고도화에 전념할 것이고 예측 불가한 도발을 감행할 것이 유력하다는 점에서 중국의 부담이 갑자기 경감되거나 국제사회의 시선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북한 끌어안기’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역시 19차 당 대회기간 시진핑에게 보낸 축전에서 과거에 주장하던 ‘형제적 중국 인민’, ‘조·중 친선’ 등의 문구를 누락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시진핑의 경우에도 19차 당 대회 보고에서 “국가간에는 동맹이 아닌 동반자로서 새로운 교류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북중관계에도 해당된다.

다만 시진핑이 19차 당 대회를 통해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고 국내정치적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점은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도 제기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 19차 당 대회 이후 2018년 상반기 중국공산당 정치국위원급 이상 고위간부의 북한 방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고위급 방북을 통해 북중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풀고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도 자국의 영향력과 역할을 회복하려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움직임은 2018년 상반기 개최될 중국공산당 ‘중앙외사공작 영도소조’에서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3.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문재인 정부는 국정기조의 하나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를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목표는 시진핑 지도부가 추구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달성하기 위한 평화로운 주변 환경 조성 과도 통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와 중국정부는 북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평화’와 ‘번영’라는 공통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양국 신지도부 출범에 따른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구축의 계단을 함께 오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략적 소통기제의 제도화·활성화

한중간에는 양국정부 간 합의한 전략적 소통기제가 존재함에도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바, 이를 제도화·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가령 박근혜 정부에서는 양국 정상 간 상호방문을 포함한 7차례의 정상회담이 열렸으나 ‘내실화’를 기치로 합의된 ‘고위급 전략대화’는 사실상 휴업상태에 머물렀다. 그러나 사드갈등을 해소하는 데 합의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의 도출에서 보듯이 한국의 청와대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고위급 접촉이 실마리를 제공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역시 2017년에 이뤄진 3차례의 정상회담에서 모두 “고위급 접촉을 통한 전략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양국정상이 주도하는 한중관계의 틀과 한계를 벗어나 신뢰의 저변을 넓히고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합의된 고위급 전략대화 채널을 정례화·내실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나아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을 더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한반도 상황은 북한의 도발양상이 점점 다양화되고 공세적으로 변화하면서 한반도의 위기감 역시 더 고조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북한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발사는 물론이고, SLBM발사, 7차 핵실험 등 다양한 카드를 상황에 따라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과 미국영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모험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할 뿐 아니라 다양한 실험을 통해 핵과 미사일 관련 완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는 단기적으로 대타결 등의 해결점에 도달하기 어렵고, 오히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지속적으로 고조될 것이라는 상황인식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중국의 ‘쌍궤병행(雙軌並行)’과 ‘쌍중단(雙暫停)’ 제안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중국의 제안과 아이디어가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적실성과 효용성을 지니는 것인지 그리고 주장의 한계와 문제 및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와 인식공유가 필요하다.

‘북핵 동결론’에 대한 진지한 검토 필요

이른바 ‘북핵 동결론’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201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핵문제 해결은 핵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고 했다. 물론 북한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고 있지만 중국은 동결에서 시작하는 북핵문제 해법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동결을 넘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원하지만 그것이 일거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동결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에 관해 한국이 주도적으로 중국과 이해의 공감대를 형성한 뒤, 양국이 공동으로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메신저 또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통국가’로 한걸음 더 가까이 간 일본

김숙현

1. 2017년 평가 : 발빠른 외교와 총선 승부수로 아베정권의 장기화 마련

‘북풍몰이’ 전략을 통한 아베총리의 총선 승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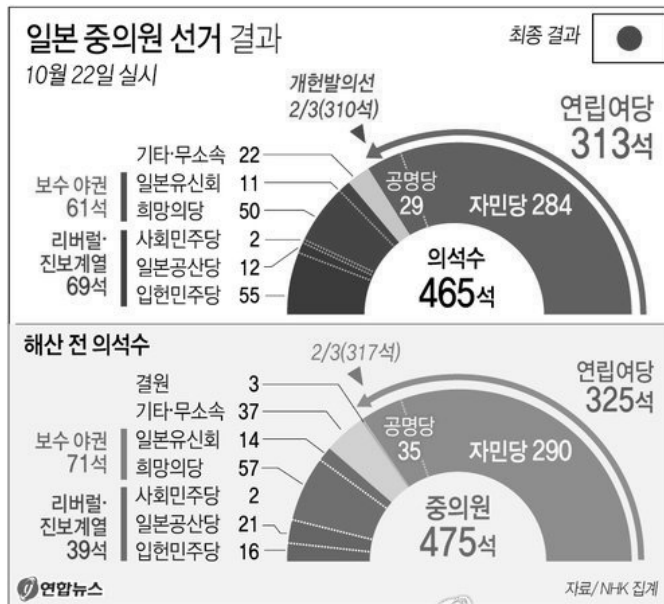
아베총리에 있어 2017년은 ‘십년감수’라는 말이 가장 적절할 듯하다.

작년 말부터 잇달아 터진 사학 스캔들로 인해 지지율이 30%로 하락하고, 7월 2일 동경도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아베총리는 승부수로 ‘국회해산’을 결심한다. 계속되는 북핵 및 미사일 실험으로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로 국민의 재신임을 묻겠다는 의도였다.

도민퍼스트회를 토대로 동경도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고이케 지사는 ‘희망의 당’을 창당하고 인기가 높았던 희망의 당으로 결집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고이케 지사가 민진당 의원에 대한 선별공천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게 되고, 결국은 야권이 분열되면서 자민당 승리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아베총리와 자민당은 당초 국회해산 및 총선 실시 명목으로 내세웠던 소비세 인상에 다른 재원 배분 문제보다는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는 선거 전략으로 일관했고 그 결과, 자민당 284석으로 여당은 선거전에 비해 개헌발의선이 310석을 뛰어넘는 313석으로 확보하면서 압승을 거두게 되었다.

이번 선거로 아베총리는 내년 9월에 예정된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었고, 11월 아베 4차 내각을 발족시키면서 아베총리의 숙원사업인 ‘개헌’에 한층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



박영석 기자 / 20171023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ey.kr/LeYN1

출처 : 연합뉴스 2017년 10월 23일

아베총리의 숙원인 ‘개헌’ 여건 조성

중의원 선거 직후 25일 요미우리신문은 “중의원 당선자의 84%가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만으로도 개헌 발의가 가능한 수준이며 야당 내에서도 희망의 당과 일본 유신회의 등 개헌에 우호적인 세력이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요미우리 신문이 중의원 431명의 설문조사 답변을 분석한 결과 자민당 당선자의 97%, 공명당 당선자의 92%가 개헌에 찬성했다. 그리고 제2 야당인 희망의 당 소속 당선자의 87%가 개헌에 우호적이었고, 일본 유신회는 조사 대상 전원이 개헌에 찬성했다.

반면 제1 야당은 입헌민주당 소속 당선자 중 개헌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경우는 61%에 불과해 입헌 민주당 내에서도 40%에 가까운 당선자가 개헌 여부를 두고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진보성향의 아사히신문 설문조사에서도 중의원 의원 조사 대상의 82%가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개헌의 큰 흐름에는 차이가 없었다.

아베총리는 11월 17일, 총선 이후 첫 국회연설에서 북한 위기를 부각시키면서

개헌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개헌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당 안팎에서도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여야의 틀을 넘어서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함께 전진하자. 서로 지혜를 모아 곤란한 과제의 답을 찾아가자”며 “그런 노력 중에 개헌 논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 드라이브를 걸었다. 아베총리는 총선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폭넓은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토대로 국민적 이해를 얻도록 노력할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아베총리가 추진해온 개헌이 실현된다면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2015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보법제를 개정하였고 이어 헌법까지 개정하게 되면 일본은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거듭나게 된다. 그동안 일본은 사실상 군대인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평화헌법으로 인해 그 기능이 국내 치안유지에 한정되어 있었다. 자위대는 1954년 발족 이래 일본이 공격을 받았을 때 필요한 최소 범위의 방위력에만 행사한다는 이른바 전수방위(專守防衛)의 원칙을 고수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상공을 지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군사력을 동원하지 못했다. 만일 개헌이 현실화된다면 미국이 아닌 직접 당사자인 일본이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옵션을 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사시에는 한반도에 자위대의 진입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점이 우리가 일본의 개헌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인 것이다.

이처럼 2017년 일본 대내정세는 총선을 통한 자민당의 입지 공고화와 개헌이라는 큰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강력한 미일동맹을 위한 정상간 신뢰관계 구축에 매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아베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유대관계 강화 및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 아베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미국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G20정상회의 등 다양한 정상회의를 통해 미일동맹 강화 및 강력한 대북제재 공조를 재확인하였다.

무엇보다 아베총리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외교행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었다. 11월 5일부터 7일간 2박 3일에 걸쳐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일 정상회담 양국 정상 주요 발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

미·일 기업 경영자 대상 간담회

"미·일 무역은 공정하지도
개방되지도 않았다"

(원칙적인 입장 표명)

워킹런치

"북한문제, (일본과의) 무역문제,
군사적 과제에 대해 말할 것이 있다"

"미·일 관계가 더욱 좋은 관계가
되기를 기대한다"

"미·일 동맹은 아시아태평양,
세계 평화와 안정의 기초"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더욱 확고하게 되길 바란다"

정상회담 모두발언

"워킹런치에서 무역과
북한 문제 등에 관해 이야기했다"
"특히 무역 분야에서는 적자를 줄이고
공정한 무역을 행하기 위해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확신한다"

"워킹런치에서 북한 문제를 포함해
국제정세 등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
"정상회담에선 국제정세와 경제,
양국관계에 대해 논의할 것"

정상회담

"북한 문제 관련 양국이 100%
함께 있다는 것을 강하게 확인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문명
세계에 대한 위협"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 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지지를 표한다"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된다"
"북한에 대한 추가적 독자제재 계획"

양국 동맹 강조, 중국 견제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전략'을 공동 외교전략으로 표명

공동 기자회견

"미·일이 지금까지 긴밀한 적이 없었다"
"불공평한 무역관계 해소에 노력할 것"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에 대해)
"일본뿐 아니라 중국 등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대책을 취하고 있다"

"이미 두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미·일 경제대화를 틀로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것에 합의"
"투자의 활성화와 에너지, 인프라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20171106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ey.kr/LeYN1

출처 : 연합뉴스 2017년 11월 6일

일본식 손님접대인 오모테나시 정성을 보였고,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만족한 듯 보였다.

미일 양측은 북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점, 견고한 미일동맹 강조 등에 합의를 이루었으나, 미일 간 무역불균형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방일 이튿날,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미일 기업 경영자 대상 간담회에서 “미일 무역은 공정하지도, 개방되지도 않았다”면서 양국 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노골적으로 언급하였다.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미일동맹의 견고함과 일본과의 무역불균형 해소를 이야기했고, 이에 아베 총리는 미국산 무기 구매 가능성을 시사 하였다. 또한 아베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가 주도하는 여성기업가 지원 기금에도 5천만 달러 지원을 약속하는 등 지나치게 저자세 외교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북방영토 해결을 위한 정상외교 풀가동

아베총리는 2012년 제2차 아베내각 출범 이후, 지난 9월에 열렸던 동방경제포럼까지 푸틴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총 19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등 북방영토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다. 2016년 5월 소치 정상회담에서 8개 항목에 걸친 러·일 경제협력플랜을 제안 이후 12월 15일(아마구치)과 16일(동경)에서 열린 러·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평화조약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결의를 표명 한다”는 문서에 합의하였다. 소치 정상회담 이후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서도 협상의 의지를 보였던 푸틴대통령은 섬 반환 이후 이 지역에 미일안보조약이 적용되는 것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으나, 아베총리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평화조약문제 해결이라는 문구를 넣는데 성공하였다.

작년 12월 15일(아마구치)과 16일(동경)에서 열린 러·일 정상회담결과, 북방영토지역에서 공동경제활동(어업, 해면양식, 관광, 의료, 환경 외 분야) 등을 대상으로 한, ‘평화조약체결교섭’에 관한 러·일의 입장을 해치지 않는 ‘특별한 제도’하에 북방 4도에 대한 ‘공동경제활동’을 개시하였으나, 아베총리가 언급한 ‘특별한 제도’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2017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에서 북방영토에서 5개 항의 공동경제활동에 합의하였으나, 외무성 및 학자, 언론

인들 가운데 아베총리가 추진하는 ‘공동경제개발’ 계획이 북방영토에 대한 러시아 주권을 인정하게 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중국견제를 위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 추진

아베총리는 2016년 여름,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전략’이라는 새로운 외교 전략을 제시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서 권익을 확대하려는 중국을 의식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자유와 법의 지배,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일본과 인도가 견인차 역할을 맡는 구상이다. 이 구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방일시 미국의 지지를 얻어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고노타로 일본 외상은 APEC 외교부장관 회담에서 호주의 줄리 비숍 장관과 만나, 미일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전략”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하면서 일본 주도의 외교 전략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고, 비숍 장관으로부터 연대 합의를 얻어 냈다. 미국도 최근에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명칭 대신 ‘인도 태평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간 연대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2. 2018년 전망 : 안정적 정권을 기반으로 “강한 일본” 만들기 가속화

2012년까지 총리직 연장 가능성 농후

아베총리가 내년 9월 시행될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승리하고 총리직을 이어간다면 전후 역대 최장수 총리도 가능하다. 전후 역대 일본총리의 재임일 기준으로 보면, 사토 에이사쿠(1901-1975)총리가 2,798일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총리직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로는 요시다 시게루(1878-1967)총리가 2,616일, 고이즈미 준이치 총리가 1,980일로 이미 고이즈미 총리의 재임기간을 훨씬 뛰어넘은 상황이다.

그러나, 작년 사학스캔들 해명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국민적 정서상 개헌을 반대하는 여론이 다수이기 때문에 아베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본 JNN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베총리가 내년 자민당 총재선거 이후에도 계속 총리직을 이어 3연임을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36%에 그쳤고, 이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54%보다 18%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총리직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50% 이상의 지지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자민당을 견제할 만한 야당이 없고 희망의 당과 입헌민주당은 정책적 성향이 상이하기 때문에 합당을 할 가능성은 매우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당분간은 자민당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아베총리의 자민당 총재 3연임은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 발의를 위한 국민여론 환기에 주력

아베총리는 2020년 새 헌법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혀왔고, 이를 위해 자민당은 헌법개정추진본부를 가동하면서 개헌안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나, 국민 여론은 여전히 우호적이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 방일 이후, 아베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한 반면, 개헌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마이니치 조사에서 “국회가 개헌안을 조속히 발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6%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이는 “서둘러야 한다”는 응답 24%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또한 아베총리가 제시한 헌법 9조 1항과 2항을 유지하고 3항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33%, 반대가 29%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렇듯 아직까지 개헌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미비한 상황에서 충분히 국민적 설득 없이 개헌 발의는 오히려 아베총리에게 위험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향후 일본 주요 정국일정 예정〉

시기	일정
11월 1일	특별국회 소집 / 총리지명선거 및 신내각 구성 발표
11월 5일-7일	트럼프 대통령 訪日 : 미일동맹강화 / 대북공조체제 재확인
11월 10일-11일	APEC/EAS 정상회의 : 중국, 러시아, 한국과의 정상회의를 통해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 요구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도쿄개최 예상
2018년 봄	정기국회에서 개헌 발의
2018년 9월	자민당 총재선거 : 2021년까지 총리직 확보
2018년 연중	개헌안 국민투표 예상
2019년 4월 1일	나루히토 왕세자 일왕 즉위
2019년 7월	참의원 선거
2019년 10월	소비세율 10% 인상
2020년 8월	도쿄올림픽 개최

‘인재 만들기 혁명’과 ‘생산성 혁명’을 강조한 경제 우선 국정운영

아베총리는 제4차 내각 발족이후 경제 최우선 국정운영을 표명하였다. 심각한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현상을 겪고 있는 현상해결을 위해 3년 동안 2조엔(약19조 5천억 원)을 투입해서 아베노믹스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장기간 지속된 디플레이션 해소를 위해 세금 및 예산 등의 정책을 총동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추가 경정예산을 연내 확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선거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인재 만들기의 주축이 되는 정책인 교육 무상화는 3세~5세 아이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유치원이나 보육원 비용을 무료로 지원, 2세 이하는 저소득 세대에 한해 무료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 등 고등교육도 저소득 세대는 수업료를 감면하고 일부는 채무의 부담이 없는 급부형 장학금 지원, 간병 인력 처우개선 및 보육원 활성화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미 저소득 세대 보육료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고, 고소득 세대일수록 저원 무상화의 혜택이 커진다는 것으로 격차의 확대의 우려가 예상된다. 또 하나의 ‘생산성 혁명’은 이를 추동할 동력이 없다는 지적이 있고 정책 시행을 위한 재원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 가시적 성과를 내기에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2012년 이후 추진한 아베노믹스의 성과는 취업률 상승과 함께 국민에게 체감되는 부분이 있어 아베총리의 지지율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 대외정책의 견지와 강화

아베총리는 2012년 12월 아베 제2차 내각 출범이후 추진해온 대외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일동맹 강화’ 및 ‘강한 일본 만들기’는 아베총리의 대외정책의 기조인 바, 2021년까지 일본의 대외정책의 기조는 ‘변화’보다는 ‘강화’의 추세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1월 5일부터 7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로 한층 미일동맹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대외정책은 총리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공고한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강한 일본 만들기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베총리는 서방 국가들 가운데 영국을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정상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미일동맹 공고화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신고립주의 정책으로 공백이 생기는 동아시아에서 미국

의 지원 아래 대국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역내 영향력 유지를 추구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기간동안 북핵문제와 무역불균형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총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층 더 강화된 대북제재에 합의하였고 미국과 일본의 대북강경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베총리는 지난 총선에서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는 언론사 출구조사 직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은 힘으로 압력을 가해 북한이 ‘정책을 바꿀 테니 대화하고 싶다’고 말할 상황을 만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북압력 강화는 헌법 개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헌법개정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이유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의 안보를 강화한다는 명분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향후 대북제재는 외교 채널을 통한 대북압박과 일본 방위력 강화의 축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자위대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6월 자민당의 안전보장 조사회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의 필요성을 내각에 공식 제안했고, 오노데라 방위상은 8월에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중관계는 양국의 상호이해에 따라 관리모드에서 진전

양국은 최근 일중국교정상화(1972년) 40주년을 계기로 정상 상호방문 재개 의사를 표명한바 있다. 실제 양국은 1998년 강택민 주석의 방일 이후 양국 정상간의 상호방문은 없었다. 중국의 대국화에 따른 일본의 견제와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의 갈등양상은 첨예화되어 왔다. 지난 중국의 제19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체제가 공고화되면서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도 감정적이기 보다는 실리적 관계 추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은 일본과의 대립관계 지속으로 경제 분야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팽배하기 때문에 정상 교류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차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양국의 상호 이해관계에 따라 관리차원에서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일관계는 북방영토 반환 진전 없는 현상유지

아베총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방영토 해결은 여전히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과 러시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이상은 경제협력 위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러 제재에 따른 제약과 러시아의 타협 배제 입장은 러일관계의 진전에 한계임에는 틀림없다.

한일관계는 투트랙 접근으로 미래지향적 관계 지향

아베총리의 집권연장으로 현재의 한일관계에는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문재인 정부의 현실적 대일정책에 대한 기대가 있으나, 위안부 합의에 대한 파기 및 재협상 여부에 대해 완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여부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후, 북핵문제 대응에 대해 한미일 공조를 재확인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언급한 바,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는 한미일 차원에서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정상은 여러 차례의 전화통화와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 원칙을 확인했으나, 위안부 합의 이행의 문제 및 독도문제, 과거사 문제 등의 내재적 갈등요인은 잠재되어 있다. 특히 북핵문제 등 동북아 안보가 엄중한 시기에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재차 불거질 경우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억지에 대한 양국의 입장은 동일하나, 접근법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화·압박 병행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아베총리는 대화불가·제재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공조가 중요한 시점에서 일본과의 안보 소통 강화(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논의를 포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략적 이해차원에서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01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주년이자,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해로 이를 계기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제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일 셔틀외교를 빠른 시일에 복원하고 긴밀한 한일협력을 통해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에 현명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

‘21세기 짜르’ 푸틴시대의 만개와 새로운 국가 도약·퇴영의 길목

서동주

1. 2017년 평가 : ‘푸틴 러시아’의 존재감 보여주기

신짜르 푸틴과 러시아 혁명 100주년의 반추

2017년도 러시아정세의 향배에는 여전히 푸틴 대통령이 그 정점에 자리매김 하였다. 포브스(Forbes)지가 4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영향력 1위의 인물로 선정한 것을 입증하듯,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대내외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다. 2017년 러시아 푸틴정부가 역점을 둔 핵심 이슈는 대러 제재 해제와 침체된 경제 회생, 내년도 월드컵과 대통령 선거 대비,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 위기관리, CIS권 영향력 제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러관계 탐색과 조정, 신동방정책의 가시적 성과 도출 등이었다.

무엇보다 미국과 서방측의 대러 제재 여파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했으며, 극동지역의 경우 선도경제구역 설립 운영, 토지 무상 공급법 시행, 수입대체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였다. 금년도의 경우 러시아 경제는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 몇 해에 비해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주었다. 러시아 정부 및 주요 국제기구인 2017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을 1.7%~2.2%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IMF도 러시아가 유가회복, 국내 금융 여건 및 시장 심리 개선 등으로 지난 2년간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에 GDP 성장률 -3.7%를, 2016년 -0.6%를 기록한 점에 비추어 경제회복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무역수지, 외환보유고 등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었다. 무역수지 경우 9월까지 80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외환보유고 역시 4,248억 달러로 세계 6위 수준을 유지하였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도 러시아의 신용 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하였다. 이를테면 지난 9월 피치(Fitch) 그룹은 러시아 장기신용등급을 BBB-로 확정하였고, 전망치를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활력을 되찾으며 침체기를 벗어나고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

그렇다고 러시아 대내 경제상황이 좋아진 것만은 아니다. 대도시 현지인들은 여전히 체감 경기가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고, 국제 저유가 추이,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경직성 등도 여전히 경제 회생의 장애요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서방측의 대러 제재를 해제 또는 완화시켜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은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대내적으로 러시아는 볼셰비키 혁명 100주년을 맞아 어떻게든 이를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했고, 가급적 정치적 색채를 넣지 않고 러시아 현 위치와 정체성을 반추해 보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정치적으로 푸틴 대통령은 2016년 9월 18일에 치러진 국가두마 선거에서 집권당인 통합러시아가 압승을 거둠에 따라 정치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통합러시아는 총 450석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343석을 확보). 또한 2014년 3월 크림반도 병합에 따른 국내 애국주의(愛國主義) 열풍의 후광도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70~80%를 상회하는 등 푸틴은 대내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고 도전자 없는 패권적 권력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다. 금년도 9월 10일 치러진 주지사 선거에서도 16석 모두를 통합러시아가 석권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이와 더불어 전년도에 44세였던 안톤 바이노(Anton Vaino)를 대통령 행정실장에 임명한 데서 보듯 2017년도에도 차세대 신진 인물들을 고위직에 기용하는 등 세대교체 작업도 지속해 나갔다. 특히 30~40대의 젊고 능력 있고 참신한 인물군을 주지사직으로 추천하는 등 2018년 3월 대통령 선거와 더 멀리 포스트 푸틴시대까지도 대비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반면에 푸틴의 장기집권에 대한 정치적 피로감도 나타났다. 러시아 반정부 인사의 상징적 인물인 알렉세이 나발니(Alexei Navalny)를 주축으로 한 반정부

시위가 3월과 10월에 잇달아 일어났다. 비록 중소 규모에 불과했지만 젊은이들이 주도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99개 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점이 주목을 끌었다. 그리고 매년 2월에는 피살된 야권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를 기리는 추모 행진도 연례행사로 자리 잡았다. 정치적 무관심한 상태에 있는 일반 대중이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표출할 것인지 또 다른 궁금증으로 남아있다. 부패 폭로와 무심한 언행 등으로 메드베데프 총리의 위상이 흔들거리기도 했으며, 이는 사회적 화제 거리이자 풍자적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NGO 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를 비롯해 지자체와 사회 통제도 이전에 비해 보다 강화되어 나갔다. 테러에 대한 위험성도 여전히 대형 쇼핑몰과 지하철 등 대중이 모이는 곳에는 여전히 검문, 검색이 강화되었다.

푸틴정부는 러시아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강국으로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는 도구로서 커다란 국제 행사를 잘 활용하여 왔다. 2006년 G8 정상회의, 2012년 APEC 정상회의, 2013년 G20 정상회의와 카잔 유니버시아드 대회,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2018년 월드컵 개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내년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대대적인 도시 미관 정리 사업이 이뤄졌다. 모스크바의 경우 옛 도로에 자전거 거리를 새로이 만들기 위해 한여름 내내 도로를 개보수 하느라 교통 체증이 이만저만하지 않았다. 그래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새롭게 깨끗이 단장된 모스크바는 내년 월드컵 행사의 성공을 기약해 보려한다.

공세적 방어 전략의 지속과 국제적인 존재감 과시

러시아 푸틴정부는 대외정책 추진에 있어 기본적으로 세계 지구본을 놓고 바라보며 세계전략을 구사하고자 한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는 소위 ‘新푸틴독트린’에 토대를 두고 ‘실용적 신전방위 강대국 노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성격상으로는 공세적 방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러시아가 강국으로 부활했다는 인식 속에 국제적인 위상 제고와 영향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7년에도 이의 연장선에서 대외정책이 추진되었다.

러시아는 브렉시트(Brexit) 이후 유럽 질서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의 적절한 긴장과 안정적 관리에도 신경을 썼다. 크림반도 병합 이후 국경 변경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폴란드, 발트 3국들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군사적 지원이 강화되자, 이에 대응하듯 9월에 벨라루스와 공동으로 최대 규모의 ‘자파드 2017’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7월에는 중국의 함대가 최초로 발틱해에 출현해 중·러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모습도 연출되었다. 또한 헝가리, 터키와의 우호 협력관계 강화 등 유럽연합의 틈새를 공략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중동 시리아 내전에도 개입해 이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슬람국가(IS) 퇴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국제무대에서 주요 행위자임을 과시하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에 체결된 이란과의 핵합의(JCPOA, 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불인정을 선언하자, 크게 반발하는 등 중동질서 재편에 있어서도 주역임을 보여 주려 하였다.

한편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러시아는 트럼프의 親러 성향과 親푸틴 언행, 마이클 플린과 렉스 텔러슨 국무장관 등 親러 성향 인물을 등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미러관계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미러관계는 비록 오바마 집권기처럼 악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대하였던 것만큼 관계 개선을 이루지 못하였고, 정체 내지 갈등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 속에 러시아커넥션 문제가 미 의회에서 다뤄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미 정계 내에 反러 정서가 적지 않음도 양국 관계 개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푸틴과 트럼프는 7월 독일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회동하였다. 푸틴과 트럼프는 상호 신뢰와 우의를 다졌지만, 양국 관계를 협력 우위로까지 변화시키지는 못하였다. 이후 미 상원과 하원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채택함으로써 유럽의 對러 경제 제재 연장 조치와 맞물려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경제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간주하고 미루었던 외교관 755명을 맞추방 하는 등 對美 불신·대립·갈등 입장이 점차 심화되었다.

종합적으로 트럼프의 푸틴에 대한 호의적 평가와 親러 인식에도 불구하고 미러관계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미 의회의 反러 정서와 강경책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미러관계에 있어서는 지도자 개인의 리더십 보다는 정치적 시스템에 의한 결정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러관계의 추이는 초기에는 러시아가 대러 제재 완화 내지 폐기 등 양국관계 개선에 기대를 걸었으나, 미 의회의 대선 관련 청문회

개최 및 조사 진행, 대러 추가 제재 결의 등으로 인해 점차 대미 신뢰가 저하되고 양국 간 갈등이 커져가는 모습을 나타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미 의회의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조사 결과 및 대러 제재가 양국관계 향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러중관계는 여전히 돈독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미 견제에 대한 공동 인식과 이해가 맞물린 가운데 푸틴과 시진핑은 SCO, BRICS, G20, APEC 등에서 회동하면서 기존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공고화를 지속해 나갔다. 특히 금년도의 경우 발트해와 오호츠크해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하는 등 군사협력을 강화해 주목을 끌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러시아를 4월과 9월 두 차례 방문해 푸틴과 회담을 하는 등 최근 긴밀해진 러일관계의 상황을 지속해 나가려 하였다. 아베 총리는 양국 간 경협 증진을 통해 북방영토 해결에 진전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러시아가 오히려 쿠릴열도에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등 북방영토 문제가 앞으로도 난항을 겪을 것임을 시사해 주었다. 큰 틀에서 바라보는 동아시아, 동북아 질서 구도는 ‘미일 동맹 대 중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여전히 핵심적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위기 동향 주시와 중재자적 역할 탐색

러시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형성된 한반도의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군사적 행동 배제와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남북한 균형 접근을 통한 중재자적 역할을 모색하려 하였다.

러시아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호감과 기대감을 갖고 한·러 경협 증진 등 관계 발전을 이루려 노력하였다. 독일 함부르크(7월)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9월) 등 두 차례에 걸쳐 한·러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시기적으로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이뤄졌고,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논의와 맞물려진 가운데 한·일, 러·일 정상회담과 더불어 개최되어 국제적 이목이 더욱 집중되었다. 한국의 입장에서 블라디보스톡 정상회담은 △신정부 출범 이후 한·러관계 재도약의 계기, △극동시베리아 개발 협력 및 진출, 유라시아 협력 창출,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와 압박에의 협조 확보, △신북방정책의 비전 제시와 추진 동력 마련 등의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번 정상회

담에서는 △한·러 정상 차원의 전략적 협력 기반 구축, △한·러 양자 수준에서의 극동지역 개발 참여와 실질 협력 기반 마련,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 간 정책적 정합성 및 협력 인식 공유, △남북러 3각 경험의 미래 비전과 중장기적 추진 의지 제시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러 경제협력 추진 방향〉

- * **한·러 정상 차원 전략적 협력기반 구축**
 -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 공유
 -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
- * **극동지역 개발 참여와 실질 협력**
 - 동북아시아와 유럽 연결하는 북극항로 개척
 - 철도, 항만, 조선, 도로 등 인프라 개발
 - 농수산, 물류, 보건의료 교류
 - 남·북·러 가스관 연결
 - 유라시아-한반도 철도 연결
- * **편중된 교역구조 다변화**
 - 원자재와 공산품 -> 소비재
- * **한국-EAEU(유라시아경제연합) FTA 체결 논의**
- * **평창 동계올림픽 교류 확대**

출처 : 매일경제 2017년 9월 7일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해 한·러 경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20억 달러 규모의 한·러 투자협력 플랫폼을 신설하는 등 5개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의 후속조치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반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원유공급 중단 요구 등 추가적인 대북 압박과 제재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소극적 자세로 사실상 거절하는 양태를 표출함으로써, 對러 설득에의 한계점도 나타내었다. 앞으로 북핵 문제를 포함해 한·러 간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이끌어 나가야할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북러관계는 전년도까지 답보 상태를 띠었으나, 금년도 들어 교역이 증가하고 고위급 인사들의 교류도 증가하는 등 관계 강화의 모습을 띠었다.

러시아는 북핵·미사일 문제에 있어 당사자로서의 참여 기회 및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며, 북한은 북중관계가 악화된 상황 하에서 러시아로부터의 지원과 지지를 획득하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최선희 북미국장은 올렉 부르미스트로프 러시아 외교부 한반도문제 담당 특임대사와 여러 차례 회담을 가졌으며, 10월에 개최된 ‘2017년 모스크바 비확산회의’에도 참석해 주목을 끌었다. 이밖에도 모로조프 하원의원의 방북, 타 이사예프를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하원의원 대표단의 방북 등 고위급 인사들의 교류도 성사되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도 찬성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는 나름대로 평화적 북핵 해결을 위한 단계적 문제 해결 구상을(3단계 해법) 제시하고 이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2. 2018년 전망 : 푸틴, 장기집권 여정(旅程)의 시작

2024년까지의 집권 행보와 FIFA 월드컵 축제

2018년도 푸틴 대통령은 2가지 중요한 국가적 행사를 맞게 된다. 하나는 3월 18일에 예정된 차기 대통령 선거이며, 다른 하나는 6월에 치러질 예정인 FIFA 월드컵이다.

대내적으로 정치권력을 공고화해 놓았고, 정치적 안정과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확보한 상황 하에서 3월에 치러질 대선은 단지 푸틴의 출마 여부가 가장 핵심 변수이자 중요한 요인이다. 푸틴 대통령은 12월 6일 니즈니 노브고로드의 자동차 공장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차기 대통령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스트롱맨(strongman)의 이미지에서 보듯 65세의 나이는 걸림돌이 아니며, 또한 그를 견제할 정치적 대항마도 없다.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다. 이번에 출마해서 당선되면 6년의 임기로 2024년까지 집권하게 된다. 오히려 자신의 가장 큰 경쟁자는 푸틴 자신일지도 모른다. 장기 집권에 따른 정치적 피로도도 극복해야 하며, 일반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 경제 침체 상황을 극복해야 할 과제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푸틴은 2012년에 획득한 63.6%에

근접하거나 보다 많은 득표를 얻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을 수 있다. 젠나디 주가노프 러시아공산당 당수가 4번째 출마를 선언하였고, 개혁 성향의 야블린스키 야블로코, 인기있는 여성 방송인 크세니야 소브차크도 출마를 선언하였지만, 푸틴의 적수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법적으로 출마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알렉세이 나발니의 향배로 관심거리가 될 것이다. 아무튼 푸틴 대통령이 출마하면 당선이 확실하며, 집권 4기를 열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9월에 있을 모스크바 시장 선거에서도 현재 소바닌 시장이 그간의 업적을 토대로 다시 출마해 재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FIFA 월드컵은 12년 만에 동유럽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비록 미국과 이탈리아가 탈락해 흥행에 다소 문제가 있지만, 소치 동계올림픽 개최에서 보듯 국가적 행사로 여긴 가운데 많은 관심을 갖고 테러 방지 등 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 자긍심과 슬라브 민족적 자존심 제고 등 국내 통합을 위한 계기로 삼아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과연 푸틴이 집권 4기를 열어 나갈 경우, 새로운 국가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을 어떻게 다듬고 가꾸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며, 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신전방위 강대국 노선의 지속과 유라시아권역 통합 행보

푸틴정부는 대외정책과 관련해 2014년 3월 크림병합 이후 일련의 외교안보 문서를 성안해 놓았다. 2014년 12월에는 신군사독트린을, 2015년 12월에는 국가안보전략개념을, 2016년 11월에는 대외정책개념 문서를 제정해 실천에 옮기고 있다.(www.scrf.ru) 물론 그 근간에는 소위 新푸틴독트린이 자리 잡고 있다. 신푸틴독트린의 핵심 내용은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의 절대 사수, 우크라이나 사태에는 미국과 서방측의 책임이 존재, 다극 질서하 러시아의 역할 제고, 국가주권에 입각한 국제법 준수와 내정 불간섭 원칙 강조, 핵무기 포함 강력한 국방력 강화 등이다. 2018년에도 이러한 대외정책 기반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은 세계를 이미 다극화와 다자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 위상 제고, 영향력 확대를 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푸틴정부는 이전과 같이 新푸틴독트린과 함께 “실용적 신전방위 강대국 노선”을 견지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측의 對러

제재 해제와 효과 상쇄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협력 증진, NATO 東進과 유럽 MD구축에의 군사적 대응, CIS에 대한 영향력 유지, 시리아 내전의 평화적 종식, 중·러 협력 관계 지속 유지 등을 통해 EU, 동유럽, 중앙아, 동아시아로 이어지는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재편에 적극 조응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러시아는 범유라시아권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과의 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주요 안보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UN의 국제적 역할을 강조하고, BRICS, SCO, G20, CSTO, APEC, EAS, ASEM 정상회의 등 다자 협력기구에도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이슬람국가(IS) 퇴치, 식량안보, WMD 확산 방지,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등 초국경 안보 현안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려 할 것이다.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개인적인 친목과 우의를 다져나갈 것이나, 미국 내 러시아 스캔들 조사 항배, 의회 내 반미 정서 등을 감안할 경우 내년에도 획기적인 관계 개선을 이루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러 간 핵무기 감축 협상 재개, 국제 테러리즘에의 공동 대응, WMD 확산 방지, 우주공동 탐구 등 사안별로 일정정도 협력을 이끌어 내는 부문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신정부 출범 이후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러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푸틴의 중국 방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연례적으로 SCO, BRICS, G20 등을 통해 양자회담을 가졌던 모습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체제 2기의 출범과 맞물려 一帶一路(Belt & Road)와 러시아의 유라시아협력 구상의 세부 실천도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이 금년도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안하였던 ‘아태·유라시아 경제협력체제 구상’ 실천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푸틴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5월, 아베 일본총리 초청), ‘발다이 토론 클럽’ 회의,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9월) 등 연례적 행사에도 참석해 러시아의 국가 발전을 위한 기회로 활용해 나갈 것이다.

2018년에 한국과 러시아 모두 세계적인 국제스포츠 행사를 치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2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이며, 6월에는

FIFA 러시아 월드컵이 예정되어 있다. 한국은 예선을 통과해 월드컵 대회 본선에 진출하였고, 독일, 스페인, 멕시코와 함께 F조에 편성되었다. 푸틴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니즈니 노브고로드(6.18, 1차전 스웨덴)에서부터, 로스토프(6.24, 2차전 멕시코), 카잔(6.27, 3차전 독일)으로 이어지는 경기일정을 치른다. 우리 선수들이 멋지게 선전하고, 응원하는 국민들 모두 러시아의 스포츠는 물론 문화와 예술, 역사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비록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결정으로 러시아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국가자격(NOC)이 아닌 개인 자격(OAR)으로 참가하지만, 양국 국민 모두 상대국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www.pyeongchang2018.org)



러시아 월드컵(www.fifa.com, <http://worldcup2018.org>)

동시에 2018년은 한·러가 수교한지 28주년이 되는 해이며, 양국 간 공식 관계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킨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내년도에는 금년 9월 블라디보스톡 한·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양해각서(MOU)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9개 다리(bridges)’ 협력 분야 등 제반 경협 사업의 후속조치 작업이 본격화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우리의 신북방정책 간 접맥점을 찾아가며 신설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한·러 간 경협 증진 모습이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간 상호 신뢰하는 정책적 호감도가 높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다만 사드 배치, 북핵문제 해법을 둘러싼 이견,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의 성실한 이행 여부 등은 잠재적 긴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정부는 남북한 균형 접근의 입장을 지속 견지해 나가면서 극동시베리아 개발에의 한국기업 투자 유인, 나진~하산 물류프로그램 지속 등 경제적 실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도 증대시켜 나가려 할 것이다. 이밖에도 북한 핵·미사일 해법으로 제시한 단계론적 접근법을 중국과 공조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문제에 대한 현안 당사자로서 개입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자적 역할 자임 가능성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발렌티나 마트비옌코(Valentina Matvienko) 상원의장이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할 예정으로 있어 그 행보도 주목된다.

북핵·미사일 문제로 인한 한반도 복합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러시아는 이를 중재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으로 한·러 간 내실 있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가꾸어 나가고 이 모습이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유럽 정세의 불확실성 고조 : 극우세력, 지정학 경쟁, 안보 자율성

이수형

2017년 국제정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아마도 불확실성이라는 용어가 가장 적합할 것이다. 불확실성의 국제정세를 야기하는 요인은 복합적이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라는 주요 국가들 간의 힘의 전환, 세계화로 인한 다양한 행위자의 출현에 따른 힘의 분산과 네트워크 강화 현상, 지역적·국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기존 제도들의 적응력 약화와 새로운 제도들의 탄생 부재,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대변되는 브렉시트(Brexit)의 파장,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등이다. 복잡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작용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고, 다른 어느 지역의 정세보다도 유럽의 정세 변화가 가장 불확실한 것 같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유럽 정세의 불확실성은 유럽 자체의 내부 요인과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그리고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 등에서 연유하고 이것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정세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치유되기 힘들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및 향후 유럽 정세의 방향과 펼쳐질 모습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 문제는 극우세력의 정치화, 나토(NATO)-러시아 간의 지정학적 경쟁,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안보 자율성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3가지 문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나 현재의 상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유럽 정세의 방향과 흐름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브렉시트와 극우세력의 발호

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2010년 유로존의 위기는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를 촉발시켰고 이는 궁극적으로 영국으로의 이민자 확대와 난민 유입의 증가 등과 맞물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2016년 6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이라는 브렉시트가 일어나게 된 근저에는 세계화로 인한 국가 내부의 격차, 국가 간 격차, 지역 간 격차의 심화에 따른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가 깔려 있었고 이것이 유럽의 재정위기와 중동지역의 불안정에 따른 유럽으로의 난민 유입 증대 등과 맞물려 브렉시트가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렉시트의 파장은 단순히 영국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유럽연합과 유럽 정세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브렉시트는 60년 이상 확대와 심화과정을 통해 하나의 유럽을 건설하겠다는 유럽통합의 원대한 장도에 큰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의 주요 기제인 다자주의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계기가 되었다. 근대 이후 역사의 시대적 흐름은 국가화(Nationalization)를 넘어 지역화(Regionalization)와 세계화(Globalization)로의 흐름이었고 국제협력의 제도화과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기조와 맞물리면서 나타나고 있는 브렉시트의 여파는 각자도생의 생존논리를 중시하는 역사 흐름의 반전이자 지정학과 지정학이 동시 복합적으로 경쟁하는 불확실의 시대를 가속화시켜 나갈 수 있는 국제적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브렉시트가 유럽의 정세에 미치는 파장은 무엇보다도 ‘우리’라는 공동체 정신보다는 ‘나’라는 차별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테러와 날로 증대하는 난민 유입에 직면한 유럽에서 극우세력의 발호와 확장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에서 극우세력의 발호는 이미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일례로, 2016년 10월 스위스 총선에서 극우성향의 국민당이 승리했고, 10월 15일 폴란드 총선에서도 보수 성향의 법과정의당이 압승을 거뒀다. 이러한 극우세력의 정치세력화는 2017년 10월 오스트리아의 극우 연정의 탄생을 계기로 상징화되었다. 오스트리아에서의 극우 연정의 탄생을 두고 CNN은 유럽 정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이는 유럽 전반에 걸쳐 극우 흐름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유럽의 정치지형에서 영향력을 넓혀 나가고 있는 극우세력이 내세우는 슬로건은 크게 3가지이다. 반난민, 반이슬람, 반유로다. 특히, 시리아 난민 등 중동과 아프리카의 수백만 난민이 들어오는 통로에 위치한 중·동유럽 국가들은 난민과 난민에 뒤섞여 들어오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 그리고 자국 경제를 망쳤다고 인식되는 유로화에 대한 분노가 극심한 지역들이다. 유럽의 극우세력들은 이러한 3대 분노를 자양분으로 삼아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다원주의 원칙과 난민보호정책을 강하게 주장하는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연합 중심국가들의 주장에 대해 난민 유입 당사국인 중·동부 유럽국가 주민들의 분노는 상당하다. 유럽 극우세력들이 ‘탈 유럽연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데에는 이러한 민심이 바닥에 깔려있는 것이다.

문제는 유럽에서 극우 또는 우파 정당이 약진하고 이들의 주장에 공감하는 일반 유럽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전통을 존중하는 일반 대중이 유럽의 과도한 이슬람화에 느끼는 우려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극우 연정에서 알 수 있듯이, 극우세력의 정치세력화는 이들의 반자유주의 사상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극우도 현대 민주주의에서 당당히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정치적 신호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의 확대 또는 가속화는 이슬람극단주의와 반이슬람주의의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유럽의 정치적·이념적 전통과 체제가 뿌리채 흔들릴 수도 있다.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유럽연합의 기본정신이 후퇴하는가 하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나아가 유럽의 정치지형에서 극우세력의 급증은 유럽이라는 공동체를 붕괴시킬 맹아적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 말부터 유럽 각국은 이슬람국가(IS) 대원이 되겠다며 시리아로 향하는 청년들로 인해 몸살을 앓았다. 전문가들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74개국 출신 지하디스트 1만 2000명 중 약 3,000~4,000명이 유럽 출신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들어와서는 IS행 유럽 청년들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지만 IS는 여전히 인터넷을 통해 유럽 청년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유럽 공동체가 다른 인종, 다른 종교를 포용하는데 실패했다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아랍계 인구가 많은 프랑스에서는

사회조직에 통합되지 못하고 빈곤과 소외를 겪는 아랍 청년층의 문제가 이미 심각한 상태이다. 이런 청년들이 극단이슬람주의에 빠져 ‘외로운 늑대’식의 테러를 저지르면 이에 대한 반동으로 극우주의가 강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역사적으로 반이슬람 정서가 강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그리고 폴란드 등의 중·동유럽 국가들은 유로존에 대한 분노도 작지 않다. 냉전종식 이후 주로 미국과 아시아의 경제성장 추세에서 강한 유럽을 만들겠다는 유럽연합이었지만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유로존 위기의 여파로 유럽 각국에서는 실업률 악화와 소득감소를 경험하였다. 그 과정에서 유로화 개설텐 당시 유로화보다 화폐 가치가 낮았던 남유럽과 중·동유럽 국가들 다수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대량의 공적자금이 남유럽 금융위기에 투자되는 것을 계기로 중·동유럽 국가의 시민들은 유로존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고 자신들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이러한 인식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브렉시트는 ‘탈 유럽연합’을 주요 정책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유럽 극우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향후 유럽에서는 극우 정당의 득세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통합과 분열이라는 구심력과 원심력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작용할지에 따라 유럽연합의 장래와 유럽의 정세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나토와 러시아의 지정학 경쟁

지난 20세기 유럽의 안보 성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지정학의 안보였다. 민족주의와 이념에 바탕을 둔 국가 가치의 대립과 갈등은 지정학의 안보를 강화시키면서 3차례의 대전은 야기했다.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이 열전의 형태로 나타났다면, 한차례의 대전은 인류 역사에서 보기 드문 냉전의 형태로 분출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유럽의 안보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민족주의와 이데올로기의 악령을 뒤로하고 협력과 통합, 그리고 다자주의 제도의 활성화로 유럽에서 지정학의 안보는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고조시켜 왔다. 21세기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가지로 지정학의 안보가 역내 안보질서의 성격과 특징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유럽의 안보는 냉전종식 이후 보다 확대되고 심화되어 온 다자주의 제도의 영향으로 지정학의 안보보다는 지경학과 연성안보, 그리고 초국가적 안보가 중시되어 왔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위기는 유럽에서도 지정학의 안보가 부활될 수 있다는 전주곡이 되었다. 냉전종식 이후 2014년의 위기이전까지 유럽의 안보는 나토의 확대정책과 유럽연합의 안보정책의 발전으로 상징되었다. 즉, 21세기에 들어와 유럽의 안보 정세는 나토와 유럽연합의 안보정책이 보다 확대되고 발전되는 가운데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테러와 해적 등의 문제가 주요 안보 의제로 작용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 안보 정세와는 달리 유럽에서는 역내 국가들 간의 군비확충과 군사안보적 갈등과 대립이라는 지정학의 안보는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위기가 지속되면서 유럽의 안보지형은 그동안 수면 밑에 잠복해 있던 지정학의 안보가 부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2014년에 발생한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친러시아 세력의 소요로 발생한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해 나토는 러시아의 행동을 ‘게임 체인저’로 명명하고 강력히 반발하였다. 이에 따라 나토는 2002년 러시아와 맺은 ‘나토-러시아이사회(NRC)’라는 특별한 동반자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함과 동시에 유럽연합과 더불어 대러시아 제재를 추진하였다. 2017년 미국의 상원은 러시아 추가제재법안을 통과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서명하였다.

우크라이나 위기를 계기로 당시 포로셴코 정부는 2014년 11월 유럽연합과 나토 가입을 위한 6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국민투표를 거쳐 가입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우크라이나 의회 역시 12월에 비동맹지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여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였다. 참고로 2014년 당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나토 가입 지지율은 16%에 그쳤으나 2017년에는 54%로 3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위기를 계기로 나토와 러시아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나토와 러시아 관계 악화 요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2010년부터 나토가 추진해 온 유럽지역에서의 미사일방어체제

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이다. 2010년 2월 미국의 국방부가 「탄도미사일방어심의 보고서(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 Report)」를 발표한 이후 미국은 동맹 차원에서 유럽에서의 단계적 적응적 접근방법(EPAA : European Phased Adaptive Approach)으로 명명된 미사일방어체제를 강화해 왔다. 특히, 나토는 2017년에 들어와 루마니아에 배치한 미사일방어체제에 우크라이나를 참여시키기 위한 협상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다가 러시아의 강한 반발로 이를 연기하였다.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나토의 미사일방어체제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보다 악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나토-러시아 관계악화를 초래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폴란드 및 발트 3개국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쪽의 군사력 증강 현상이다. 지난 9월 14일~20일에 걸쳐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연합 군사훈련인 ‘자파드 2017’ 실시하였다. 벨라루스는 나토 동맹국인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3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로 러시아와 정례적(4년)으로 합동 군사훈련 실시해오고 있다. 양국은 ‘자파드 2017’ 훈련에 1만2천700명의 병력과 70여대의 전투기 및 헬기, 250대의 탱크, 그리고 200문의 대포 및 다연장 로켓포가 동원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방은 2017년 러시아측 참가병력 규모가 냉전 이후 최고치에 달하면서 일각에서는 10만 명이 훈련에 참가할 것이란 관측도 내놓았다. 한편, 미국은 2017년 1월 ‘대서양 결의(Atlantic Resolve)’라는 나토 합동훈련의 일환으로 3천명의 미군 병력을 동유럽으로 증파(동유럽 7개국으로 분산 배치)했고, 5월 나토는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발트 국가에 4천명의 군 병력을 주둔시켰다.

2014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위기와는 별개로 향후에는 새로운 나토 회원국 가입 논의 문제를 둘러싸고 나토와 러시아간의 새로운 갈등이 증폭될 개연성도 존재한다. 2017년 4월에 이루어진 몬테네그로의 나토 가입은 조지아와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나토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상태이다. 조지아와 핀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 들어와 나토 가입을 위한 논의가 전개된다면 이는 나토와 러시아간의 새로운 갈등의 씨앗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측면에서 향후 유럽의 안보 정세를 전망한다면 나토와 러시아의 군사적

대결양상이 강화되어 유럽 지역에서 지정학의 안보가 부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은 2018년 7월 11~12일에 걸쳐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인 나토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그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7월 브뤼셀 나토 정상회담은 트럼프 취임 이후 완전한 형태의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는 첫 번째 회담이 될 것이다. 특히, 이 회담 이전까지 미국의 안보전략(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핵태세점검보고서, 탄도미사일방위검토 등)이 거의 확정되어 나토 정상회담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가 회담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2월에 공개된 「국가안보전략서」에서 러시아를 중국과 더불어 지구적 차원에서의 경쟁국으로 규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 브뤼셀 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의 세력 확장에 대한 나토의 보다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브뤼셀 나토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와 회원국가들 간의 입장 조율 여부에 따라 나토의 위상 및 나토-러시아 관계, 그리고 유럽안보질서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럽에서 지정학의 안보가 부활되는 것은 현재의 상황과 조건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시간의 문제이다.

유럽의 안보 자율성 강화 문제

2017년도 유럽연합의 제도적 발전에서 가장 흥미로운 현상중의 하나는 12월 14일에 공식적으로 출범한 유럽연합의 항구적 안보협력체제(PESCO : 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 on security and defense)의 탄생이다. PESCO는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안보방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공동 무기 연구개발 및 구매, 의료부대 창설, 훈련센터 설립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럽군 창설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PESCO의 출범에 대해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난 반세기 이상 동안 추진해 온 유럽연합 군사공동체의 꿈이 현실이 됐다며 PESCO는 유럽방위를 구축하려는 우리 의지에 대한 실용적인 표현”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날드 투스크 상임의장은 PESCO의 출범으로 나토의 위상이 약화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유럽의 강력한 방위능력은 자연적으로 나토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유럽연합에 좋은 것은 유럽과 나토에도 좋은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유럽방위를 강화하는 이 같은 이니셔티브를 환영하며, 유럽연합과 나토가 한 회원국에서 서로 충돌되는 요구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의 안보정책은 1991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계기로 탄생한 공동외교 안보정책(CFSP)을 토대로 유럽안보방위정책(ESDP)과 공동안보방위정책(CSDP)으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전투그룹을 창설하고 지중해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안정화 작전을 수행해 왔다. 또한 긴축재정 시대를 맞이하여 유럽연합은 2011년 12월 군사능력의 공동출자(pooling)와 부담공유(sharing)을 위한 ‘겐트 프레임워크(Ghent Framework)’를 출범시킨 바 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고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로 유럽과 미국의 관계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PESCO가 출범했다는 것은 일단 유럽연합의 안보 정체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안보정책의 역사적 궤적을 상기해 보았을 경우 향후 PESCO가 원만하게 발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그리고 나토와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는 매우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

특히, 영국이 배제된 PESCO가 유럽연합의 안보정체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발전한다면, 이는 투스크 상임의장의 공식 발언과는 달리 나토의 위상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의 안보 정체성 강화라는 것은 유럽 안보의 성격에 대한 인식과 이를 담당할 행위 주체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측면에서 나토의 위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감은 유럽연합의 안보 정체성 발전의 초기 국면에서 이미 표출된 바 있다. 나토 내에서 유럽의 안보정체성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결정한 1996년의 베를린 합의와 1998년 영국과 프랑스의 생-말로 정상회담을 통해 나타난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안보방위정책 강화 방침에 대해 당시 미국의 올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 국무장관은 1998년 12월 브뤼셀 북대서양이사회에서 유럽연합의 독자 안보화에 대한 미국의 우려감을 공개적으로 피력하였다.

당시 올브라이트는 나토 내에서 유럽의 안보방위정체성 발전과 유럽의 능력 강화를 환영하지만 유럽연합의 군사능력 강화의 판단기준으로 소위 ‘3D’로 알려

진 탈연계(De-linking), 비차별(Discriminating), 복제(Duplicating)를 제시하였다. 즉, 유럽연합의 안보정책 발전을 위한 어떠한 이니셔티브도 유럽안보방위 정체성을 나토로부터 탈연계시키는 동맹의 정책결정을 피해야만 하고 미국과 유럽의 안보를 분리시키지 말아야 하며, 나토 회원국이면서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럽연합의 안보정책의 발전이 현존하는 나토의 군사구조를 복제하는 양상으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상기했을 경우, PESCO의 미래는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나토의 정체성은 동맹의 역할을 놓고 이중적이다. 즉, 오늘날 나토의 정체성은 ‘NATO is Atlantic Alliance with Partnership’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에 나토의 역할 문제를 놓고 인식의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유럽 국가들은 나토의 대서양동맹을 강조하면서 나토의 역외 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반면, 미국은 나토의 역외활동을 강조하면서 테러와의 전쟁에 나토가 활용될 수 있기를 원한다. 이런 측면에서 미래 나토의 역할 설정과 PESCO의 발전 양상에 따라 미국과 유럽 관계도 많은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유럽의 정세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불확실성의 길에 들어선 것은 자명한 것 같다. 브렉시트 문제를 놓고 영국과 유럽연합간의 협상이 언제 종료될지도 불확실하다. 극우세력의 발호가 유럽의 정치지형과 유럽연합의 구심력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지도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나토와 러시아간의 지정학적 경쟁이 제한적 범위에 그칠지 아니면 유럽의 안보지형 전반으로까지 확대될 것인지도 예측 불허이다. PESCO를 통한 유럽연합의 안보정책 강화의 정도와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나토의 위상과 역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현재로서는 속단하기가 힘들다. 아마도 이러한 복합적인 불확실성의 정도와 깊이, 불확실성의 지속 기간,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유럽 정세와 국제정세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은 향후 유럽연합의 정치적 지도력과 나토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혼란과 갈등이 심화되는 중동정세

강안준

1. 2017년 평가 : ISIS의 패퇴와 걸프 왕정의 분열

미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시작된 미국의 대중동 정책 변화로 인해 2017년 초반부터 큰 틀에서 변화가 시작되면서 수니파 대표인 사우디 아라비아와 시아파 대표인 이란간 대리전이 시리아, 예멘, 레바논에서 보다 심화되었다. 2017년 중동 정세는 2월 미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남과 5월 트럼프 대통령과 사우디 살만 국왕과의 만남에서 큰 그림이 그려졌고, 이 만남을 통해 미국-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를 잇는 '3각 체제'가 형성되어 중동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이스라엘, 사우디 아라비아, 미국이 대이란 견제라는 공동 목표에 암묵적으로 합의함으로써 5월 사우디 아라비아의 카타르 단교, 예멘 내전 심화, 10월 미국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 불인정 조치, 11월 레바논 정국 불안 사태, 12월 미국의 예루살렘 수도 공식 인정 등 일련의 긴장국면이 지속되었다. 특히 최근 미국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은 아랍권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여 한치앞을 모르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자치구내 정착촌 건설 강행 등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의 불만을 지속 고조시켜 왔다. 또한, 사우디의 카타르 단교조치로 인해 걸프국가간 갈등이 심화되었고, 사우디 내부에서도 무함마드 왕세자의 피의 숙청으로 인해 정치적 분열이 가중되었다.

한편, 종전까지 중동문제의 최대 이슈였던 시리아·이라크 정세는 IS(이슬람 국가)가 사실상 소멸됨으로써 새로운 공백이 발생되었고, 이 공백으로 인해 강대국과 각 지역국간 동맹들간 정치적·분파적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켰다. 위기에 몰렸던 시리아 아사드 정부가 재부상하고 있는 국면과 이라크 정부의 쿠르드족에 대한 공격 사태로 인해 미국의 대중동 정책이 '실패'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이러한 혼란의 틈을 타 중동내에서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고 이란의 역내 패권도 점차 강화되었다.

결론적으로 2017년 중동 정세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불가능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대중동 정책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간 패권경쟁으로 비롯된 ‘갈등의 연속’으로 평가된다.

이라크·시리아 내전 : IS 패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란 상태

2014년초부터 이라크·시리아에서 상당한 영토를 점령하고 위세를 떨쳤던 IS(이슬람 국가)가 지난 7월 이라크 모술 패퇴에 이어 10월에는 시리아내 수도인 락카마저 탈환되면서 사실상 소멸되고 있으나, IS 패퇴로 인해 강대국과 각 지역 국가간 동맹들간 정치적·분파적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라크에서는 IS 패퇴이후 쿠르드족이 9월에 자치정부 독립투표를 실시하고(93% 찬성), 유전지대 키르쿠크를 포함한 ‘쿠르디스탄’ 출범을 선포하는 등 독립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집권당인 시아파 정당은 수니파 이슬람 세력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각 세력은 패권 경쟁중인 이란(시아파)과 사우디아라비아(수니파)의 지원을 받고 있는 등 국제전 양상도 띠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리아에서는 정부군과 반군, 러시아, 이란, 터키 대표들이 참여하는 평화 협상을 4차례나 가졌으나, 알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협상타결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는 반군의 주장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를 거듭하고 있으며, 그간 소강상태였던 반군과 정부군, 쿠르드 자치정부와 러시아, 터키, 미국간 이권다툼은 그대로 남아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는 전쟁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우디·카타르간 단교 : 걸프 왕정 국가간 분열 초래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 6월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카타르와 단교하였고, 이로 인해 UAE, 바레인 등 GCC 국가와 여타 아랍국 11개국이 단교에 동참한 가운데 걸프협력기구(GCC) 왕정국가간 분열이 지속되고 있다.

인접국들이 카타르 국경 폐쇄, 모든 교통편 운행 중단, 자국민 철수 등 조치를

실행하였으나, 카타르는 터키, 이란으로부터 주요 생필품을 공급받아 생활에 큰 지장이 없고 오히려 단교조치가 자국민의 단합을 공고히 하고 있어 단교사태가 장기화되었다.

단교 사태가 장기화되는 이면에는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가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이란에 가까운 카타르를 길들이기 차원에서 쉽게 보았다는데 있고, 이에 반감을 가진 카타르도 이번 기회에 오랫동안 숙원이었던 사우디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던 이유가 있다. 또한, 카타르로서는 사우디가 단교 해제에 전제 조건으로 ‘이란과의 절연’을 내세우고 있어 이란과 세계 최대규모의 가스전과 수송로를 공유하는 입장에서 이란을 적대화할 수 없는 경제적 상황이 있다.

사우디, UAE, 바레인, 이집트 등 주요 수니파 국가들에게는 카타르가 1995년 당시 왕세자였던 하마드 전국왕이 친사우디 보수적인 부왕을 제치고 무혈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이후 개방 및 온건주의 독자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눈엣가시’가 된 이유이기도 하다.



사우디-카타르 단교사태는 GCC 6개국간 분열상이 더욱 고조되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카타르에 주둔하고 있는 터키와 사우디아간의 미묘한 갈등문제도 있어 중동 전체의 정치지형에 영향을 주었다.

이란 핵합의 문제 : 미 트럼프의 파기 또는 재협상 의도 가시화

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전부터 이란 핵협상을 ‘최악의 협상’으로 비난한 이래 미 국무장관이 이란 핵합의를 실패라고 선언하고 미 재무부의 이란 혁명수비대에 대한 잇다른 제재 조치에 이어 급기야 10.13 미 행정부는 JCPOA(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불인증하고 파기여부를 미 의회에 넘겼다. 미 트럼프의 이란 핵합의를 파기하려는 의도와 로드맵은 분명해졌다.

그러나, JCPOA가 미국과 이란 양자간 합의가 아닌 P5+1(독일)이 이란과 맺은 협정이고, 미국도 이란 핵협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부 여론을 무시할수 없기 때문에 미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단기적으로 이란이 미국의 경제제재를 이유로 핵협상을 스스로 파기하도록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춘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란은 지난 5월 지난 오바마 정부와 핵협상을 타결한 장본인인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재선되었고 대선공약으로 대미 관계개선을 통한 조속한 경제제재 해제를 내세웠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 ‘어떠한 핵합의도 깨뜨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적인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중에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제재가 재개될 경우 로하니 대통령도 보수강경파로부터 압박을 받고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미 트럼프의 JCPOA 파기 의도에 대해 러시아 푸틴대통령은 11월 이란을 방문하여 일방적인 수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중국은 미국의 이란 핵합의 불인정에 대해 ‘북핵 해결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EU측도 ‘모든 당사국이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협상 파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다.

미국의 이란 핵합의 파기 노력은 이란이 경제제재 해제로 중동내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이스라엘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스라엘은 JCPOA에 대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될 확실한 길을 얻게 되었다’며 ‘역사적인 실수’라고 비난한바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 멀어져가는 ‘2국가 해법’

〈템플마운트 주변서 이·팔 충돌〉



출처 : 연합뉴스 2017년 7월 22일

2016년 12월 UN 안보리의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중단’ 결의에도 불구하고, 2017년 2월 이스라엘 의회가 ‘정착촌 합법화’를 통과시킨후 6월에는 요르단강 서안지역에 새로운 정착지역 건설에 착수한데 대해 팔레스타인이 강력 반발하는 등 이·팔 갈등은 지속 심화되고 있다. 급기야 7월에는 동예루살렘 ‘템플마운트’ 성지에서 벌어진 총기 테러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성지입구에 금속탐지기를 설치하자 팔레스타인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여 4명이 사망하고 400여 명이 부상하는 유혈 폭동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유혈사태 이후 곧바로 이스라엘이 금속탐지기를 철거하여 제 3차 인티파다(민중봉기)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팔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미 트럼프 대통령은 2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 ‘한국가 해법이든 두 국가 해법이든 수용할 수 있다’며 1993년 오슬로 협정이래 중동정책의 근간으로 유지되어왔던 ‘2국가 해법’을 철회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국제사회와 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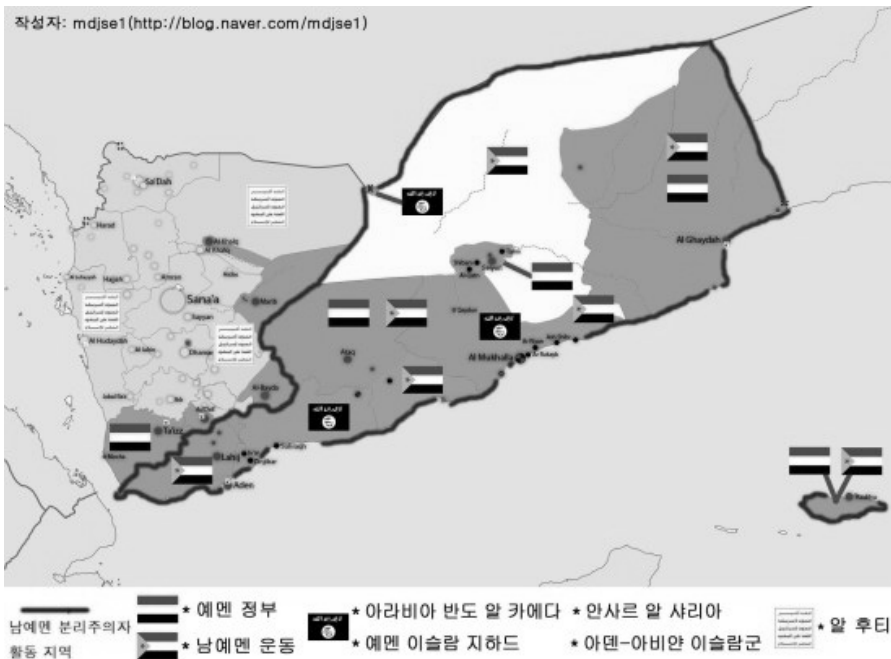
레스타인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더욱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하고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라고 지시(12.7)함에 따라, 아랍국가들은 물론 영국, 프랑스 등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러 일으킴과 동시에 이-팔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5월 팔레스타인 압바스 수반과도 만나 ‘이·팔의 화합을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라고 중재자의 모양새를 취하고, 또한 사위인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을 6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방문케하여 평화협상을 진전시킨바 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측은 미 트럼프 등장이후 친이스라엘 행보에 반발하는 상황으로서 강경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조합은 미국의 이스라엘에 편중하는 정책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이·팔 갈등 심화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예멘 내전 : 사우디·이란 대리전으로 출구없는 미로를 헤메이는 상황



2015년 3월 사우디 아라비아가 예멘 시아파 ‘후티’반군을 전격 공습하면서 시작된 예멘 내전은 2017년 사태 해결의 한발짝 진전도 없이 혼전을 거듭하면서 내전 발발이후 5만명 이상의 민간인 사상자를 냈고 전 국민의 70%이상인 2천만 명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前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對이란 전략의 일환으로 예멘 내전에 테러세력 소탕의 명분을 내세워 아랍연합군을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인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미국내 정당성 비판 여론으로 인해 전면적인 참전을 주저하고 있다. 아랍연합국의 공습에 대해 후티 반군은 러시아 및 이란의 지원으로 방공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아랍연합국의 전투기 및 드론을 격추시키고 있으며, 양진영은 한치도 양보치 않는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몇차례 열렸던 평화협상마저도 2017년에는 한차례 시도도 없었다.

이러한 와중에 예멘 남부 분리주의자들은 2017년 5월 과도정치위원회를 설립하고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내전의 혼란을 틈타 남서부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한 알카에다 세력과 IS의 잔당들은 미국과 UAE가 지원하는 예멘 부족군에 의해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하디 정부군과 후티 반군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최근 후티 반군은 2012년이래 동반자 관계였던 살레 前대통령이 사우디 주도 연합 동맹군과의 내전 중재역할을 독자적으로 자처하자 이를 강력 거부함과 동시에 살레 前대통령을 살해(12.4)하였으며, 이러한 후티 반군의 혼란을 틈타 정부군은 수도 사나 재탈환을 위한 공격을 재개하고 있어 내전상황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예멘 내전에는 아랍연합군, 예멘 정부군, 후티 반군, 알카에다 극단주의 세력과 남부 분리주의자, 각 지역별 부족세력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이들이 각각의 이권에 따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사우디 아라비아 : 새로운 실권자 등장으로 역내 패권경쟁 돌입

2015년 1월 살만 국왕이 왕위를 계승한 이래 실권을 잡았던 무함마드 왕자는 마침내 지난 6월 왕세자로 등극하였고, 11월에는 반부패 명분으로 왕자 11명 등 주요 보직자들은 숙청하면서 국방부, 국가방위군 내무부 등 모든 권력을 장악하

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왕세자는 대내적으로 석유의존 경제구조 개편, 565조원 규모의 사막 신도시 ‘네옴’ 건설 등 ‘비전 2030’ 계획을 추진중이고, 여성운전 허용 등 사우디 전통을 이끌어왔던 극단 이슬람주의인 ‘와하비즘’(극단 이슬람)에서 벗어나 온건 이슬람 국가로의 재건을 꿈꾸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예멘 내전 참전, 이란 및 카타르와의 단교, 레바논 헤즈볼라와 전쟁 돌입 등 중동내 시아파 맹주인 이란과의 패권 다툼을 주도하고 있다.

2017년 무함마드 왕세자가 이끌었던 3가지 실험(비전 2030, 사회·이념 개혁, 중동내 사우디 패권 강화)은 현재까지 숙청을 통한 권력 장악과 야심찬 경제계획 발표 등을 볼 때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되나, 중동내 이란과의 패권 경쟁에서는 다소 밀리고 있어 외치에서의 성공은 의문시된다.

2. 2018년 전망 : 혼란과 갈등이 확산될 것인가?

2018년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친이스라엘·사우디 및 반이란 노선을 기조로 하는 대중동 정책에는 큰 변함이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시리아, 이라크내 ‘포스트 IS’ 주도권 다툼, 이란 핵합의에 대한 재협상, 예멘과 레바논에서 사우디와 이란간 대리전 등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리아에서는 반군측의 ‘아사드’ 정권 퇴진 주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러시아 지원을 받는 정부군이 유리한 상황임에 따라 정부군과 반군간 극적인 평화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라크는 2018년 4월에 실시될 이라크 선거에서 시아파인 집권당과 수니파, 쿠르드계와의 정파간 연대를 통한 안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이란핵합의에 대한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란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예멘, 레바논내 분쟁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권을 장악한 사우디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지원을 받아 이란과 대리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무함마드 왕세자가 왕권을 계승하여 권력을 완전 장악한 후에는 외부적인 분쟁 참여를 완화하고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내치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도 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의 친 이스라엘 정책으로 인해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 대한 정착촌을 영구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이에 대해 팔레스타인의 반발이 심해져 제3차 인티파다(민중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미국의 예루살렘에 대한 수도 공식 인정으로 촉발된 팔레스타인의 반발은 심화될 것이나, 아랍국가들은 대이란 견제 등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중동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간 패권다툼이 더욱 가속화되는 가운데 예멘, 레바논 내전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분쟁 등으로 여전히 갈등의 교착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시리아, 이라크 전후복구, 유가상승에 힘입은 사우디 정부의 야심찬 건설 프로젝트, 카타르 월드컵 준비 등으로 중동의 경제호황이 도래할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 우리 기업이 최대한 중동 특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적극적인 대중동 협력이 기대된다.

이라크·시리아 상황 : 단기적으로 소강국면이 예상

전통적으로 시아파 및 수니파 아랍계와 쿠르드계가 3분할로 대립, 공존해 온 이라크에서 정치적 분열이 안정을 해칠 수도 있지만 종파 민족적 결속을 유도하는 새로운 정치적 어젠다를 만들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4월 예정된 이라크 의회 선거는 이라크 운명을 가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집권당인 시아파 ‘다와당’내 권력다툼중인 아바디 총리와 말리키 전 총리는 수니파와 쿠르드계를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겠지만 총선이전 계파간 이합집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의회 선거에서 어느당도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되지 않은 만큼 선거이후 정파간 분열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다수당인 시아파의 독주와 쿠르드계의 분리독립을 막아 안정을 이룰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파간 연대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쿠르드계 자치 독립문제는 마수드 바르자니 KRG 수반의 당내 입지가 확고하지 않고, 이란, 터키, 시리아 등 주변국들의 반대로 쉽지 않기 때문에 정식 독립 대신 이라크 중앙정부나 주변국들과의 협상을 통해 자치권과 경제권을 보장받는 방안이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시리아에서는 미국의 외교적·군사적 옵션이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가운데 발

을 빼고 있는 상황으로서 정부군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으며, 유엔 시리아 특사도 반군측에 현실을 받아 들이도록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반군측이 아사다 퇴진 카드를 내려 놓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으로서는 시리아내 남은 IS 잔당 소탕과 IS 점령되었던 지역내 폭탄, 지뢰, 부비트랩을 제거하고 기존 서비스 역량을 회복하는데 주력할 것이고 시리아 정파·종파간 정치적 분열에는 관여치 않는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간 6년여간 질질 끌어왔던 시리아 내전이 소강상태를 보일 것이고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간 개헌, 과도정부 구성, 선거, 대테러 대응 등 4가지 주요 어젠다에 대한 정치적 협상이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리아에서 패퇴한 IS는 시리아·이라크 국경지대에서 당분간 게릴라 방식으로 저항하겠지만, 점차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한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으로 대거 이동해 현지 극단주의 세력과 연합, 제 2의 IS를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위협 요소는 이미 전세계로 흩어진 외국인 테러전사(FTF)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산발성 테러를 지속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테러 발생지역이 유럽, 북아프리카, 아시아로 지속 확산될 우려가 크다

사우디·카타르 단교 : 장기화 예상속에 극적 타결 모색 전망

카타르가 식량 등 물류 공급에 차질, 여행 제한 등 다소 고통이 따르고 있으나 세계 3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이며 1인당 GDP가 12만불로 경제적으로 큰 충격은 없기 때문에 버틸만큼 버틴다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그러나, 쿠웨이트 등 아랍국가와 독일, 프랑스, 미국이 사우디-카타르간 중재에 나서고 있고, 카타르도 단교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식량가격 폭등, 해외 자본 이탈과 2022년 월드컵 준비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카타르가 만일 UAE 등 주변국에 가스공급을 중단할 경우 GCC국가들 상호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UAE, 바레인이 먼저 단교조치를 해제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해제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우디로서도 카타르를 고립하는 정책 이외에 카타르내 터키 및 미군의 존재로 인해 군사적 옵션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카타르에 대한 단교해제 조건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카타르의 정치적 입장이나 중동정세의 복잡성

을 감안한다면, 카타르가 이란과의 관계를 적정선에서 축소하거나 독자적 외교 노선을 조정하는 방향에서 봉합될 것으로 보이나, 카타르가 사우디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와 미국의 대이란 정책 등 외부변수에 의해 사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란 핵합의 : 재협상을 통한 새판짜기 국면으로 돌입

미 트럼프 대통령이 JCPOA에 즉각 탈퇴를 선언하지 않고 의회가 관여하는 불인증 옵션을 사용한 것은 정치적 꼼수로서 의회에 공을 넘기긴 했지만 미 의회내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도 이란 핵합의를 유지하려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란에 면제되었던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 등은 이번 불인증 선언 조치가 ‘나쁜 합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라고 하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고 북핵 해결에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하는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JCPOA에 참여한 영국, 프랑스, 독일도 이란이 핵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IAEA도 이란 핵합의 이후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이란 경제제재를 재개할 경우 이란이 핵합의를 파기하여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미국의 이란 핵합의에 대한 일방적 철회는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재협상’의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미 행정부가 이란이 테러단체를 지원할 경우 즉시 제재를 발동할수 있는 트리거 조항을 포함한 수정안에 대해 미 의회가 받아들일 것이고 미국은 P5+1 관련당사국에 JCPOA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할 경우 이란 로하니 대통령이 JCPOA 재협상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따라 이란 핵합의 재협상 문제는 2018년 중동정세를 판가름하는 큰 변수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 핵합의 재협상은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총리와 친 이스라엘적인 미 트럼프 대통령의 합작품으로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 지속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예멘 내전 : 터널끝이 보이지 않으나 후티 반군 약화 예상

미 트럼프 행정부는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원하고 알카에다와 IS를 소탕한다는 명분하에 예멘 내전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의 대이란 견제를 위한 지원 차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사실상 예멘 내전에 이란 배후설을 뒷받침할 증거도 별로 없기 때문에 미국이 전면 참여할 경우 분쟁이 통제 불가능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란으로서는 지역내 패권구축을 위해 시아파 후티 반군을 지원하지만 전면에 나서지 않고 러시아로 하여금 지원토록 하면서 예멘 내전을 보다 큰 국제전 양상으로 변모시키고자 할 것이다. 예멘 내전에 참여하는 아랍연합군 즉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간 이해관계도 달라 시너지 효과를 못내고 있으며, 사우디 재정지원으로 참여중인 수단 용병들의 정당성이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어 적극적인 공세가 이루어지는 것도 의문으로 보인다.

후티 반군은 정부군으로부터 호테이다 항구를 제외한 해안지역을 탈환당하면서 여러 전선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데, 호테이다 항구를 탈환당할 경우 산악지대에 고립되어 평화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최대한 버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후티 반군이 러시아에서 지원을 받은 미사일로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공격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랍연합군의 후티 반군 축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예멘 하디 대통령의 지도력 문제, 예멘 남부내 분리주의자의 독립운동, 남서부내 준동하는 알카에다 세력과 IS 잔당 들의 복잡다단한 정치적 구조가 얽혀있는 가운데 예멘내 안정과 평화가 오기에는 너무 길길이 먼 형국이다.

이·팔 문제 :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속에 갈등 심화

미국이 비록 이팔 분쟁에 대한 평화적 중재는 모양새만 갖추고 있지만 사위 쿠슈너 선임고문을 비롯, 중요 직책에 다수 유대인으로 포진된 미 트럼프 행정부의 인적구성으로 볼 때 2018년에는 보다 노골적으로 친 이스라엘 정책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2017년 12월 미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선언함에 따라 이·팔 갈등이 보다 심화되어 제 3차 인티파다(민중 봉기)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당분간 미국은 시리아 문제와 이란 핵합의 재협상 문제등 선결적으로 처리해야할 문제가 산적한 상황이고, 국제사회와 아랍국가들이 2국가 해법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음을 감안, 2국가 해법을 지지하면서 이·팔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도록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진정시키고자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불법점령지인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역에 대한 정착촌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고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 팔레스타인 주민의 거주지역을 계속 매입하는 등 정착촌을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며, 이에 대해 팔레스타인의 반발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언제든지 유혈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한편, 하마스와 통합정부 구성에 합의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투쟁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스라엘의 강경보수와 네타냐후 총리가 강경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 친이스라엘적인 미 트럼프 행정부와 화학적 결합이 노골화되어 ‘2국가 해법’을 중단할 경우, 아랍국들도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 중동 전체의 지형을 변화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우디 아라비아 : 왕세자의 꿈은 이루어질 것인가?

무함마드 왕세자가 ‘지난 30년간 일어난 일들이 사우디의 본 모습이 아니다’며 ‘이제 그것을 제거할 때’라고 언급했듯이 사우디 정부는 극단주의에서 온건 이슬람으로 점차 변모될 것으로 예상되나, 변화를 꺼리는 의식, 오랜 관습, 심한 규제환경, 성직자, 왕족 등 기득권 세력의 강한 반발로 인해 내부적 진통을 겪을 것이며 이에 따라 개혁의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에는 무함마드 왕세자에 대한 정권도전 세력에 대한 숙청 작업이 완료되고, 현 살만 국왕이 건강 상황으로 인해 왕권을 물려줄 가능성이 높아 정권이양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왕권 공고화 이후에는 예멘 반군의 미사일 공격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국제적으로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대이란 2개의 전선(예멘, 레바논)에서 패권다툼을 다소 완화하면서 중동지역내 새로운 세력 균형을 이루고자 할 것이다. 우리는 사우디 내부의 정세 동향을 예의 주의하면서, ‘네옴’ 신도시 이외에도 전 영역에서 벌어지는 사우디의 개혁 개방 사업(비전 2030)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우디와의 협력을 모색해야 된다.

우리의 외교공간 확장으로서 아세안과 新남방정책

송은희

1. 2017년도 평가 : 인도·태평양의 등장과 부상하는 아세안

2017년 ARF(ASEAN regional forum)와 ASEAN(아세안) 정상회의

2017년 ASEAN(아세안)은 문재인 정부의 新남방정책 구상으로 인해 지정학·지정학적인 새로운 전략공간으로 부상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문을 계기로 新남방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아세안과 한국의 관계를 주변 4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신남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비전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의 양축으로서, 유라시아의 신북방정책과 함께 인도와 서남아시아·동남아 등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과 아세안 공히 ‘사람을 중시하는’ 공통의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함께 잘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아세안은 1967년 결성된 이래 2017년 창설 50주년을 맞이하여, 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많은 경험을 통하여 아세안의 정체성을 유지·발전해 오고 있는데, ARF(ASEAN regional forum)를 통해 안보이슈에 관한 관심과 논의도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17년 ARF 회의 직전인 7월 북한이 두 차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북한문제가 남중국해 및 여타 다른 지역 안보이슈 보다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결국 북한의 ICBM 발사와 그로 인한 긴장조성은 ARF에도 영향을 미쳤는 바, 2017년 ARF 의장국인 필리핀은 ARF 외교장관회의의 결과물인 의장성명 발표에서, “또한 (각국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즉

각적이고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면서 “몇몇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평화적으로 달성한다는 데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자제력을 발휘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에 도움이 되는 여건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장성명에서 나타나듯 북한문제에 관한 합의 도출 내지 공동 행동은 쉽지 않은데, ARF 특성상 안보 문제를 논의할 수는 있어도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¹⁾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현황〉



출처 : 아세안문화원

2016년과 달리 2017년 ARF 회의에서는 북한문제 부각으로 인해 남중국해 문제는 수면 아래로 잠복한 측면이 있었는데, 사실상 아세안은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중국 간 전략적 경쟁을 피하면서 지역안보 환경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중심 역할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전략 환경의 변화 때문에 안보전문가들은 남중국해 분쟁이 지역 갈등의 관리 역할에 심각한 도전으로 부상하였고 따라서

1) 이재현, “2017년 아세안안보포럼(ARF) 결산 : 한미중의 성적표”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17-24.

동남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 경제발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²⁾

2017년 11월 13~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 정상회의를 필두로 제20차 아세안+3(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의와 제12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개최하였다. 11월 13일 제31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동남아 10개국 정상들은 의장국 필리핀이 제시한 아세안 발전의 6대 우선 주제인 인간중심, 역내 평화와 안정, 해양안보 및 협력, 포용적 혁신성장, 아세안 탄력성, 지역협력 모델로서 아세안 등에 주목하였다. 11월 1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이 추가된 18개국 정상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정상들은 북핵 및 북한문제, 남중국해 문제,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반세계화 및 보호무역주의 추세, 미얀마 라카인 사태³⁾ 등 지역과 국제정세, EAS의 미래 협력방향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또한 아세안+3 정상들은 지난 20여년간 금융, 식량안보 등 다양한 분야로의 협력 확대를 평가하고, 최근 보호주의와 반세계화 추세 확산 가운데 자유무역과 지역통합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아세안+3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중·일은 빠른 시일 내 그동안 중단됐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재개에 공감했는데, 현재 3국 협력 의장국인 일본은 물론 한국과 중국 정상들도 3국 정상회의 개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2018년 초 일본에서 정상회의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 Amitav Acharya, "ASEAN 2030 : Challenges of Building a Mature Political and Security Community," *ADB Working Paper Series #44* October, Tokyo :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2013, p.7.

3)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얀마 라카인 지역의 로힝자 소수민족 문제가 주요 사안으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더불어 아세안의 내부적 균열을 가속화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배궁찬, "2017년 ASEAN 관련 정상회의 결과분석 : ASEAN+3, 한-ASEAN, EAS를 중심으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48.

〈2017년 필리핀 마닐라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



출처 : 연합뉴스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청사진

금번 아세안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는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정부가 지속적인 對아세안 중시 입장과 정책기조를 천명,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라는 청사진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 잘사는(Prosperity) 사람 중심의(People) 평화(Peace)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한국과 아세안이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외교를 전개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아세안이 추구하는 역내 연계성을 높이는 4대 중점 협력분야로 첫째, 한국의 고속철도 건설과 운영 경험의 적극적 공유, 둘째, 발전소 건설과 신재생에너지 미래산업 협력, 셋째, 한국의 효율적 수자원 관리와 사업 노하우 지원, 넷째, 한국의 성공적인 스마트 정보통신 경험 공유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하는 사람 중심의 새로운 한·아세안 관계의 협력구도는 기존의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분야의 협력보다는 양측 간 정서적 유대의 심화를 위한 민간 차원의 사회문화 협력에 관심이 높다. 한편, 문 대통령이 아세안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아세안은 중국에 이은 우리의 제2위의 교역 상대국이자,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

세안은 인구 6억 4,000만 명에 평균 연령 29세의 젊은 노동력과 자원이 풍부하며, GDP 2조 600억 달러, 평균 성장률 5%로 엄청난 경제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무역, 에너지, 건설, 정보통신,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부분이 많아 우리의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남아 순방기간에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교통과 보건, 산업분야에서 정부간 협력을 위한 협약 3건과 전략발전·물관리·공공주택·교통·역량강화 분야에서 기업간 양해각서 11건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드라이브는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외연 확장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2017년 접어들어 북한의 핵도발이 지속되고, 중국과의 사드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일본과의 역사문제 갈등 등으로 한반도 상황이 복잡해지자 한반도 주변 4대국에 대한 의존도는 분산시키고 상대적으로 아세안과의 유대관계는 절실해진 것이다. 이 점에서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평화공동체는 한반도 주변 4대국과 함께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요한 축으로 발전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아세안과 국방·안보·방위산업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 핵·미사일도발,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사이버 위협 등에도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Indo-Pacific)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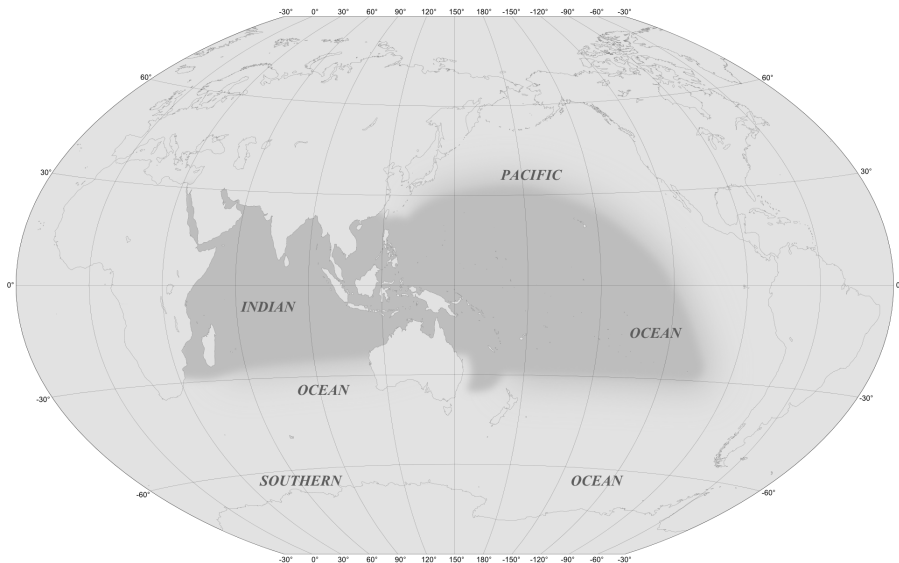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즈음해 미국이 이 지역을 아태(Asia-Pacific)지역이라 부르는 대신 ‘인도·태평양(Indo-Pacific)’이라 재명명하였는데,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이라는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정책이 표면화됨으로써 인도·태평양 개념과 전략은 역내외적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였다. 사실상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을 앞둔 2주전인 10월 18일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미국 싱크탱크인 CSIS에서 아시아전략에 관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트럼프 정권이 아시

4) ‘인도·태평양’을 태평양으로부터 인도에 이르는 지역을 하나로 묶는 개념으로 칭하여 지정학 및 지전략적 의미를 갖게 된 계기는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이 2010년 하와이에서 한 연설이다(Hillary Clinton’s Speech on America’s Engagement in the Asia-Pacific at Honolulu, Hawaii on 28 October 2010).

아에서 중국의 양향력 증대에 대항하기 위한 중요한 파트너로 인도와의 관계가 ‘극적으로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은 중국과의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추구하고 있지만, 규칙에 근거한 질서에 중국이 도전하고 있는 것이나, 중국이 주변국의 주권을 위협하고, 미국과 그 동맹국에 불이익을 주는 사태에 대해 미국이 뒷걸음질 칠 생각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인도·태평양 구상은 同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법의 지배(rule of law), 상호 호혜성(reciprocity), 공정무역(fair trade) 등의 원칙을 보호, 견지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금번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중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은 국장급 외교 실무자들 간의 4개국 협의체 결성을 위한 비공개 회동을 가졌는데, 이로써 인도·태평양 4개국 협의체(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가 태동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4개국 공히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양 등에서 전략적 확장을 도모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전략적으로 견제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4개국 협의체는 안보적 성격을 띄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인도·태평양의 지리적 범위〉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Indo-Pacific#/media/File:Indo-Pacific_biogeographic_region_map-en.png

2. 2018년 전망 : 새로운 외교적 기회를 맞이하는 아세안

인도·태평양(Indo-Pacific) 전략과 일대일로(一帶一路)

2018년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역 질서에서 가장 관심을 끄게 될 것은 미국의 포괄적인 아시아 전략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아시아전략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하여 미국·일본·인도·호주가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구상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중국 제19차 당대회(2017.10.18~24)에서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의 반 세계화·비규범적 행보와는 달리 기존 질서의 유지·기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내심 중국은 아시아 신안보관과 일대일로를 통한 신질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구상은 해양과 육상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국, 아세안 그리고 인도 사이의 다자적인 해군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에서 중국의 지정학적 입장을 발전시키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⁵⁾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2월 1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발표) 발표한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을 총 23번 언급했는데,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2015년 NSS와 비교하면 거의 2배 많은 수준이다. 또한 중국을 ‘전략적 경쟁국’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향배를 가늠하게 된다. 그리고 일본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끝나고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지역을 이미 언급했고 이 구상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국가들을 환영한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미국이 일본의 지역구상을 지원한다는 인상은 지우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점에서 보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액면 그 이상의 전략적 의도가 내포된 측면이 있다. 즉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은 단순히 이 지역의 안정을 기반으로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 이상의 또 다른 안보적 함의가 있는 것이다.⁶⁾

5) Jeremy Page, “China Sees Itself as Center of New Asian Order,” *Wall Street Journal*, November 9, 2014.

첫째,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아시아(중점적으로는 동북아)·태평양에서 인도와 동남아시아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오바마 정부가 유럽에서 아·태 지역으로 미국의 전략적 초점을 전환시켰듯이 트럼프는 미국의 전략적 초점을 또 다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은 미국의 전략이 기존의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양으로까지 확장되는 단순한 ‘공간 확장’이 아니라 인도와 동남아시아로의 ‘전략적 초점’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할 것이다.

둘째, 미국은 이 구상을 통해 미국·중국·인도의 전략적 삼각관계를 구축하여 수동적으로 중국의 강대국화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양을 중심으로 전개될 삼각관계에서 능동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지속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영향권을 형성해 나가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즉 2000년대 들어 중국의 인도를 포위하는 인도양 중심의 ‘진주 목걸이 전략(strings of pearls strategy)’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이 충돌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공간’이 창출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중국의 서진, 일대일로〉



출처 : <http://carltonmansfield.com/strategy-of-one-belt-one-road-in-china/>

- 6) 이수형,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과 우리의 전략적 방책”,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핑 17-23, 2017.11.15.

새로운 외교공간 확장으로서 신남방정책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선언은 우리의 對아세안 전략의 외연적 확장을 의미하면서 남방에서 주목할 국가로 인도가 부각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중심’의 신남방정책을 제시하고, 아세안을 4대국 지위로 끌어올리겠다고 천명했는데,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이 중요함은 부인할 수 없지만 최근 아세안이라는 공간을 점점으로 형성되는 지전략적 변동과 관련하여 이러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아세안 지역이 이제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중국의 일대일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곳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고려할 사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확장성을 갖게 될 것이란 점인데, 이는 2017년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중 일단 표출된 적이 있다. 즉,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국장급 외교실무자 간의 4개국협의체(QUAD)이다. 이 협의체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으로 출범시킬 것이지만, 향후 4개국을 중심으로 對中 견제에 동참 가능한 역내 중·소국가들을 최대한 끌어들이 참여국 또는 협력국의 확대를 도모해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따라서 2018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이를 상쇄하려는 중국의 공세적 대응은 동아시아의 다수 중소국가들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어려운 선택을 강요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⁷⁾

결국 우리로서도 어느 한편에 일방적으로 편승하기보다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헤징전략(hedging strategy)을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대다수 동아시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헤징전략을 그대로 채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과는 달리 분단국가이자 북한의 핵위협, 그리고 미국과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헤징전략을 구사하는데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위상에 부합하는 안보전략을 채택한다면 이러한 정책적 딜레마를 극복하거나 어느 정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제한적 헤징전략(limited hedging strategy)을 채택하여 이를 최적화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균형외교가 아니라 우리도 제한적이지만 현재 대다수의 동아시아

7) 배궁찬, 앞의 책.

국가들이 구사하고 있는 해징전략을 채택하여 우리의 사활적 안보이익의 목록을 작성하고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적화된 제한적 해징전략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사이버·테러

2017년은 비전통 안보, 사이버와 테러 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한해

2017년은 사이버, 테러 등 비전통 안보 즉 신안보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부각된 한 해였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적 위협 요인으로 대두되었고, ISIS 테러, 무슬림의 무슬림에 대한 테러, 그리고 북한의 김정남 테러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경악한 비전통 안보(사이버와 테러) 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사이버 부문에서는 국내외적으로 금전탈취 목적의 랜섬웨어(ransomware) 공격 확산 및 이로 인한 피해 속출, 사이버 공간을 통한 대선 개입 파문 확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외화벌이 수단이 차단된 북한이 외화조달형 사이버 공격을 국제적으로 감행, 사드 배치 불만 중국 해커들의 한국기업 대상 보복성 사이버 공격 감행 등으로 인해 사이버 해킹이 개인이나 기업을 넘어 국가적 문제로 확산되었다. 특히 지난 5월에 워너크라이(WannaCry), 6월에 닷페트야(NotPetya), 9월에 올크라이(AllCry)에 이어 10월에는 배드레빗(Bad Rabbit)이라 명명된 악성 코드 신종 랜섬웨어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퍼지면서 유무형의 피해가 속출해 사이버 해킹에 대한 공포가 개인과 기업, 국가 기관을 가리지 않고 가중되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프랑스 대선에서 마크롱 후보 이메일 대량 유출·폭로 및 러시아 개입 의혹 부각, 러시아 정부의 미국 민주당 서버 해킹 및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법무부 특검수사 5월 착수, 우리나라 2012년 대선에 정부기관 사이버 댓글 개입에 대한 검찰 재조사 진행 및 북한의 5월 대선 여론 조작 공작 등 국내외적으로 사이버 선거 개입이 이슈화되었다. 또한 경제제재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해킹을 자행하

면서, 영국 정부는 금전탈취 목적의 위너크라이 공격 배후로 북한을 10월 27일 지목했고 뉴욕타임즈는 사이버 해킹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연간 10억 달러에 이른다고 10월 15일 보도한 바 있다.

테러 부문에서는 ISIS(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가 미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에게 모술 및 라카 등을 탈환당하면서 그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문제는 ISIS 세력이 크게 와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SIS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테러가 올해에만도 터키·영국·러시아·스웨덴·프랑스·이란·스페인·미국·이집트 등 세계 도처에서 발생해 기승을 부리면서 테러 위협과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더 커졌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 2월 13일에는 북한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화학무기 VX를 사용해 김정남을 공개적으로 독살하면서 국제 테러리즘 국가로서의 북한의 테러 역량과 의지를 백주대낮에 전 세계적으로 깊게 각인시켰으나 이로 인해 북한은 9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재 지정되는 수모를 11월 20일 감수해야 했다.

2018년도 평창 올림픽 등은 몰락한 ISIS와 북한의 좋은 먹잇감인바 온라인·오프라인을 연계한 사이버·테러 대책을 수립

2018년에는 언제 세계적으로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 확산 일로의 사이버 공격, 그리고 ISIS와 추종세력들이 감행할 테러 공격 등으로 인해 글로벌 차원에서 혼란과 공포가 2017년 보다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 부문에서는 2017년 보다 지능화되고 업그레이드된 악성 소프트웨어인 신종·변종 랜섬웨어를 이용한 비트코인 등 돈벌이 목적의 사이버 공격이 세계적으로 더욱 피해를 확산시킬 전망이다. 특히 무모한 핵·경제 병진노선 추진으로 인해 대외 자금줄이 차단되고 경제난에 봉착한 김정은 으로서는 핵·경제 병진노선의 해법을 사이버공간에서 모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외화난에 허덕이는 북한은 2017년 보다 더욱 다양한 사이버 해킹조직과 더 많은 전문가들을 동원해 최근 가격 폭등으로 거래규모가 급상승하고 있는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금전 탈취형 사이버 사기 활동을 더욱 폭넓게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2월 평창 동계올림픽과 6월 13일 지방선거, 11월 OECD 세계

포럼 등 국가 주요 행사 성공을 방해하기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연계 도발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된다.

테러 부문에서는 이슬람 테러리즘 문제가 해결의 방향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오히려 더 복잡하고 새로운 형태의 극단주의 테러가 2018년도 내내 격화·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ISIS는 2017년까지 지난 3년 동안 중동지역에서 자본주의를 증오하는 서구 젊은이들을 집중적으로 모집·훈련시켜 이들을 이용해 정규 전 방식의 테러를 자행해 왔었다. 그러나 ISIS의 이념에 동조하던 다수의 외국인 전사들이 중동을 떠나 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아시아 등 본국으로 귀향하면서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이 세계 전역으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정교한 무기보다 차량 등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테러 수법을 이용해 일반 시민들의 생활을 마비시키는 생활밀착형 자생 테러가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잠재적 자생 테러리스트들이 SNS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테러를 모의하고 오프라인에서 테러를 감행할 것으로 보여 각국 정부의 테러 사전 예방 활동은 더욱 어려워지고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로 무장한 ISIS의 존재는 2017년 보다 더 위협적이고 일반인들의 테러 공포와 피해는 더욱 장기화 될 전망이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하고 미국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토록 한 12월 6일 발언과 지시로 인해 ISIS나 그 추종자들에게 의한 미국 등 서방세계에 대한 테러가 2018년에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세력 기반을 상실한 ISIS가 새로운 활동무대로 빈곤·부패·통치체제 취약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나 상대적으로 정부의 통제가 취약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선택할 전망이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가 ISIS의 새로운 근거지로 부상할 것이다.

전 인류가 참가하는 올림픽은 ISIS에게 자신들의 존재나 정치적 목적을 국제적으로 이슈화하기 좋은 테러 공격의 기회이자 대상이다. 따라서 올림픽 기간중 수많은 사람이 쉽게 모이는 경기장은 물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외로운 늑대 유형의 동시다발적 무차별 테러 공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제적 테러위협 인물에 대한 정보 공유, 국제 공조, 출입국 관리 강화 등 실효성있는 대 테러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테러가 온라인을 통해 모의되고 오프라인에서 감행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이버와 테러를 연계한 융합적 테러 대응책이 효율적인 바, 성공

적인 평창 올림픽 개최를 위해 오프라인 테러 공격뿐만 아니라 대회조직위원회 홈페이지·네트워크·컴퓨터·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온라인 사이버 공격에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끝으로 북한이 대북제재에 대한 불만을 국제사회에 표출하기 위해 평창 올림픽, 지방선거, OECD 세계포럼 등 국가 주요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은 바, 정부는 주요 행사 기간 중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역·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 전력 등 주요 국가 기반시설, 나아가 주한 외국인 및 미군시설에 대한 북한발 테러 공격이나 사이버 공격 혹은 양자를 연계한 신종 도발에 총력 대비해야 한다. 또한 대형 건물, 스타디움, 대형 쇼핑몰 등에 대한 테러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피훈련 반복 시행 등 테러공격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대비가 필요하다.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하金正은의 생존 전략 : 사이버공간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의 해법 추구

윤봉한

1. 2017년 평가 :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 영역으로 확대

사이버공간은金正은 정권의 존속기반이자 외화 조달 창구

2017년은 북한 김정은이 1차례의 핵실험과 15차례나 되는 빈번한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2차례에 걸쳐 UN안보리의 포괄적 제재 결의를 촉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망나니’로 낙인찍힌 한해이다. 특히 2017년 9월 3일 제6차 북핵 실험으로 본토까지 공격 위협을 받게 된 미국 정부는 북한 정권의 “완전한 절멸(total annihilation)”을 위한 군사적 옵션까지 거론하며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높이고 있고, 중국의 시진핑 정권도 “국제사회의 보편적 반대”를 거론하며 ‘견결한 반대’와 강렬한 질책을 표시하고 있다.

2017년 9월 12일 채택된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제2375호)는 원유공급 30% 중단을 비롯하여 북한 정권의 생명선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로 북한 정권은 장기적으로 생명의 기로에 설 수도 있을 것이다. 대남 정치·경제·군사 등 제 영역에서 불균형을 극복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정권의 안정과 유지를 보장받으려 했던 핵개발의 꿈이 오히려 정권 존망까지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김정은이 핵·미사일 실험으로 파탄이 된 경제상황을 극복하면서 주민들 속에 팽배해 지는 불만을 무마하고 권력의 생존을 연장하기 위한 새로운 출구전략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바닥난 國庫를 채우고 주민들의 기근을 해소할 수 있는 대외 창구를 모두 봉쇄당한 김정은으로서는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상당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이버공

간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에서 비롯되는 어려운 자금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 활동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자금 편취 사건의 배후로 북한 해커그룹이 지목되면서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원유공급 축소와 주력 수출품인 석유·석유 가공품에 대한 수출 금지 등 제재 강화로 새로운 외화자금 조달 창구를 찾아야 하는 김정은에게 사이버공간은 그 해결의 출구로서 활용될 개연성이 아주 크다.

북한, 사이버 위협,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의 위협 요인으로 전환

핵·미사일 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사이버공격 대상과 범위가 국제적인 규모로 변화하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 2014년 미국 소니 엔터테인먼트社 해킹으로 미국의 분노를 샀던 북한은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자금 해킹, 최근 랜섬웨어 공격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돈을 훔쳐가는 것을 비롯하여, 2017년 5월에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의 배후로 확인되었다.

2017년 5월 국내에서 랜섬웨어 ‘워너크라이’에 의한 신종 금품절취 사건이 발생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내 주요 파일을 암호화시켜 더 이상 쓸 수 없게 한 후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공격기법이다. 국내에서는 웹 호스팅 업체 ‘인터넷나야나’가 운영하는 호스팅 서버 153대가 일제히 감염되면서 해당 서버에 입주한 5,496개 홈페이지가 작동을 멈추는 피해를 입었다. 결국 ‘인터넷나야나’는 “해커와 협상해서는 안 된다”는 불문율을 깨고 13억 원이라는 거금을 지불함으로써, 해커와의 단일 협상으로 최대 규모의 몸값을 지불하였다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겼다.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는 국내 뿐 아니라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어 피해를 입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 150개국 30만대 가량의 컴퓨터가 워너크라이에 감염되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독일은 철도시스템이 감염되었고, 러시아는 정부기관인 내무부 컴퓨터까지 감염되는 등 공공기관과 민간 부분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일본 역시 일부 지역의 상하수도국, 오사가 시청, 이와테현(岩手縣) 현청 등의 컴퓨터 2000대 이상이 감염되었다. 영국도 올랜

드와 스코틀랜드의 국민보건서비스(NHS) 산하 병원 40여 곳이 피해를 입었다. 중국은 공항, 출입국관리국을 비롯한 각급 공공기관은 물론 학교 공용컴퓨터, ATM기 등이 감염되고 국영 석유회사 주유소 2만개가 사이버 침해를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북한은 2016 하반기 이후부터 금융기관, 특히 최근 부상하고 있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itcoin) 거래소를 끈질기게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비트코인·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를 절취하더라도 블록체인 암호기법이 적용되어 범인 추적이 불가능하고 손쉽게 거래의 외화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사이버공간 범행으로 북한을 유인하고 있다. 국내 보안기업 파이어아이(FireEye)는 2016년 3월 UN의 대북제재 결의안(제2270호) 이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북한의 해킹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즈음 국내 ‘야피존’이 비트코인 3,800개(약 55억원 상당)를 도난당하고, 6월에는 ‘빗섬’에서 3만 명 이상의 비트코인 고객 정보가 유출되었으며, 9월에는 ‘코인이즈’에 보관되어 있던 21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절취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7년에도 8월에 ‘코빗’ 직원을 위장한 가짜 메일 유포, 9월에 경찰총국 산하 121국 소속 해커의 거래소 공격, 그리고 7, 8월에 가상화폐 거래소 임직원 25명에게 금감원·국세청·공정위를 사칭한 악성 메일 발송 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겨냥한 공격시도가 지속적으로 탐지되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지하철과 편의점 등에 설치된 금융자동화 기기(ATM) 63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신용카드 정보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대만·중국·태국 등 해외 지역에서 도용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올해 3월에는 금융보안원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금융기관, 국방, 기업 등을 노린 8건의 해킹 사건을 분석한 후 이를 북한을 배후에 둔 라자리스 해킹그룹이 자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바 있다.¹⁾²⁾

1) 금융보안원, “2017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보고서”, 2017.3. pp.6-7.

2) 글로벌 보안업계에서 기술력과 조직력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대표적인 해킹 그룹, 라자리스(Lazarus) 그룹은 2009년 7.7 DDoS 공격, 2011년 3.4 DDoS 공격, 2013년 3.20 사이버테러(Operation DARKSEOUL) 등 우리나라에 대한 다수의 사이버공격을 자행했고, 2014년 11월에는 미국 소니픽처스사를 공격(Operation Blockbuster), 2017년 5월에는 랜섬웨어 워너크라이(WannaCry) 공격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의 검찰 및 경찰 그리고 美 FBI, 영국 정보기관 등은 라자리스그룹이 북한 정부가 운영하는 국제 사이버 해킹조직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 ‘사이버 은행강도’ 혐의로 국제 금융결제망(SWIFT)에서 퇴출

북한은 2017년 3월 국제금융결제망(SWIFT) 시스템에서 불법자금을 유출하여 횡령한 혐의로 퇴출을 당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2016년 2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으로부터 35건에 미화 9억 5,000만 달러 인출요청을 받고 자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내용을 발견해, 이미 필리핀 은행으로 송출한 8,100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의 송출을 중단하였다. 뉴욕 연준은행이 필리핀에 이어 또 다른 자금 수신처인 스리랑카 은행으로 이체를 진행하던 중 자금 수령기관의 철자가 ‘Foundation’이 아닌 ‘Fandation’으로 잘못 기재된 사실을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리핀 은행으로 송금된 자금은 이미 세탁과정을 거쳐 출금되고 말았다. 자금 경로를 추적한 결과 미국 정부는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핵과 미사일 개발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금융결제망의 보안상 허점을 이용하여 사이버공간에서 자금을 절취했던 것이다. 이에 미 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 위원장 맷 새먼 의원 주도로 2016년 9월 28일 국제금융망(SWIFT)에서 북한 조선중앙은행과 핵개발에 연루된 북한 금융기관들을 퇴출시키는 법안이 발의하였으며, 이로 인해 2017년 3월에는 북한 모든 은행들이 국제금융망(SWIFT)에서 일제히 퇴출됐다.³⁾

북한이 국제 제재로 외화벌이가 막히면서 폴란드·멕시코·베트남 등 세계 31개국 100여개 은행에 사이버공격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제 금융망에서 자금을 절취하고 세계 각지의 은행을 공격한 것으로 확인된 사이버 해킹집단은 북한 정부가 운영하는 라자러스 그룹이고 100여개 은행 공격에 쓰인 악성코드는 2014년 11월 북한이 미국 소니픽쳐스사 공격 때 사용한 것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었다.⁴⁾

사드 배치를 둘러싼 북·중의 사이버공격으로 국내외 긴장 격화

2017년 3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성주 배치 사실이 보도되자 북한은 우리민족끼리·조선중앙통신 등 주요 인터넷 선전매체를 총동원하여

3) Tom Bergin, “SWIFT messaging system cuts off remaining North Korean banks”, reuters, <https://www.reuters.com/article/>(검색일 : 2017.3.17)

4) 김인순, “3.20 악몽 재현? 금융사 표적 북 사이버공격”, 『전자신문』 2017.3.08

“남조선 각계 인민들이 하나같이 ‘사드배치에 결사항전’의 자세로 저항하고 있다”는 등 날조된 여론으로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나섰다. 이러한 북한의 사이버 공간 선전·선동은 우리 사회 일부 세력들의 물리적인 ‘사드배치 반대 투쟁’과 결부되어 정상적인 정부 정책 집행에 장애물로 작용하였고, 국민 여론을 양분시키는데 일조를 하였다.

국내 사드(THAAD) 배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던 중국과의 마찰도 실물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에서도 피해갈 수 없었다. 우리 정부의 갖은 설득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관영언론과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사드 배치에 강한 반대 입장을 지속하면서 외교적 갈등을 초래했다. 2017년 3월 15일 중국정부가 한국 단체 관광상품 판매 금지를 내리는 등 반한정책의 여파는 사이버공간으로 그대로 확산되어 양국간 정치·경제적 갈등을 지속적으로 부추기는 효과로 나타났다.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판다정보국, 홍콩연맹, 중국 독수리연합과 같은 중국의 해킹 단체들이 사드 배치에 반발하며 우리 정부와 대중 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DDoS 공격으로 이들 기업들의 업무 마비사태를 야기하였다. 이들은 DDoS공격으로 대표적 대중투자기업인 롯데그룹의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시켰고, 서버 취약점을 이용해 국내 기관 홈페이지 화면을 변조하는 디페이스 공격을 해오는 등 사이버 공간에서 극도의 반한감정을 드러냈다. 또한, 이들 중국 해커조직들은 각종 소프트웨어, 워드프로세스 취약점 등을 이용한 공격기법을 공유하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공격도구를 보급하여 일반인의 공격가담을 유인해 공격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더해, 중국 해커집단들은 사드관련 이슈와 전혀 상관없는 민간 웹사이트까지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무모함을 보였다. 비록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국가간 외교 갈등으로 유발된 해커비스트들의 활동이 민간 부문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례를 우리나라에 남겼다.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 확대로 국내·외 안보위협 가중

2017년 1월 국방부에서 발간한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사이버전 전력은 전문 해커요원과 지원인력을 모두 합쳐 6,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3년 3,000여 명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4년간 북한의 사이버전 전력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이버보안의 딜레마(The Cybersecurity Dilemma)’ 저자인 벤 뷰캐넌은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이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목된 2009년 이후 일취월장 했다고 주장한다.⁵⁾ 2013년 김정은이 국방위원회(현 국무위원회) 정찰총국 산하 기술정찰국인 110연구소를 찾아가 “우리의 뛰어난 정보 전사들이 있는 한 그 어떤 제재에도 끄떡없다”고 연동하였다는 사실에서 그가 자체 사이버전 역량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짐작이 가능하다. 특히 북한이 80년대 후반부터 해킹을 전문으로 하는 소위 전문화된 ‘정보전사’를 국가차원에서 집중 양성,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자동화기술대학(현 김일대학, 대호명 ‘미림대학’) 2기 출신인 북한이 탈주민 장세울은 북한의 사이버전 공격역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림대학은 전국 각지 군사전문대(인민군 간부양성 기관)와 각 도·군 영재학교에서 선발된 최우수 학생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거쳐 최종 100명을 선발한다. 지휘자동화조, 프로그램조, 계산기조, 기술정찰조, 전자전조로 나누어 교육을 하고 졸업 후에는 121국(정찰총국산하 사이버전 지도국)으로 배치되거나 중국 등지로 유학을 나간다. 북한이 80년대부터 국가적으로 투자를 했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공격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북한은 방어적인 측면에서도 사이버 공격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윈도우 운영체제에 미국이 악성 바이러스를 심어둘 것을 염려하여 ‘붉은 별’이라는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잘 훈련된 방어 활동 정보전사의 전문적인 능력과 함께 대외로 개방된 북한의 총 인터넷 회선 수가 약 1,000여개에 불과하다는 점도 북한의 사이버공간 대외 방어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 중 한 요소가 되고 있다.

5) “무시 못 할 수준으로 성장한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 NewsPeppermint, 2017.10.19.

북한, 국방망 해킹으로 우리 고급 군사기밀 대량 절취

2017년 5월 발표된 국방망 해킹사건(2016년 9월 발생) 조사결과 우리의 최고급 군사기밀이 대량으로 북한에 유출되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국내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 주었고, 미국 등 우방들이 우리의 사이버안보 실태를 우려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국방부의 핵심 정보망인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 등이 북한인으로 추정되는 해커의 공격을 받았고 김정은 참수(斬首) 작전이 포함된 ‘작계 5015’를 비롯하여 북한의 대남 침투·국지도발 대응 계획인 ‘작전계획 3100’, 북한내 급변 사태 발생 또는 대남 도발시 우리 특수전사령부가 수행할 ‘비상계획(Contingency Plan)’과 같은 최고급 군사기밀 문서를 탈취당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김정은 참수작전과 관련해서는 북한 지도부 이동 상황 식별·보고와 은신처 봉쇄, 공중 강습, 북한 지도부 확보·제거·복귀 등 4단계 계획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김정은이 유사시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우리의 참수작전 계획을 손바닥에 두고 이를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조사결과 국방부는 해커가 시스템을 장악한지 한 달여 만에 해킹된 사실을 알아차렸으며, 이미 총 235GB(기가바이트)의 군 기밀자료를 절취했다.⁶⁾ 국방부에 따르면 확인된 2급 기밀 226건, 3급 기밀 42건과 대외비 27건 등 295건의 유출 자료는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182GB 분량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유출됐는지 파악조차 못했다. 이 사건으로 군 당국은 대북 군사작전 계획의 일부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국방 내부망을 인터넷 망과 분리 운영하더라도 외부 해커의 침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줌으로써 ‘망 분리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이라는 국내 보안업계의 관행적 신뢰를 뒤흔고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탄핵·대선 등 국내 정치행사에 내부분열 노린 북한의 사이버 흑색선전 및 페이크 뉴스 확산

흑색선전이나 페이크 뉴스는 대부분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또는 특정기업의 영업력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허위 정보가 범람할

6) 박수찬, “김정은 손에 들어간 ‘김정은 참수계획’”, 『조선일보』, 2017.10.10.

경우 사회 정보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동시에 국가 시스템이나 공적 신뢰도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정치상황을 불신하게 되어 냉소적인 시각이 형성되며, 정치 참여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게 된다. 허위정보는 사회 내부에서 자생 유포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를 지원하거나 사주해 형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북한은 국내 주요 정치행사 및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 마다 남남갈등과 사회혼란을 유도하려는 저의에서 반정부 및 반사회적인 흑색선전과 페이크(가짜) 뉴스를 양산하여 유포해 오고 있다. 2017년 3월 북한 ‘우리민족끼리’는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자 “○○○과 수하줄개들이 저마끔 피대를 세워가며 동족대결 나발질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 잔당들을 력사의 무덤 속에 처박아야 할 것”이라며 사회 분열을 선동했다. 또한 일부 국내 사이트에서 이를 확산시키면서 사이버상 여론이 양분되는 갈등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5월에 갑자기 실시된 대선 기간 중에도 북한의 여론 영향 공작이 여전히 사이버 공간에 나타났다. 선거를 전후해서는 모 정당 홈페이지가 해킹 공격에 의해 변조되는 사고가 있었으며, 특정후보를 사칭한 피싱 공격과 악성코드가 포함된 사칭 이메일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북한과 국내외 과격 세력들이 흑색선전과 허위뉴스를 양산하고, 과도한 상대진영 비방으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주력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진영간 대결과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의 대남 맞춤형 사이버 공격 지속 자행

2017년 11월 1일에는 국내 보수성향 단체장들에게 “여러 단체장님들과 애국 시민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미흡한 대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었다”며, “시행령 개정 및 북한 인권재단 설립 작업도 마무리 됐으니 단체장 연석회의를 열고 논의하자”는 내용의 이메일이 발송되었다. 송신자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 이 이메일에는 한글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첨부된 그림이나 동영상을 클릭할 경우 악성 코드에 감염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었다. 국내 정치지형을 이용하여 안보 단체, 북한 인권운동가, 북한담당 기자, 탈북자 등 특정계층 인물을 겨냥하는 지능형 지속공격을 전개한 것이다. 최근에는 MS나 아래 한글 등 소프

트웨어에 악성코드 파일을 삽입시켜 놓고 사용자 클릭을 유도하여 시스템을 해킹하는 사회공학적 기법이 동원되고 있다.

불법 외화벌이 글로벌 해킹 강화로 대남 사이버 첩보전 등 주춤

한편,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로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불법 외화벌이를 위한 글로벌 해킹 공세를 강화하면서 대남 시스템 파괴나 주요 기간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테러 행각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과거에 국내 IT기업이나 방위산업체, 국방망을 공격하는데 동원됐던 북한의 악성코드가 ATM 해킹이나 보안수준이 낮은 해외 은행 공격 등에 동원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북한이 보여 왔던 사이버 첩보전이나 사이버 테러활동 보다는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사이버 범죄에 집중하는 양상이다.⁷⁾

우리나라를 겨냥한 중국 등 해외발 해킹 공격도 빈발

2017년 한해는 어느 해 보다도 해외에서 출발한 해킹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한 한 해였다. 지난 2월에는 아시아나 항공사 홈페이지에 ‘Kuroi’SH and Prosox’라고 자신을 소개한 해커가 침투하여 홈페이지 일부에서 접속장애가 발생하였다. 한편, 미국 사이버보안전문회사 파이어아이에 따르면 APT33⁸⁾이라는 이란 해킹집단이 지능형지속공격(APT, Advanced Persistent Attack) 기법으로 우리나라의 석유화학기업 등 6개 기업에 침투, 2016년 중반부터 2017년 8월까지 약 1년 동안 우리 기업들에게 사이버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난 5월에 ‘인터넷 나야나’ 사건을 겪은 후 일순간 한국이 글로벌 사이버 공격자들의 목표가 되는 현상도 발생했다. 6월에는 Armada Collective라는 국제 해커

7) 문종현, “2017년 실제 사례기반 APT 동향 분석”, 산업제어시스템 보안 컨퍼런스, 2017.8.19.

8) 파이어아이에 따르면, APT(지능형지속공격) 다음에 붙는 숫자는 국가의 지원(state-sponsored)을 받는 해킹집단을 구분하는 부호로, APT1은 중국의 61398부대, APT28과 APT29는 지난 미국 대선시 민주당을 해킹한 러시아 해킹그룹을 나타내며, APT30은 동남아시아를 무대로 활동 중인 중국 스파이 해킹그룹, APT32는 베트남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산업기밀 절취 해킹 그룹을 나타내는 것이다.

단체가 국내 금융권과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를 지불하지 않으면 대규모 DDoS 공격을 퍼붓겠다고 협박을 해 왔으나 이 해커단체의 실제 공격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2. 2018년 전망 : 평창 동계올림픽, 지방선거 등 국내외 행사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방해 공작 및 외화 詐取 활동 증가 예상

북한은 2018년도 사이버공간에서 종전과 같이 국가기밀 절취, 사회기간시설 공격 및 남남갈등 유도(심리전) 등과 같은 대남 사이버 침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이에 병행하여 보안취약성이 두드러지는 제3세계 국가 등을 대상으로 외화 절취를 노리는 사이버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월 평창 동계올림픽과 6.13 지방선거, 11월 인천에서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 등이 예정되어 있어 이러한 굵직굵직한 국내외 행사 공간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정국 혼란과 사회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대남 사이버 활동이 1년 내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평창 동계올림픽, 지방선거 등 국내외 행사에 북한의 사이버 방해 공격 기증 예상

2018년도에는 대내적으로 6월 13일 지방선거가 있고,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로 평창 동계올림픽(2018.2.9~2.29)과 OECD 세계포럼(2018.11.27.~11.29) 등이 예정되어 있다. 최근 개최된 국제 스포츠 행사, 특히 올림픽을 중심으로 사이버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디도스 공격이 발생하였고, 2016년 리오 하계올림픽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공격이 시도된 바 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은 세계 각국의 지도자와 선수들이 함께 하는 스포츠 축제로 과거 전례⁹⁾로 볼 때 북한이 대회를 무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물리적인 테러는 물론 올림픽 운영본부 시스템과 참가 선수단을 대상으로 사이버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여론의 주목도가 높은 올림픽이나 국제행

9) 북한은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 개최를 방해할 목적으로 1987년 11월 27일 민간항공기인 KAL 858기를 격추시켜 중동 근로자 등 115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항공 테러를 자행했다.

사시 경기장 안전을 해치거나 선수들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사이버공격을 감행함으로써 공격의 선전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한편, 개최국의 대외 이미지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11월 인천시에서 개최되는 OECD 세계포럼 등 국제 행사시 국제 반전단체의 시위 선동, 행사반대 여론 조성 및 대한민국의 국격 훼손을 목적으로 국내 웹사이트에서 사이버 선전·선동 활동과 여론몰이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활동에는 페이스북·트위터와 같은 사회관계망(SNS)이나 모바일 인터넷 공간에서 내국인의 신원을 도용하거나, 신분을 위장하는 수법을 활용할 공산이 크다.

6월 지방선거시 대남 사이버 선전 활동 격화 예상

그동안 북한이 우리의 대선·총선 및 지방선거 시기에 보여준 전례로 볼 때, 6.13 지방선거에서도 북한에 우호적 성향을 지닌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이버 영향 공작을 자행해 올 것이 분명하다. 이와 반대로 반북성향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사이버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선거캠프 해킹 등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한편, 선거결과에 대한 불신과 불복종 분위기 확산을 통해 남남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시기 동안에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과 선전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댓글전담팀’을 조직해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 활동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관계 긴장 속 대남·대미 위협 목적 북한發 사이버 공격 격화 전망

2017년은 북·미간 핵·미사일을 둘러싼 UN제재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에 격한 감정을 담은 말 전쟁(war of words)으로 한반도에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북한은 2018년을 김정은 정권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모든 인터넷 매체를 동원해서 김정은 체제 보위와 김정은 집권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사이버 심리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모든 남북대화 실패 원인을 우리정부의 지나친 대미 굴종적 자세에 기인한다고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면서, 우리 정부와 민심을 이반시키고 보수·진보 양 진영간 갈등을 부추켜서 북한 동조 내지 중북 사조 확산에 주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은 주로 대북정책 관련 고위인사, 군 고위층, 탈북인사 등 안보관련 업무 종사자를 겨냥해서 목표지향형(target-oriented) 사이버 공격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북관련 고급 군사기밀이나 안보정책을 탈취하기 위해 사이버 해킹과 국가기관 전산망 침투, DDoS 공격 등을 시도하고 나아가 고위 안보정책 담당자나 군 장성 등을 대상으로 지능형 지속위협공격(APT)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외화획득을 위한 글로벌 사이버 금융詐欺에 주력할 가능성 농후

북한은 2016년 이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자금 강도 행위 등 지속적인 사이버 범죄 행위로 국제금융결제시스템에서 퇴출되는 등 국제사회로부터 사이버공간의 불량국가(rogue state)로 이미 지목되었다. 하지만, 대외 자금줄이 차단된 북한으로서는 더욱 다양한 사이버 해킹조직과 더 많은 전문가들을 동원해 보안이 취약한 지역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금융사기 활동을 더 폭넓게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북한은 세계 각 지역에 수준 높은 전문해커를 파견하여 사이버 거점을 구축하고 추적이 어려우면서 손쉽게 거액을 절취할 수 있는 가상화폐 확보에 주력할 전망이다. “우리의 뛰어난 정보 전사들이 있는 한 그 어떤 제재에도 끄떡없다”고 큰소리치는 김정은이 불법 외화 획득을 위해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로 무장한 북한의 전사들을 대거 해외로 파견하고 이들의 활동을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남 사회기반시설 공격 예상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 사물인터넷(IoT) 상용화, 4차 산업 도래에 따른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가 실현됨에 따라 산업·민간 부문의 사이버 보안상 취약 구간이 사이버상에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취약한 사이버 공간 확대는 북한에게 손쉬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전 국민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바일 정보환경이나 기업의 산업통제시스템(ICS), CCTV 등 사물인터넷의 취약한 보안수준이 해커들의 공격 기회를 배가시켜 주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이 확산되면서 피싱·스미싱과 사회공학적 기법을 융·복합한 기법으로 보안수준이 낮은 민간기업과 개인을 겨냥한 북한의 사이버 침투 공세가 거세

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우리의 주요 사회기반시설이나 정부, 국방, 산업정보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악성 바이러스 유포, DDoS공격, 특정 단체나 특정 인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이버 침투를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지능형지속위협공격(APT) 등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국가 주요기밀을 절취하거나 시스템을 마비시켜 정상적인 국가 활동을 방해하는 기존의 공격 방식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등 해외發 사이버공격 가중 예상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이란 등이 북한과 연대하거나 혹은 중국 등이 독자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사이버보안 전문회사 파이어아이의 패트릭 월시(前 美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관) 부사장은 2017년 4월 국내 세미나에서 한국을 사이버 표적으로 삼는 국가로 중국을 지목 하면서, “중국은 자국의 이익과 최신 군사기술, 공산당 보호를 위해서 사이버공격을 감행한다”고 강조하며 “사이버보안은 안보 문제로 접근” 할 것을 제시했다. 중국은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은 북한을 외부 사이버세계와 연결시켜 주고 있는바,¹⁰⁾ 이는 중국이 소위 ‘황금방패’ 또는 金盾工程(Great Firewall of China, 방화장성)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사이버 감시 시스템으로 북한의 중국내 사이버 활동을 모두 들여다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중국은 북한 사이버 역량을 증진시키고 활동거점을 제공하는 등 북한의 사이버 대외활동의 중간 숙주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세를 우리에게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란 등이 북한과 연계해 우리나라를 사이버 공격할 공산도 크다. 레온 파네타 前 미 국방장관이 “우리는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과 이란 연합의 진주만공격(cyber pearl harbor)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이란이 2017년 국내 석유화학기업 사이버 침해와 같은 공격을 2018년에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10) 최근 러시아 통신사인 트랜스텔레콤이 대북 인터넷서비스를 개시하였다는 보도도 있었다. 「머니투데이」, 2017.10.28.

극단주의 테러리즘과 세계 그리고 한국

김상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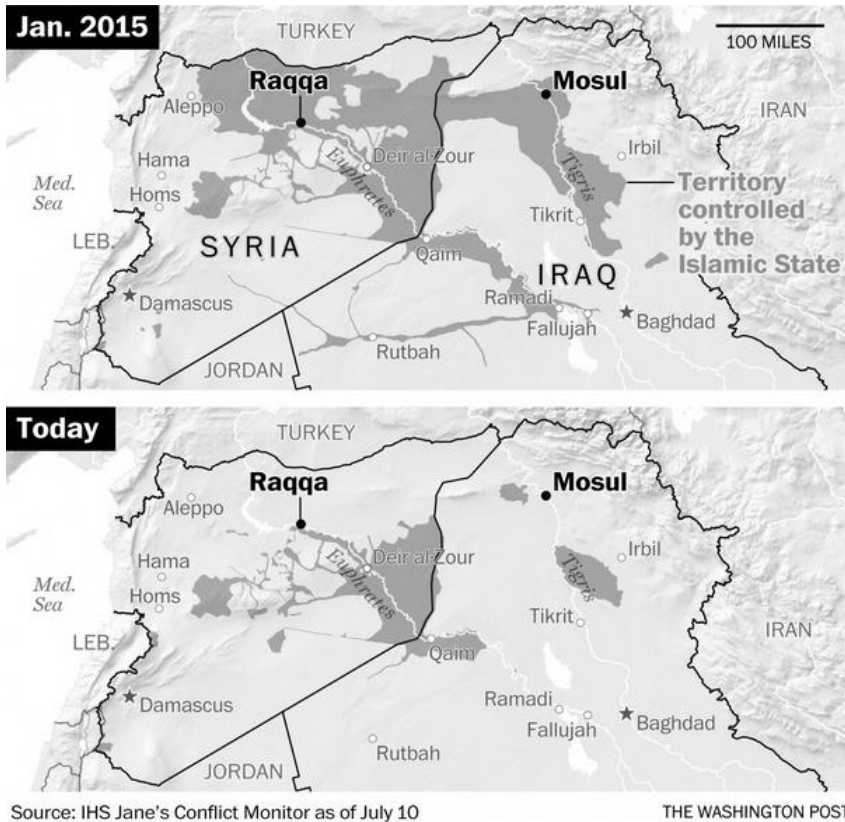
1. 2017년 평가 : ISIS 테러, 무슬림의 무슬림에 대한 테러, 그리고 북한의 테러에 세계가 경악

ISIS 쇠퇴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이 전 세계에서 기승

2017년 7월 이라크 모술 탈환 및 10월 시리아 라카 탈환으로 시리아와 이라크 영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던 ISIS(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의 세력은 크게 위축되었다. 하지만 ISIS구성원들은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의 민간인 집단으로 숨어들거나 유럽, 아프리카 등지로 조용히 침투하고 있는 가운데, ISIS의 재건은 미국 등 서방세계에 엄청난 도전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3년여 동안 ISIS는 시리아와 이라크 영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고, 유전 지역을 점령하여 군비를 자체 조달하면서, 민간인들에 대하여는 참수와 강간 등 무차별적 잔혹행위를 통해 공포정치를 행하였다. 최근의 ISIS의 패퇴는 이란, 러시아 등으로 하여금 앞을 다투어 이권쟁취에 나서게 하고 있으며 반ISIS진영에는 균열이 일어나고 기존의 분리주의적 행태가 되살아나고 있다. 이러한 제반 현상은 시일이 지남에 따라 극단주의 세력의 재결집을 획책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미국 등 반ISIS진영은 군사적 성공을 발판으로 정세 불안정을 해소해 나갈 거시적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와 이라크에서의 ISIS 점령지역 비교 : 2015년 1월과 2017년 7월〉



2017년에도 테러리즘은 전세계를 아우르는 주요 정세 쟁점이었으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수많은 테러공격이 자행되었다. 2017년 발생한 서방에 대한 주요 테러공격은 다음과 같다.

- 1월 1일 새해 첫날 축하행사가 열리던 터키 이스탄불의 레이나 나이트클럽에서 우크라이나 출신 압둘카디프 마샤리포프는 무차별 총격을 가하여 39명의 사망자와 70여 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고, 이후 ISIS는 이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 선언하였다.
- 3월 22일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옆 웨스트민스터 다리에서 무슬림 개종자인 카리드 마수드는 자동차로 불특정 행인들에 대한 테러공격을 가하여 5명의

사망자와 50여 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 4월 3일 러시아 세인트 페테르스부르크 지하철에서 우즈베키스탄계 러시아인 아크바존 자릴로프는 폭발물 공격을 감행하여 15명의 사망자와 45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 4월 7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ISIS와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우즈베키스탄계 난민신청자 라크맛 아킬로브는 트럭으로 불특정 행인들에 대한 테러공격을 가하여 5명의 사망자와 14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 4월 20일 프랑스 파리 샹제리제 거리에서 ISIS와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프랑스인 카림 쉐피는 경찰차에 총격을 가하여 1명의 경찰관을 사망케 하고 경찰관 2명과 관광객 1명 등 3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 5월 22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개최된 팝가수 아리아나 그란데의 공연이 끝난 후 리비아계 영국인 살만 아베디는 자살폭탄공격을 감행하여 22명의 사망자와 59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 6월 3일 영국 런던 런던교에서 ISIS와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파키스탄 및 모로코계 3인의 테러리스트들은 자동차로 불특정 행인들에 대한 테러공격을 가하고 인근 시장에서 칼로 사람들을 공격하여 8명의 사망자와 48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 8월 17일 ISIS와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일군의 테러리스트들은 바르셀로나에서 자동차로 불특정 행인들에 대한 테러공격을 가하여 13명의 사망자와 130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 10월 31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우즈베키스탄계 영주권자인 사이폴로 사이포프는 트럭으로 불특정 행인과 사이클리스트들에게 테러공격을 가하여 8명의 사망자와 12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 12월 11일 뉴욕 지하철역에서 방글라데시 출신 미국 영주권자 아카예드 올라는 사제폭탄을 터뜨려 자신을 포함한 네 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이상의 10건의 주요 테러공격의 양상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공격이 ISIS 등 이슬람 극단주의에 추종하는 자생적 테러리스트(‘외로운 늑대’)에 의해 자행되었고, 특히 그 구체적 범행수단으로서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트럭 등

차량을 사용하여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vehicle ramming’(또는 ‘running down’)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무슬림에 의한 무슬림에 대한 테러가 非무슬림에 대한 테러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실정

미국 국무성의 연간 테러리즘 보고서가 자주 인용하는 테러리즘 관련 START 데이터베이스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이후 2016년까지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테러공격의 85%는 이슬람 국가에서 발발하였으며, 이라크-시리아-아프가니스탄 3개국에서 발생한 테러공격의 비율은 전세계에서 발발한 테러공격의 37%이고, 극단주의 테러리즘을 대표하는 ISIS, 알 카에다, 알 누스라, 탈레반 등에 의한 테러공격은 전체 테러공격의 17%를 차지할 뿐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주요 테러단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나, 그들에 대한 대테러 작전의 성공이 전체 테러리즘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는 존재하지 않으나, 관련 여론조사들은 일관되게 무슬림의 대다수는 이슬람 극단주의를 지지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서방 국가들에 거주하는 젊은 무슬림의 대다수도 ‘외국인 전사(foreign fighters)’로 이슬람 극단주의의 일원이 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여론조사는 무슬림중 17%정도만이 ISIS의 ‘외국인 전사’로 지원하는 무슬림 젊은이들의 동기로 ‘종교’를 들었다는 점인데, 22%는 실업/빈곤 등 경제적 동기를 그리고 18%는 ISIS에 의한 세뇌와 선전/선동을 외국인 전사로 지원하는 주요 동기로 생각했다.

비록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발한 테러공격에 의한 사망자와 부상자들의 숫자를 무시할 수는 없으나, 이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테러공격 피해자들의 숫자에 비교하면 극히 적은 숫자이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총 658명의 사람들이 테러로 사망하였으나, 대다수가 이슬람 국가들인 여타 지역에서의 테러공격에 의한 사망자의 총수는 이의 43배인 28,031명이었다. 이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이 비무슬림들을 적대시하는 것이 상으로 무슬림들도 적극적 공격대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슬람 극단주

의자들 중 상당수는 무슬림이지만 종교적으로 철저하지 못하고, 서구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교도들과 마찬가지로 적대시하는데, 2000년대 중반 서구의 이교도들을 우선적 공격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오사마 빈 라덴의 주장에 대하여 알 자카위는 먼저 내부의 위선적 무슬림들을 척결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미국, 김정남 암살 사건 등을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2008년 미국은 이전 6년간 북한에 의한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지원이 없었음과 테러리즘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지원도 하지 않았다는 북한의 확약에 근거하여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배제하였다. 2017년 5월 미국은 Arms Export and Control Act, Section 40A와 관련하여 북한이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전적으로 협력하지 않는(not cooperating fully)” 국가임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미국 국무부가 시행한 북한이 미국의 대테러 활동에 협력하고 있는 전반적 수준에 대한 검토에 기반을 두어 내려졌다.

1989년 국제적 돈세탁, 테러리즘에 대한 자금지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간협의체인 Financial Action Task Force(FATF)는 2017년 11월 특히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북한의 불법적 재정활동을 막기 위한 적극적 대처를 회원국들에 촉구하였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11월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2017년 세계적인 뉴스거리였던 말레이시아에서의 김정남 독살과 미국 대학생 오토 웹비어 사망사건이 결정적 촉매가 된 것으로 보이며,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기간의 종말을 확인한 상징적 사건이라 하겠다. 금번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미국 국내에 대하여, 그리고 중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에 대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노선을 재확인해주는 큰 선언적 의미가 있으며, 미국 국내 테러방지법을 통해 북한의 외교적 고립과 자금차단을 제고시키는 위력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토 웹비어 사건과 함께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의 김정남 독살 사건은 전세계에 테러국가로서의 북한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각인시킨 사건이었다. 특히 두 명의 동남아 여성을 고용하여 백주대낮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국제공항 청사 내에서 가공할 만한 화학무기 VX를 사용하여 시행된 이 무모한 테러공격

은 북한 정권의 허황됨과 무도함을 만천하에 폭로하였고, 말레이시아 당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세안 국가들에게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든 일대 사건이 되었다.

2. 2018년 전망 : ISIS 쇠퇴가 이슬람 테러리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새로운 형태의 테러를 확산할 가능성 농후

ISIS 없는 시리아와 이라크 : 그 공백의 위험성

2016년 시리아와 이라크에서의 성공적인 ISIS격퇴작전에도 불구하고, 동 지역의 방위와 안전을 위한 미국 등 서방세계의 거시적 전략은 보이지 않고 있다. ISIS 등 주요 테러단체 격퇴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테러리스트들은 잔존할 것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통치기구 확립과 경제발전은 쉽지 않을 것이며, 종족·종파간 대립은 계속되고, 러시아, 터키 등 외부세력들은 서로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극단주의 테러집단 격퇴 후 유효적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거시적 전략의 부재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예멘, 이집트,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의 경우 더욱 더 우려스러운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2017년 11월 24일 이집트 시나이 반도 수피교 사원에 대한 테러공격은 정부의 통제가 제대로 미치지 않는 이집트, 리비아 등 특히 북아프리카의 힘의 공백 지역을 시리아와 이라크 상실 후의 새로운 이슬람 제국 본거지로 건설하려는 ISIS의 새로운 전략의 징표일 수 있다. 대테러 활동을 위한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서방 군사력 증강은 기존 민간구호단체 등의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해당 지역의 경제, 교육, 위생 등 제반생활여건 재건 활동에 타격을 가하게 되고, 이는 극단주의 테러리즘이 발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게 되는 악순환은 정치, 경제, 안보 영역을 통괄하는 거시적 전략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단순한 테러수법을 이용한 ISIS 추종 자생적 테러리스트 유형 테러가 확산될 전망

2017년 시리아와 이라크에서의 패퇴에도 불구하고 ISIS는 계속적 위협으로 존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ISIS의 세력축소가 이슬람 테러리즘의 감소 또는

이슬람 테러 문제의 해결로 나아가기 보다는 더 복잡하고 새로운 형태의 극단주의 테러가 세계적으로 심화·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ISIS는 아직도 여러 테러단체들과 외로운 늑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세계 각지에서 계속 테러공격을 수행할 것으로 예견된다. 주목할 점은 그러한 ISIS연계집단들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의 ISIS 자체에 의한 테러공격보다 더 많은 수의 테러공격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최근 들어 더욱 더 트럭 등 자동차나 칼 등 아주 단순한 테러수단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각국의 정보기관들의 사전 정보 수집을 쉽게 피해갈 수 있는 매우 단순한 공격방법으로서 매우 염려스러운 경향이라 할 것이다. 특히 자동차로 보행자들을 무차별 공격하는 테러방법은 흔히 행해지고 있는데, 2017년 유럽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한 테러공격이 8건 발생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2018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가 ISIS의 새로운 근거지로 부상

시리아와 이라크의 지리적 세력기반의 대부분을 잃은 ISIS의 현 상황은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활로를 모색케 할 것인데, 특히 빈곤, 부패 그리고 통치체계의 취약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은 ISIS의 조직정비 및 활동재개를 위한 새로운 근거지가 될 위험에 처해있다고 평가된다. ISIS는 이미 나이지리아의 보코 하람으로부터 충성을 서약 받았으며, 이 나라는 “Islamic State in West Africa Province”라고 칭해지고 있다. 또한 ISIS는 “Islamic State in the Greater Sahara”도 설립하였는데, 이 단체는 부르키나 파소와 니제르에서의 테러공격이 자신들이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ISIS의 활동은 튀니지, 리비아 그리고 이집트 등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도 계속되어지고 있다. 특히 수많은 무슬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정부의 통제가 취약한 지역의 면적이 광범위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로의 ISIS 잔존 세력의 진출 및 교두보 확보 시도 등의 위험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알 케이다 또한 사하라 이남지역의 니제르, 부르키나 파소, 나이지리아 등으로의 활동을 격화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ISIS 연계세력들 : 2015년 10월〉

Islamic State affiliates outside Iraq and Syria



출처 : Washington Post

ISIS 쇠퇴로 발생한 시리아에서의 공백은 이란의 세력 확대로 이어질 전망

시리아에서 ISIS가 패퇴함에 따라 생긴 공백은 이란과 그 실질적 하부조직인 헤즈볼라의 세력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란은 시리아 내전에 있어서 아사드 정권과 시아파 민병대에게 무기 등을 지원해 왔으며, 특히 헤즈볼라를 통한 전쟁수행은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의 존립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큰 그림으로 볼 때, 2018년 시리아의 정치적 판도는 시아파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시아파 대부 이란 및 러시아, 이라크, 헤즈볼라 그리고 수니파 반군을 지원하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양대 세력 간 경쟁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특히 시아파를 대표하는 이란과 수니파를 대표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사이

의 알력 증대는 시리아를 넘어 중동지역 전체의 정치적 판도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다.

외로운 늑대와 귀향하는 외국인 전사(foreign fighters)들의 위험성

서구사회에서의 잠재적 테러공격자들의 색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각국 정보기관의 레이더 밖에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정보기관 MI5는 영국 국내에 존재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23,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 중 3,000명은 현실적 위협이 되는 것으로 분류하고 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외국인 전사(foreign fighters)’의 위험성이 주목되는데, 2017년 한 해 동안 약 850명의 영국 출신 외국인 전사들이 ISIS, 알 누스라 등의 테러단체에 가입하여 시리아 또는 이라크에서 활동하였다. 영국에서는 귀환한 외국인 전사 8명 중 1명 꼴로 체포 또는 형사사법절차의 대상이 된 것으로 추산된다. ISIS등의 체계적인 전투원 훈련시스템을 거치고 고국으로 귀환한 외국인 전사들은 서구 국가들에게 추가적인 테러공격의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면서 극단주의 테러 위험성 더욱 가중

2017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한 사건은 2018년 중동 전체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 및 미국 대사관 이전 지시로 인해 가자지구를 통치하면서도 최근 세력 위축으로 궁지에 몰려 있던 팔레스타인 테러단체 하마스, 레바논을 기반으로 이란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세력을 증강해온 헤즈볼라 그리고 알 케이다 아리비아 반도 지부(AQAP) 등 테러집단들의 준동이 2018년에는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관련 선언 직후 하마스는 반이스라엘 민중봉기인 ‘인티파다’의 시작을 선포했으며, AQAP는 이슬람교도들에게 무장단체에 대한 자금과 무기 지원을 촉구하였다. 2018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집단들은 트럼프의 선언을 기회로 이슬람교인 전체의 반미·반이스라엘 항전을 독려할 것이며, 전세계에 산재한 이슬람 다와(Dawa) 네트워크를 통한 군비 및 전사 모집

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미국이 가장 위험한 테러단체중 하나로 지정한 AQAP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은 메카를 빼앗길 것”이라며 전세계 이슬람교도들 선동하고 있다.

국내 외래체류자들과 한국사회의 포용적 대응 필요성

현재 서방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외로운 늑대 유형의 테러리스트들 중에는 서구 사회로 이주한 무슬림계 이민 2세와 3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급진주의 테러단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극단주의 테러집단의 선동메시지를 스스로 습득, 체화한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이다. 이들은 이민 1세대 부모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사회의 보이지 않는 사회적 차별장벽으로 인해 서방 각국의 진정한 일원이 되지 못하는 것에 실망하고 심리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일종의 정신적 돌파구로서 이슬람 급진주의 테러 사상에 도취되고 있다. 이러한 서구의 예는 한국 내 외국인 무슬림의 숫자가 13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고,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에 영속적 또는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이들이 극단주의 테러리즘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을 일깨우고 있다. 정부와 사회단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등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이 시급하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테러센터와 국가정보원 산하 테러정보통합센터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2016년 제정된 현행 테러방지법은 국무총리실 소속 대테러센터로 하여금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실무 조정 등 대테러 관제탑의 역할을 하게하고, 국가정보원에게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추적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산하에 테러정보통합센터를 두고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분석 및 배포를 담당케 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는 국가 대테러업무에 있어 국무총리실에게 머리의 역할을 그리고 국가정보원에게 수족의 역할 맡기고 있는 바, 장래 원활하고 효율적인 대테러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양 기관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유기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테러방지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양 기관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 견지에서 양자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무적 미세조정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대테러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2015년 1월 발생한 프랑스 주간지 찰리 헤브도 사무실에 대한 테러공격 이후 유럽의 일치된 대테러 대항의지의 표현은 2016년 1월 유로폴(Europol) 산하 유럽대테러센터(ECTC)의 설립으로 이어졌고 이 기구는 EU 가입국간 대테러 정보공유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미국도 자국 내 국가정보국(DNI), 국토안보부(DHC), 법무부(DOJ), 출입국관리사무소(CBP), 해안경비대(CG),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대테러 정보 관련 기관 간 테러 정보공유의 원활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이러한 동향은 많은 테러공격을 경험한 양 지역 당국자들이 대테러 작전의 핵심 동력으로 관련 정보의 국내외 공유를 그 기본축으로 삼고 있는 것을 지시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테러센터,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 경찰, 군, 출입국관리소 등 행정기관들과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1조가 열거하고 있는 각종 전담조직들 상호간 및 국외 대테러 기관과의 원활한 정보공유 체계 확립을 위해 면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 중동에서 세력을 상실한 ISIS가 아프리카나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무슬림인구가 많고 상대적으로 사법체계가 취약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특히 아세안 국가들 및 국내 체류자가 많은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과의 대테러 정보공유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대형 건물 대피훈련 반복 시행 등 북한의 테러공격에 구체적으로 대비

북한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상태와 경제재제로 인한 난국을 타개할 목적으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테러를 도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테러도발은 국가기간망·공공망·시설망 대상 사이버 테러 시도, 해외체류 인사 납치, 국내 불순세력과 연계한 기간망 시설 테러 공격, 항공기·선박에 대한 공격, 생화학 물질을 사용한 공격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거대 빌딩, 스타디움, 대형 쇼핑몰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한 테러공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알 케이다의 경우 1993년과 2001년 계속적으로 뉴욕의 랜드마크인 세계무역센터 빌딩에 대한 공격에 나섰는데, 동 빌딩 보안팀은 1993년 공격 후 향후 비슷한 공격에 대비하여 수천 명의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대피훈련을 수행하고 대피계단의 전등 및 배기 시설 업그레이드에 나선 바, 1993년 모든 입주자들의 대피에 7시간이 걸렸던 것에 비해 2001년 9.11 때에는 1시간 이내에 모든 입주자들을 대피시킨 성과를 거두었다. 국내에서도 거대 빌딩 등 잠재적 테러목적물들에 대한 지속적 대피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인다.